2012년도 제23회 감정평가사 제1차 국가자격시험 문제지

교시	형별	시험과목	시험시간	수험번호	성명
1교시	A	1 민법 2 경제원론	80분		

< 유 의 사 항 >

○ 문제지 인쇄상태 및 매수 확인
○ 문제지에 수험번호와 성명 기재
○ 답안카드에 문제지 형별 기재 및 마킹
○ 시험종료시 답안카드 즉시 제출(미제출시 시험무효)
○ 의견제시에 대한 개별회신은 하지 않으며, 최종 정답 발표로 갈음함
○ 시험시행계획 공고일(2012.3.30) 현재 시행되는 법령, 회계처리 등을 적용(회계처리 등과 관련된 시험문제는 한국채택국제회계기준(K-IFRS) 적용)
○ 신분증 미지참자 및 사진상이자는 지정기일까지 공단 방문 후 신분확인을 받아야 함
○ 시험시간 중에는 중도퇴실이 불가하며, 시험포기자의 경우에는「시험포기각서」를 제출하시고 퇴실하여야 하며, 퇴실 후 재입실 불가(단, 설사, 배탈 등 긴급시 퇴실 가능하나 재입실 불가 및 해당교시 종료시까지 시험본부 대기)
○ 기타 공고된 수험자 유의사항 미준수시 그에 따른 책임은 수험자에게 있음

민 법

1. 물건에 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다툼이 있으면 판례에 의함)

① 완공된 신축 건물이라도 보존등기 전에는 소유권이 인정되지 않는다.
② 1필의 토지 일부에는 지상권을 설정할 수 없다.
③ 등기된 입목의 소유자는 입목을 토지와 분리하여 양도할 수 있고 이를 저당권의 목적으로 할 수 있다.
④ 권한 없이 타인의 토지에 농작물을 심은 경우, 수확기에 이른 농작물의 소유권은 토지 소유자에게 귀속된다.
⑤ 주유소의 주유기는 주유소 건물에 부합되어 종물로 볼 수 없다.

2. 기간의 계산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다툼이 있으면 판례에 의함)

① 사원총회를 1주일 전에 통지하여야 하는 경우, 5월 25일 총회 예정일을 기준으로 늦어도 5월 17일 24시까지는 사원들에게 소집통지를 발송하여야 한다.
② 정년이 만 60세인 경우, 1952년 7월 8일 오후 3시에 출생한 직원은 2012년 7월 8일 오전 0시에 정년을 맞이한다.
③ 1981년 5월 20일 오전 11시에 출생한 자는 2001년 5월 21일 오전 0시에 성년으로 된다.
④ 기간의 말일이 2012년 3월 10일 토요일인 경우에는 2012년 3월 12일 월요일로 만료된다.
⑤ 다가오는 2012년 7월 7일부터 1주일까지라고 하면, 2012년 7월 13일 24시에 만료된다.

3. 조건과 기한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다툼이 있으면 판례에 의함)

① 기성조건이 정지조건이면 조건 없는 법률행위가 되고, 해제조건이면 그 법률행위는 무효이다.
② 조건의 성취로 인하여 불이익을 받을 당사자가 신의성실에 반하여 조건의 성취를 방해한 경우, 조건이 성취된 것으로 의제되는 시점은 방해행위 시점이다.
③ 기한이익의 상실약정이 있는 경우,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채권자가 통지나 청구 등을 하여야만 채무자의 기한이익이 상실된다.
④ 부첩관계 종료를 해제조건으로 하여 부동산을 증여한 경우, 증여계약은 무효이다.
⑤ 조건성취의 효력은 조건이 성취한 때로부터 생기고 소급하지 않는 것이 원칙이다.

4. 소멸시효와 제척기간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다툼이 있으면 판례에 의함)

① 명의신탁 해지를 원인으로 하는 소유권에 기한 이전등기청구권은 소멸시효의 대상이 되지 않는다.

② 점유자가 점유를 계속하는 동안에는 취득시효완성을 원인으로 한 소유권이전등기청구권은 소멸시효가 진행되지 않는다.

③ 공유물분할청구권은 공유관계가 존속하는 한 그 분할청구권만이 독립하여 시효로 소멸될 수 없다.

④ 제척기간을 정한 형성권의 경우, 그 행사로 인하여 발생하는 채권도 형성권의 제척기간 내에 행사하여야 한다.

⑤ 소멸시효의 중단에 관한 규정은 취득시효에 의한 소유권취득기간에 준용한다.

5. 소멸시효 기간의 기산점에 관한 내용으로 옳지 않은 것은? (다툼이 있으면 판례에 의함)

① 동시이행의 항변권이 붙어 있는 채권은 이행기가 도래한 때부터 소멸시효가 진행한다.

② 부작위를 목적으로 하는 채권은 위반행위를 한 때로부터 소멸시효가 진행한다.

③ 불확정기한부 채권은 채무자가 그 기한의 도래를 안 때부터 소멸시효가 진행한다.

④ 기한을 정하고 있지 않은 채권은 그 채권이 발생한 때부터 소멸시효가 진행한다.

⑤ 이행불능으로 인한 전보배상청구권의 소멸시효는 이행불능시부터 진행된다.

6. 무효와 취소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다툼이 있으면 판례에 의함)

① 의사무능력으로 인한 무효행위의 추인은 그 무효원인이 소멸한 후에 하여야 효력이 있다.

② 취소권 행사기간은 제척기간이므로 당사자의 주장에 관계없이 법원이 당연히 조사하여 고려하여야 한다.

③ 미성년자는 성년자가 된 후에야 단독으로 추인할 수 있다.

④ 하나의 계약이라 할지라도 가분성을 가지거나 그 목적물의 일부가 특정될 수 있다면 그 일부만의 취소도 가능하다.

⑤ 무효인 법률행위는 추인에 의해 소급하여 유효한 법률행위로 전환된다.

7. 부동산 취득시효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다툼이 있으면 판례에 의함)

① 중복등기 중 선등기가 원인무효가 아니어서 후등기가 무효로 된 경우, 말소되지 않은 후등기를 근거로 등기부취득시효의 완성을 주장할 수 없다.

② 시효기간 만료 전에 제3자가 등기명의를 넘겨받은 경우, 점유자는 시효기간완성 후에 그 제3자를 상대로 취득시효를 원인으로 소유권이전등기를 청구할 수 있다.

③ 점유자가 취득시효를 주장하는 경우, 자주점유 여부에 관한 증명책임은 취득시효의 성립을 부정하는 자에게 있다.

④ 자기 소유의 부동산은 취득시효의 대상이 될 수 없다.

⑤ 점유자가 점유 개시 당시에 소유권 취득의 원인이 될 수 있는 법률행위가 없다는 사실을 알면서 타인 소유의 부동산을 무단점유한 경우, 취득시효는 인정되지 않는다.

8. 전세권에 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다툼이 있으면 판례에 의함)

① 전전세권의 설정에는 원전세권자와 전전세권자 사이의 전전세권 설정의 합의 및 등기와 원전세권설정자의 동의를 요한다.

② 구분등기 되지 않은 건물 일부의 전세권자는 전세권의 목적물이 아닌 나머지 건물부분에 대해서는 전세권에 기하여 경매신청을 할 수 없으나 우선변제권은 가진다.

③ 전세권이 법정 갱신된 경우 갱신에 따른 등기를 하지 않으면, 전세권자는 그 목적물을 취득한 제3자에 대하여 갱신된 권리를 주장하지 못한다.

④ 전세금을 현실적으로 지급하지 아니하고 기존의 채권으로 갈음하기로 한 경우에는 전세권이 성립될 수 없다.

⑤ 전세권 존속기간이 만료된 경우 전세권의 용익물권적 권능은 소멸되고 전세금반환채권은 무담보채권으로 전환된다.

9. X 부동산을 甲으로부터 매수한 乙은 이전등기를 경료하지 않은 채 丙에게 그 부동산을 매도하였고 현재 丙은 이를 점유하여 사용·수익하고 있다. 다음 설명 중 옳지 않은 것은? (다툼이 있으면 판례에 의함)

① 3자간 중간생략등기의 합의가 있더라도 甲과 丙 사이에 토지거래허가를 받아 甲에서 丙 앞으로 직접 경료된 소유권이전등기는 무효이다.

② 甲과 丙 사이에 물권적 합의가 없더라도 중간생략등기에 관한 3자 합의가 있다면, 丙은 甲에 대하여 직접 자신의 명의로 이전등기를 청구할 수 있다.

③ 중간생략등기의 합의가 있은 후 甲과 乙 사이에 매매대금을 인상하는 약정이 체결된 경우, 인상된 매매대금이 지급되지 않았음을 이유로 甲은 丙에 대한 소유권이전등기의무의 이행을 거절할 수 없다.

④ 이미 甲에서 丙으로 소유권이전등기가 경료된 경우, 중간생략등기에 관한 합의가 없었다는 이유만으로는 중간생략등기가 무효라고 할 수 없다.

⑤ 乙의 甲에 대한 이전등기청구권은 중간생략등기의 합의가 있는 경우에도 소멸되지 않는다.

10. 혼동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다툼이 있으면 판례에 의함)

① 乙 소유의 토지에 지상권을 취득한 甲이 그 지상권을 목적으로 하는 저당권을 丙에게 설정한 후 甲이 토지의 소유권을 취득하였다면, 甲의 지상권은 소멸하지 않는다.

② 乙 소유의 토지에 지상권을 취득한 甲이 그 지상권을 목적으로 하는 저당권을 丙에게 설정한 후에 甲이 그 저당권을 취득한다면, 그 저당권은 소멸한다.

③ 甲 소유의 건물에 乙의 대항력 있는 임차권이 성립한 후 丙이 그 건물에 저당권을 취득하였다면, 후일 乙이 甲으로부터 그 건물을 매수하여도 임차권은 소멸하지 않는다.

④ 丙 소유의 토지에 甲의 1순위저당권과 乙의 2순위저당권이 설정되어 있을 때, 甲이 그 토지를 매수하여 소유권을 취득하였고 甲의 피담보채권이 존속할 경우에는 乙의 저당권이 1순위가 된다.

⑤ 근저당권자 甲이 근저당목적물인 건물을 매수한 후 그 소유권취득이 무효로 밝혀지면, 혼동으로 소멸하였던 근저당권은 부활한다.

11. 유치권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다툼이 있으면 판례에 의함)

① 유치권자는 피담보채권 전부의 변제를 받을 때까지 경매절차의 매수인에 대하여도 목적물의 인도를 거절할 수 있다.

② 유치권자의 점유는 직접점유이든 간접점유이든 관계가 없으나, 그 직접점유자가 채무자인 경우에는 유치권의 요건으로서의 점유에 해당되지 않는다.

③ 유치권을 행사하고 있는 동안에는 피담보채권의 소멸시효는 진행하지 않는다.

④ 건물의 임차인은 임대차 존속기간 중 지출한 유익비의 상환을 받을 때까지 유치권을 행사할 수 있다.

⑤ 건축업자가 건물을 점유하기 전에 건물공사로 취득한 건축비채권이라도 그 후 그 건물을 점유하였다면 유치권은 성립한다.

12. 신의성실의 원칙과 권리남용 금지원칙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다툼이 있으면 판례에 의함)

① 강행법규 위반임을 알면서 계약을 체결한 후 이를 이유로 계약의 무효를 주장하는 것은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신의칙에 반한다.

② 실효의 원칙을 적용하기 위해서는 의무자인 상대방이 더 이상 권리자가 그 권리를 행사하지 아니할 것으로 믿을 만한 정당한 사유가 있어야 한다.

③ 채무자가 채권자의 시효중단을 현저히 곤란하게 하여 채권자가 시효중단을 주장할 수 없는 경우, 채무자가 시효의 완성을 주장하는 것은 신의칙상 허용되지 않는다.

④ 법정지상권을 가진 건물소유자로부터 건물을 양수하면서 법정지상권까지 양도받기로 한 자에 대하여 대지소유자가 그 소유권에 기하여 건물철거를 청구하는 것은 허용되지 않는다.

⑤ 권리남용의 해당 여부는 당사자의 주장이 없더라도 법원이 직권으로 판단할 수 있다.

13. 만 15세의 미성년자 甲은 친권자 丙의 동의를 얻어 자신의 소유인 X 토지를 乙에게 매도하는 경우, 다음 설명 중 옳은 것을 모두 고른 것은? (다툼이 있으면 판례에 의함)

ㄱ. 丙의 동의는 명시적으로 뿐만 아니라 묵시적으로도 가능하다. ㄴ. 丙이 동의를 할 때에는 친족회의 동의를 필요로 한다. ㄷ. 丙의 동의는 甲의 법률행위 이전에 하여야 하고 이후에 하는 동의는 효력이 없다. ㄹ. 甲이 丙의 동의가 있는 것처럼 보이기 위하여 소극적인 사술을 쓴 것만으로도 취소권이 배제된다. ㅁ. X 토지가 甲 명의의 매매계약서에 근거하여 乙에게 소유권이전등기가 경료되었다면, 丙의 동의 여부와 관계없이 적법한 등기로 추정된다.

① ㄱ, ㄹ ② ㄱ, ㅁ ③ ㄴ, ㄷ
④ ㄴ, ㄹ ⑤ ㄷ, ㅁ

14. 상대방 없는 단독행위인 것은?

① 소유권의 포기 ② 해제
③ 동의 ④ 추인
⑤ 채무면제

15. 甲은 乙에게 500만 원을 빌리면서 800만 원 상당의 명품시계에 질권을 설정하였다. 그 후 乙은 丙으로부터 300만 원을 빌리면서 甲의 시계에 관하여 丙에게 다시 질권을 설정하여 주고 그 사실을 甲에게 통지하였다. 다음 설명 중 甲이 질권의 소멸을 주장하여 시계를 돌려받을 수 있는 경우는?

① 甲이 乙에게 500만 원을 변제한 경우
② 甲이 丙에게 300만 원을 변제한 경우
③ 甲이 丙에게 200만 원을 변제한 경우
④ 甲이 丙에게 300만 원을 변제하고 乙에게 200만 원을 변제한 경우
⑤ 甲이 丙에게 200만 원을 변제하고 乙에게 300만 원을 변제한 경우

16. 통정허위표시에 있어 선의의 제3자가 될 수 없는 자는? (다툼이 있으면 판례에 의함)

① 가장채권 양수인의 포괄승계인
② 가장행위에 기한 저당권부 채권을 가압류한 자
③ 가장양수인으로부터 매매계약에 의한 소유권이전등기청구권 보전을 위한 가등기를 경료받은 자
④ 가장저당권의 실행으로 경락받은 자
⑤ 가장양수인으로부터 목적부동산을 전득한 자

17. 의사표시의 효력발생시기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다툼이 있으면 판례에 의함)

① 무권대리인의 상대방이 상당한 기간을 정하여 본인에게 추인 여부를 최고한 경우, 본인이 그 기간 내에 확답을 발하지 않으면 추인을 거절한 것으로 본다.
② 공시송달을 함에 있어서 표의자는 상대방을 알지 못하거나 그 소재를 알지 못하는 데 과실이 없어야 한다.
③ 미성년자에 대한 의사표시의 도달을 법정대리인이 안 후에는 표의자가 의사표시의 도달을 주장할 수 있다.
④ 보통우편의 방법으로 의사표시가 발송된 경우에는 그 의사표시가 상당한 기간 내에 도달한 것으로 추정된다.
⑤ 승낙의 의사표시를 발송한 후 승낙자가 사망하더라도 승낙의 효력에는 영향을 미치지 않는다.

18. 불공정한 법률행위에 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다툼이 있으면 판례에 의함)

① 매도인이 불공정한 법률행위를 이유로 계약의 무효를 주장하는 경우, 매도인은 매매가격의 현저한 불균형을 증명하면 족하고, 매도인의 경솔 등의 여부는 매수인이 증명하여야 한다.
② 불공정한 법률행위가 대리인에 의하여 이루어진 경우, 궁박·경솔은 본인을 기준으로 하고 무경험은 대리인을 기준으로 판단한다.
③ 불공정한 법률행위가 성립하기 위해서는 폭리자에게 피해 당사자의 궁박·경솔 또는 무경험에 대한 인식과 이를 이용하려는 의사가 있어야 한다.
④ 불공정한 법률행위로서 무효인 경우에도 당사자가 그 무효임을 알고 추인한 때에는 새로운 법률행위로 본다.
⑤ 불공정한 법률행위에 있어서 급부와 반대급부 사이의 현저한 불균형이 있으면 이는 당사자의 궁박·경솔 또는 무경험에 의한 것으로 추정된다.

19. 甲은 乙을 강박하여 乙 소유의 X 토지를 무상으로 자신에게 증여하도록 강요하였다. 이에 乙은 자신의 재산을 甲에게 강제로 빼앗긴다는 인식을 하였지만 그래도 어쩔 수 없다고 생각하면서 X 토지를 무상으로 증여하였다. 다음 설명 중 옳은 것은? (다툼이 있으면 판례에 의함)

① 乙의 증여의 의사표시는 비진의 의사표시에 해당한다.
② 甲의 불법적인 해악의 고지로 말미암아 乙이 공포심을 느꼈다면 그것이 乙의 의사결정에 큰 영향을 주지 않았더라도 乙의 증여행위는 무효가 된다.
③ 불공정한 법률행위를 이유로 乙의 증여행위를 무효로 할 수 없다.
④ 乙은 강박에 의한 의사표시를 이유로 증여행위를 취소할 수 없다.
⑤ 乙의 증여의 의사표시는 통정허위표시에 해당하여 무효이다.

20. 법률행위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다툼이 있으면 판례에 의함)

① 착오에 의한 의사표시의 취소권은 형성권이다.
② 복대리에 대해서는 표현대리가 성립되지 않는다.
③ 대리인을 통한 계약체결시 의사표시의 하자 여부는 대리인을 표준으로 결정한다.
④ 대리인이 다수인 때에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각자가 본인을 대리한다.
⑤ 취소권자가 상대방으로부터 담보를 제공받은 경우 법정추인이 된다.

21. 착오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다툼이 있으면 판례에 의함)

① 동기의 착오를 이유로 계약을 취소하기 위해서는 그 동기가 상대방에게 표시되고 의사표시 내용의 중요부분으로 인정될 수 있어야 한다.
②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매매목적물의 시가는 의사표시 내용의 중요부분에 해당하므로 시가에 대한 착오를 이유로 매매계약을 취소할 수 있다.
③ 착오를 이유로 계약이 취소됨으로써 상대방이 손해를 입었더라도 상대방은 착오자에 대하여 불법행위를 원인으로 그 배상을 청구할 수는 없다.
④ 착오가 상대방의 기망에 의하여 유발된 경우에는 사기를 이유로 계약을 취소할 수 있다.
⑤ 상대방에 의하여 유발된 동기의 착오가 법률행위의 중요부분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계약을 취소할 수 있다.

22. 법률행위의 해석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다툼이 있으면 판례에 의함)

① 계약의 해석은 당사자가 그 표시행위에 부여한 객관적 의미를 명백하게 확정하는 것이다.
② 계약의 당사자가 누구인지는 그 계약에 관여한 당사자의 의사해석의 문제이다.
③ 진의 아닌 의사표시에 있어서 진의는 표의자가 진정으로 마음 속에서 바라는 사항을 의미한다.
④ 계약의 해석을 통하여 보충되는 당사자의 의사는 당사자의 주관적 의사가 아니라 거래관행이나 신의칙 등에 의하여 객관적으로 추인되는 의사를 의미한다.
⑤ 타인 명의로 계약을 체결하는 경우 계약을 체결한 자와 상대방의 의사가 일치한다면 그 일치된 의사대로 당사자를 확정하면 된다.

23. 乙은 대리권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甲의 대리인이라고 하면서 甲 소유의 X 토지를 丙에게 매도하는 계약을 체결하였다. 다음 설명 중 옳은 것은?

① 甲이 乙에 대하여 추인한 사실을 丙이 알았다고 하더라도 甲은 丙에 대하여 추인의 효과를 주장할 수 없다.
② 丙이 乙의 대리권 없음을 알고 있었다면, 丙은 甲에 대하여 추인 여부의 확답을 최고할 수 없다.
③ 丙은 乙의 대리권 없음을 알지 못한 데 대하여 과실이 있는 경우에도 乙에게 계약의 이행을 청구할 수 있다.
④ 丙이 乙의 대리권 없음을 알지 못한 경우에는 乙의 선택에 따라 계약의 이행을 청구할 수 있다.
⑤ 丙이 乙의 대리권 없음을 알지 못한 경우에는 계약을 철회할 수 있다.

24. 복대리권의 소멸원인으로 볼 수 없는 것은?

① 본인의 사망
② 본인의 파산
③ 복대리인의 금치산
④ 대리인의 대리권 소멸
⑤ 대리인의 복임행위 철회

25. 甲이 등기를 하여야 비로소 소유권을 취득하는 경우는? (다툼이 있으면 판례에 의함)

① 甲이 수용재결을 통해 토지를 취득한 경우
② 甲 소유의 건물에 임차인이 창고를 지어 부합된 경우
③ 저당권 실행을 위한 경매에서 매수인 甲이 매각대금을 완납한 경우
④ 乙이 건물을 신축한 후 사망하여 甲이 상속한 경우
⑤ 甲이 부동산을 20년간 평온·공연하게 소유의 의사로 점유하여 점유취득시효를 완성한 경우

26. 선의취득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다툼이 있으면 판례에 의함)

① 등록된 자동차는 선의취득의 대상이 아니다.
② 양수인의 선의·무과실의 기준시점은 물권행위가 완성된 때이다.
③ 점유개정에 의한 인도에 대하여는 선의취득이 인정되지 않는다.
④ 점유보조자가 본인의 의사에 반하여 본인의 물건을 처분하여 상대방이 선의취득한 경우에는 본인은 2년 내에 물건의 반환을 청구할 수 있다.
⑤ 선의취득이 유효하게 성립한 경우에는 취득자는 임의로 선의취득의 효과를 거부하고 종전 소유자에게 동산을 반환받아 갈 것을 요구할 수 없다.

27. 자주점유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다툼이 있으면 판례에 의함)

① 매도인에게 처분권이 없었다는 이유로 매매가 무효가 된 경우 그 사실을 알지 못한 매수인의 점유는 자주점유이다.
② 공유자 1인이 공유토지 전부를 점유하고 있는 경우,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다른 공유자의 지분비율 범위에 대해서는 타주점유에 해당한다.
③ 등기명의가 신탁되었다면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명의수탁자의 수탁부동산에 관한 점유는 타주점유이다.
④ 부동산을 타인에게 매도하여 소유권이전등기를 경료한 후 인도의무를 지고 있는 매도인의 점유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타주점유로 변경된다.
⑤ 매매대상 토지의 면적이 등기부상의 면적을 상당히 초과하더라도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초과부분에 대한 매수인의 점유는 자주점유이다.

28. 등기부상 甲 소유의 X 토지를 乙이 소유의 의사로 평온·공연하게 1989. 2. 1.부터 2012. 7. 1.까지 점유하고 있다. 다음 설명 중 옳지 않은 것은? (다툼이 있으면 판례에 의함)

① 2009. 3. 2. 甲이 丙에게 소유권이전등기 후 다시 20년이 경과하더라도 乙은 등기명의자인 丙에게 취득시효를 주장할 수 없다.
② 2012. 7. 1. 甲이 X 토지의 반환을 청구하는 경우, 乙은 등기 없이도 甲의 반환청구에 대항할 수 있다.
③ 甲은 乙에게 1989. 2. 1.부터 취득시효 완성시까지의 임료 상당액을 반환청구할 수 없다.
④ 2010. 3. 5. 甲이 丁에게 X 토지에 대한 저당권설정등기를 해준 경우,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저당권설정등기는 유효하다.
⑤ 1995. 5. 15. 甲이 戊에게 소유권이전등기를 해준 경우, 2012. 7. 1. 乙은 戊에 대하여 소유권이전등기를 청구할 수 있다.

29. 점유자와 회복자의 관계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다툼이 있으면 판례에 의함)

① 과실을 수취한 자가 선의의 점유자로 보호되기 위해서는 권원이 있다고 오신할만한 정당한 근거가 있어야 한다.
② 선의의 점유자가 직접 물건을 사용함으로써 얻은 이득은 과실이 아니므로 회복자에게 반환하여야 한다.
③ 악의의 점유자는 수취한 과실의 반환뿐만 아니라 자신의 책임있는 사유로 수취하지 못한 과실의 대가도 보상하여야 한다.
④ 선의의 타주점유자가 자신의 책임 있는 사유로 점유물을 멸실, 훼손하였다면 그로 인한 손해의 전부를 배상하여야 한다.
⑤ 점유자가 과실을 취득한 경우, 통상의 필요비는 반환을 청구할 수 없다.

30. 민법상 법인의 설립등기사항이 아닌 것은?

① 법인의 목적 ② 법인의 사무소
③ 자산의 총액 ④ 설립허가의 연월일
⑤ 감사의 성명과 주소

31. 공유물의 분할에 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다툼이 있으면 판례에 의함)

① 분할 협의가 성립된 경우에는 일부 공유자가 분할에 따른 이전등기에 협조하지 않더라도 공유물 분할의 소를 제기할 수 없다.

② 현물분할의 경우에는 공유자 전원에게 지분의 비율로 분할하고, 일부만을 공유로 남기는 방법은 허용되지 않는다.

③ 공유물분할은 재판상 분할을 원칙으로 한다.

④ 공유물의 분할시 각 공유자는 다른 공유자가 분할로 인하여 취득한 물건에 대하여 그 지분의 비율과 관계없이 공유물 전부에 대하여 매도인과 동일한 담보책임이 있다.

⑤ 재판상 분할에 의하여 현물분할하는 경우, 분할부분의 경제적 가치의 과부족을 공유자 상호간에 금전으로 조정하게 하는 것은 허용되지 않는다.

32. 주위토지통행권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다툼이 있으면 판례에 의함)

① 주위토지통행권이 발생한 후 그 토지에 접하는 공로가 개설됨으로써 이를 인정할 필요성이 없어진 때에는 주위토지통행권이 소멸한다.

② 토지의 용도에 필요한 통로가 있는 경우에는 그 통로를 사용하는 것보다 더 편리하다는 이유만으로 주위토지통행권을 인정할 수는 없다.

③ 주위토지통행권의 본래적 기능 발휘를 위해서 그 통행에 방해가 되는 축조물은 적법하게 설치되었던 것이라 하더라도 철거되어야 한다.

④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주위토지통행권이 성립한 경우, 통행권자는 통행지소유자의 손해를 보상하여야 한다.

⑤ 토지사용권이 없는 명의신탁자에게도 주위토지통행권이 인정된다.

33. 분묘기지권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다툼이 있으면 판례에 의함)

① 분묘기지권은 분묘를 소유하기 위하여 타인의 토지를 제한된 범위 내에서 사용할 수 있는 물권이다.

② 분묘가 멸실되더라도 유골이 존재하여 일시적인 멸실에 불과하다면 분묘기지권은 소멸하지 않는다.

③ 암장(暗葬)되어 있어 객관적으로 인식할 수 있는 외형을 갖추고 있지 아니한 경우에는 분묘기지권이 인정되지 않는다.

④ 분묘기지권을 시효로 취득한 경우에는 지료를 지급할 필요가 없다.

⑤ 분묘기지권의 효력이 미치는 지역의 범위에는 기존의 분묘 외에 새로운 분묘를 신설할 권능도 포함된다.

34. 저당권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다툼이 있으면 판례에 의함)

① 장래에 발생할 특정의 조건부 채권을 피담보채권으로 하는 근저당권을 설정하는 것도 가능하다.

② 구분건물의 전유부분에 설정된 저당권의 효력은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전유부분의 소유자가 나중에 취득한 대지사용권에 미친다.

③ 저당권자는 채권 전부의 변제를 받을 때까지 저당부동산 전부에 관하여 그 저당권을 행사할 수 있다.

④ 저당권자는 저당물의 공용징수로 인하여 저당권설정자가 받을 금전의 지급 전에 이를 압류함으로써 저당권을 행사할 수 있다.

⑤ 공유자 중 1인의 지분에 저당권이 설정된 후 공유토지가 분할된 경우, 저당권은 저당권설정자가 분할받은 토지에만 효력이 미친다.

35. 저당권의 침해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다툼이 있으면 판례에 의함)

① 저당권이 설정된 임야의 수목이 부당하게 벌채·반출된 경우, 저당권자는 자신에게 수목의 반환을 청구할 수 있다.

② 선순위저당권이 소멸된 경우, 후순위저당권자는 선순위저당권의 말소등기를 청구할 수 있다.

③ 제3자가 저당권의 목적물을 손상시켜도 나머지 부분의 가액이 피담보채권을 담보하기에 충분한 경우에는 저당권자는 그 제3자에 대하여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없다.

④ 저당권설정자의 책임 있는 사유로 인하여 저당물의 가액이 현저히 감소된 때에는 저당권자는 원상회복 또는 상당한 담보제공을 청구할 수 있다.

⑤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저당 토지의 지상권자가 통상의 용법에 따라 토지를 사용·수익하는 경우, 저당권 침해에 해당하지 않는다.

36. 다음 설명 중 옳지 않은 것은?

① 점유보조자에게는 점유보호청구권이 인정되지 않는다.

② 무주의 부동산은 무주물선점의 대상이 되지 않는다.

③ 타인의 토지에서 발견한 매장물은 토지 소유자와 발견자가 절반하여 취득한다.

④ 설립등기된 법인은 총유의 형태로 부동산을 소유한다.

⑤ 공유자의 1인이 지역권을 취득한 때에는 다른 공유자도 이를 취득한다.

37. 가등기담보권의 실행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다툼이 있으면 판례에 의함)

① 후순위권리자는 청산기간 내에 한하여 그 피담보채권의 변제기가 되기 전이라도 목적부동산의 경매를 청구할 수 있다.

② 채권자가 채무자에게 청산금을 통지하지 아니한 경우에도 청산금을 지급하고 등기를 마쳤다면 소유권을 취득할 수 있다.

③ 채권자는 사적실행의 방법으로 청산기간이나 동시이행관계를 인정하지 아니하는 처분정산형의 담보권 실행을 할 수 없다.

④ 목적부동산의 평가액이 채권액에 미달하여 청산금이 없다고 인정되는 때에는 채권자는 그 뜻을 채무자 등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⑤ 압류등기 전에 이루어진 담보가등기권리가 매각에 의하여 소멸되면 경매법원에 채권신고를 한 경우에만 그 채권자는 매각대금을 배당받거나 변제금을 받을 수 있다.

38. 물권적 청구권이 아닌 것은? (다툼이 있으면 판례에 의함)

① 부동산매수인의 소유권이전등기청구권

② 진정한 등기명의의 회복을 위한 소유권이전등기청구권

③ 지상권에 기한 방해예방청구권

④ 피담보채무 변제 후의 소유권에 기한 저당권 말소등기청구권

⑤ 저당권에 기한 방해배제청구권

39. 부동산 소유권 이전등기의 추정력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다툼이 있으면 판례에 의함)

① 등기명의자는 그 전 소유자에 대하여는 적법한 등기원인에 의하여 소유권을 취득한 것이라는 등기의 추정력을 주장할 수 없다.

② 등기명의자가 등기부와 다른 등기원인을 주장하였으나 그 주장 사실이 인정되지 않은 것만으로는 등기의 추정력이 깨어지는 것은 아니다.

③ 소유권이전등기의 원인으로 주장된 계약서가 진정하지 않은 것으로 증명된 경우, 그 등기의 적법 추정은 깨어진다.

④ 등기원인 사실에 대한 입증이 부족하다는 이유로 그 등기를 무효라고 단정할 수 없다.

⑤ 증여를 원인으로 미성년자에게서 친권자 앞으로 소유권이전등기가 경료된 경우,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그 이전등기에 관하여 필요한 절차를 적법하게 거친 것으로 추정된다.

40. 부합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① 동산이 부동산에 부합하여 동산의 소유권이 소멸한 때에는 그 동산을 목적으로 한 다른 권리도 소멸한다.

② 부합으로 인하여 권리를 상실하는 등 손해를 입은 자는 부당이득 규정에 의하여 보상을 청구할 수 있다.

③ 건물로서의 독립성이 없어서 기존 건물의 구성부분이 된 경우에는 타인이 권원에 의해 부속시킨 것이라도 기존 건물에 부합한다.

④ 저당권설정 후 저당목적물에 부합된 물건에는 저당권의 효력이 미치지 않는다.

⑤ 건물 증축에 있어서 부합 여부는 증축 부분의 객관적 상태 외에 소유자의 의사를 고려하여 결정한다.

경제원론

41. 완전경쟁시장에서 시장 수요함수가 $Q=1000-P$이고 기업들의 장기 평균비용은 생산량이 10일 때 100원으로 최소화된다. 이 때 장기균형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단, Q는 수요량, P는 가격이다.)

① 개별 기업의 이윤은 0원이다.
② 개별 기업의 생산량은 10이다.
③ 균형가격은 100원이다.
④ 시장에는 100개의 기업이 존재하게 된다.
⑤ 소비자들은 가격순응자로서 효용을 극대화한다.

42. 제품의 가격이 10원이고, 노동 한 단위의 가격은 5원, 자본 한 단위의 가격은 15원이다. 기업 A의 노동의 한계생산이 3이고, 자본의 한계생산은 1일 때, 현재 생산수준에서 비용극소화를 위한 방법으로 옳은 것은? (단, 모든 시장은 완전경쟁시장이고, 노동과 자본의 한계생산은 체감한다.)

① 노동의 투입량은 늘리고, 자본의 투입량은 줄일 것이다.
② 노동의 투입량은 줄이고, 자본의 투입량은 늘릴 것이다.
③ 노동과 자본 모두 투입량을 늘릴 것이다.
④ 노동과 자본 모두 투입량을 줄일 것이다.
⑤ 노동과 자본의 투입량을 그대로 유지할 것이다.

43. 가격차별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① 1급 가격차별을 하면 소비자 잉여는 모두 생산자 잉여가 된다.
② 완전경쟁시장과 가격차별은 양립하지 않는다.
③ 가격차별은 경제적 순손실(deadweight loss)을 항상 증대시킨다.
④ 가격차별은 독점기업의 이윤극대화 전략 중의 하나이다.
⑤ 극장에서의 조조할인 요금제는 가격차별의 일종이다.

44. 시장수요가 $Q=100-P$이고 독점기업의 비용함수가 $C=20Q$인 독점시장의 균형에서 수요의 가격탄력성은? (단, Q는 수요량, P는 가격, C는 총비용이고 수요의 가격탄력성은 절대값으로 표현한다.)

① 0.0 ② 0.5 ③ 1.0 ④ 1.5 ⑤ 2.0

45. 고정비용이 존재하고 노동만이 가변요소인 기업의 단기비용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① 단기평균고정비용 곡선은 언제나 우하향한다.
② 단기총평균비용은 단기평균가변비용과 단기평균고정비용의 합이다.
③ 노동의 한계생산이 체감하면 단기한계비용 곡선은 우상향한다.
④ 노동의 한계생산이 불변이면 단기총평균비용 곡선은 수평이다.
⑤ 단기한계비용이 단기총평균비용보다 큰 경우 단기총평균비용은 증가한다.

46. 기업 A의 비용함수는 $C=\sqrt{Q}+50$이다. 이 기업이 100개를 생산할 경우, 이윤이 0이 되는 가격은? (단, C는 총비용, Q는 생산량이다.)

① 1 ② 0.6 ③ 0.5 ④ 0.2 ⑤ 0.1

47. 기업 A의 노동과 자본의 투입량과 산출량 수준을 관찰한 결과 다음과 같은 표를 얻었다. 이 표에서 발견할 수 없는 현상은? (단, 생산에 투입되는 요소는 노동과 자본 뿐이다.)

노동투입	자본투입	총생산
1	4	20
2	2	20
3	2	28
4	1	20
4	2	35
4	3	38
4	4	40

① 규모의 경제
② 규모수익 불변
③ 노동의 한계생산 체감
④ 자본의 한계생산 체감
⑤ 노동에 대한 자본의 한계대체율 체감

48. 기업 A의 생산함수는 $Q=LK$이다. 노동과 자본의 가격이 각각 1원일 때, 다음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단, Q는 생산량, L은 노동, K는 자본이다.)

① 규모에 대한 수익이 체증한다.
② 노동의 한계생산은 체감한다.
③ 자본의 양이 단기적으로 1로 고정되어 있는 경우 100개를 생산하는데 드는 총비용은 101원이다.
④ 자본의 양이 단기적으로 1로 고정되어 있는 경우 단기총평균비용은 생산량이 늘어나면 하락한다.
⑤ 자본의 양이 단기적으로 1로 고정되어 있는 경우 한계비용은 불변이다.

49. 노동과 여가의 선택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단, 여가는 정상재이다.)

① 시간당 임금은 여가 한 시간의 기회비용이다.
② 시간당 임금이 상승할 경우, 소득효과만 고려하면 노동공급이 감소한다.
③ 시간당 임금에 대해 근로소득세율이 상승할 경우, 노동공급이 항상 감소한다.
④ 비근로소득이 증가하는 경우, 노동공급이 항상 감소한다.
⑤ 시간당 임금이 상승할 경우, 대체효과만 고려하면 노동공급이 항상 증가한다.

50. 단위당 동일한 종량세율로 생산자 또는 소비자에게 부과하는 조세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① 생산자에게 부과할 때와 소비자에게 부과할 때의 경제적 순손실(deadweight loss)은 같다.
② 조세부담의 귀착(tax incidence)은 조세당국과 생산자 및 소비자 간의 협상능력에 의존한다.
③ 수요의 가격탄력성이 클수록 생산자의 조세부담이 커진다.
④ 수요의 가격탄력성이 공급의 가격탄력성보다 클수록 생산자의 조세부담분이 커진다.
⑤ 수요의 가격탄력성이 0인 재화에 조세를 부과해도 사회후생은 감소하지 않는다.

51. X재의 가격이 150원이고, Y재의 가격이 100원이다. 소비자 甲의 Y재에 대한 한계효용이 300이고 효용이 극대화된 상태라면, 甲의 X재에 대한 한계효용은? (단, X > 0, Y > 0이다.)

① 150 ② 200 ③ 300 ④ 450 ⑤ 550

52. 두 재화 X재와 Y재를 甲은 각각 50단위씩, 乙은 각각 30단위씩 갖고 있다. 이 상태에서 X재에 대한 Y재의 한계대체율이 甲은 3이고 乙은 2이다. 甲과 乙 사이에 자유로운 거래가 이루어진다면, X재에 대한 Y재의 교환비율은? (단, 甲과 乙은 효용을 극대화한다.)

① 0이다.
② 1 이상 2 미만이다.
③ 2 이상 3 이하이다.
④ 3보다 크고 4 이하이다.
⑤ 4보다 크다.

53. 수요의 법칙과 공급의 법칙이 성립하는 선풍기 시장에서 선풍기 균형가격의 상승을 유발하는 요인이 아닌 것은? (단, 선풍기는 열등재이다.)

① 대체재인 에어컨 생산기술의 발전으로 좀 더 저렴한 비용으로 에어컨을 생산할 수 있게 되었다.
② 대체재인 에어컨 가격이 상승했다.
③ 여름 날씨가 무척 더워진다는 예보가 있다.
④ 선풍기 물품세가 인상되었다.
⑤ 최근 불황으로 인해 소득이 하락하였다.

54. 동전을 던져 앞면이 나오면 9,000원을 따고 뒷면이 나오면 10,000원을 잃는 도박이 있다. 甲은 위험기피자, 乙은 위험애호자, 丙은 위험중립자인 경우 다음 설명으로 옳은 것은?

① 甲의 도박에의 참여 여부는 위험 기피도에 따라 결정될 것이다.
② 도박에 참여하는 대가로 500원을 준다 해도, 甲은 도박에 참여하지 않을 것이다.
③ 丙은 이 도박에 반드시 참여할 것이다.
④ 乙은 이 도박에 반드시 참여할 것이다.
⑤ 앞면이 나올 때 따는 금액을 1,000원 올려 10,000원으로 하고, 뒷면이 나올 때 잃는 금액을 1,000원 내려 9,000원으로 하면 甲, 乙, 丙 모두 이 도박에 반드시 참여할 것이다.

55. 甲과 乙 두 사람이 사는 사회에서 甲의 소득을 X, 乙의 소득을 Y라 표시하고, 이들의 소득 분포는 (X, Y)의 형태로 표시한다. 소득 분포 상태를 평가하는 세 가지 원칙은 아래와 같다. 다음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 A : 사회에서 가장 가난한 사람의 소득이 높을수록 바람직하다. ○ B : 모든 사회 구성원들의 소득의 총합이 클수록 바람직하다. ○ C : 모든 사회 구성원들의 소득이 균등하게 분포될수록 바람직하다.

① 소득분포 (3, 2)와 (5, 1)을 비교할 때, 원칙 A에 따르면 (3, 2)가 더 바람직하다.

② 소득분포 (3, 2)와 (4, 2)를 비교할 때, 원칙 B에 따르면 (4, 2)가 더 바람직하다.

③ 소득분포 (1, 1)과 (4, 1)을 비교할 때, 원칙 C에 따르면 (1, 1)이 더 바람직하다.

④ 소득분포 (3, 3)과 (2, 3)을 비교할 때, 위 세 가지 원칙 모두 (3, 3)을 더 바람직하다고 판단한다.

⑤ 소득분포 (2, 3)과 (7, 3)을 비교할 때, 위 세 가지 원칙 중 (7, 3)이 명백히 더 바람직하다고 판단하는 원칙은 B 뿐이다.

56. 외부성에 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을 모두 고른 것은?

ㄱ. 부(−)의 외부성이 존재하면 시장 생산량은 사회적 최적 생산량보다 많다. ㄴ. 외부성은 합병이나 보조금 혹은 조세 등을 통해 내부화시킬 수 있다. ㄷ. 코우즈(R. Coase)에 의하면 외부성이 존재하더라도 재산권이 확립되어 있으면 정부의 개입이 불필요할 수 있다.

① ㄱ ② ㄱ, ㄴ ③ ㄴ, ㄷ
④ ㄱ, ㄷ ⑤ ㄱ, ㄴ, ㄷ

57. 한 시장에 두 기업 A, B가 존재한다. 각 기업은 두 가지 생산 전략 L, H 중 하나를 선택할 수 있다. 두 기업의 생산 전략 선택에 따른 보수는 다음 표와 같다. (단, 표에서 각 셀 좌 하단의 숫자는 기업 A의 보수를, 우 상단의 숫자는 기업 B의 보수를 나타낸다.)

A \ B	L	H
L	1 1	0 0
H	0 0	0 0

다음 설명 중 옳은 것을 모두 고른 것은?

ㄱ. 기업 A의 생산 전략 H는 우월전략이다. ㄴ. 기업 A와 B 모두 생산 전략 L을 선택하는 것은 내쉬균형이다. ㄷ. 기업 A와 B 모두 생산 전략 H를 선택하는 것은 내쉬균형이다.

① ㄱ ② ㄴ ③ ㄷ
④ ㄱ, ㄴ ⑤ ㄴ, ㄷ

58. 효용극대화를 추구하는 소비자 甲의 효용함수는 $U(x,y)=\min\{x,y\}$이다. 甲의 수요에 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단, 甲은 X재와 Y재만 소비하고, x는 X재 소비량, y는 Y재 소비량을 나타낸다.)

① 수요의 가격탄력성이 0이다.
② 수요의 가격탄력성이 1이다.
③ 수요의 교차탄력성이 0이다.
④ 수요의 교차탄력성이 −1이다.
⑤ 수요의 소득탄력성이 1이다.

59. 국내물가가 4% 상승하고 외국물가가 6% 상승했으며 명목환율이 10% 하락한 경우에 실질환율의 하락 정도는? (단, 명목환율은 외국화폐 단위당 자국화폐의 교환비율이다.)

① 4% ② 6% ③ 8% ④ 10% ⑤ 12%

60. A국은 자본이 상대적으로 풍부하고 B국은 노동이 상대적으로 풍부하다. 양국 간의 상품이동이 완전히 자유로워지고 양 국가가 부분 특화하는 경우, 헥셔-올린(Heckscher-Ohlin)모형과 스톨퍼-새뮤엘슨(Stolper-Samuelson)정리에서의 결과와 부합하는 것을 모두 고른 것은?

ㄱ. 두 국가의 자본가격은 같아진다. ㄴ. B국 자본가의 실질소득이 증가한다. ㄷ. A국 노동자의 실질소득이 감소하는 반면, B국 노동자의 실질소득은 증가한다.

① ㄱ ② ㄱ, ㄴ ③ ㄱ, ㄷ
④ ㄴ, ㄷ ⑤ ㄱ, ㄴ, ㄷ

61. 개방경제의 국민소득계정에 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을 모두 고른 것은?

ㄱ. 국민소득이 소비, 투자, 정부지출의 합보다 큰 경우에 순수출은 반드시 양(+)이 된다. ㄴ. 민간 투자가 민간 저축보다 더 큰 경우에 순수출은 반드시 양(+)이 된다. ㄷ. 정부 세금 수입이 지출보다 더 큰 경우에 순수출은 반드시 양(+)이 된다.

① ㄱ ② ㄴ ③ ㄷ
④ ㄱ, ㄴ ⑤ ㄴ, ㄷ

62. 국제거래 중 우리나라의 경상수지 흑자를 증가시키는 것은?

① 외국인이 우리나라 기업의 주식을 매입하였다.
② 우리나라 학생의 해외 유학이 증가하였다.
③ 미국 기업이 우리나라에 자동차 공장을 건설하였다.
④ 우리나라 기업이 중국 기업으로부터 특허료를 지급받았다.
⑤ 우리나라 기업이 외국인에게 주식투자에 대한 배당금을 지급하였다.

63. 총수요-총공급 모형에서 총수요곡선을 이동시키는 요인으로 옳지 않은 것은?

① 원유 등 주요 원자재 가격의 하락
② 가계의 신용카드 사용액에 대한 소득공제 축소
③ 신용카드사기 증가로 현금사용 증가
④ 가계의 미래소득에 대한 낙관적인 전망
⑤ 유럽의 재정위기로 인한 유로지역 수출 감소

64. 폐쇄경제 IS-LM 모형과 관련된 설명으로 옳은 것은? (단, IS 곡선은 우하향, LM 곡선은 우상향한다.)

① IS 곡선과 LM 곡선에서 총공급 곡선이 도출된다.
② 정부지출의 구축효과는 발생하지 않는다.
③ 현재 경제상태가 IS 곡선의 왼쪽, LM 곡선의 오른쪽에 있다면 상품시장은 초과공급, 화폐시장은 초과수요 상태이다.
④ 피구효과(Pigou effect)에 의하면 물가수준이 하락할 때 IS 곡선이 우측으로 이동하여 국민소득이 증가한다.
⑤ IS-LM 모형에서 물가수준은 내생변수이다.

65. 고전학파의 화폐수량설에 따를 때, 통화량이 증가하는 경우 다음 설명 중 옳은 것은?

① 화폐유통속도가 감소한다.
② 화폐유통속도가 증가한다.
③ 물가가 상승한다.
④ 물가가 하락한다.
⑤ 명목 GDP는 불변이다.

66. 명목 GDP(국내총생산)와 명목 GNI(국민총소득)에 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을 모두 고른 것은?

ㄱ. 폐쇄경제에서 명목 GDP는 명목 GNI와 크기가 같다. ㄴ. 한국인이 해외에서 벌어들인 요소소득이 외국인이 한국에서 벌어들인 요소소득보다 더 큰 경우에 명목 GDP가 명목 GNI보다 더 크다. ㄷ. 외국인이 한국에서 벌어들인 근로소득은 한국의 GDP에 포함된다. ㄹ. 한국인이 해외에서 벌어들인 이자수입은 한국의 GDP에 포함된다.

① ㄱ, ㄴ ② ㄱ, ㄷ ③ ㄴ, ㄷ
④ ㄴ, ㄹ ⑤ ㄷ, ㄹ

67. 경제 내에 생산가능인구(working age population)가 5천만 명, 실업자가 5백만 명, 그리고 취업자가 2천만 명으로 파악되었다. 이 경제의 경제활동참가율과 고용률은?

① 50%, 40%　② 50%, 80%　③ 40%, 40%
④ 40%, 60%　⑤ 40%, 80%

68. 인플레이션 조세(inflation tax)에 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① 물가가 상승함에 따라 납세자들이 더 높은 세율등급을 적용받아 납부하는 소득세로 정의된다.
② 물가가 상승함에 따라 경제주체가 보유하고 있는 통화의 실질가치가 상승할 때 발생한다.
③ 세율이 인상됨에 따라 인플레이션율이 상승하는 것을 의미한다.
④ 정부가 정부채권을 시중금융기관으로부터 매입함으로써 발생한 이자율 하락으로 인한 금융자산의 가격하락을 의미한다.
⑤ 정부가 통화량을 증가시켜 재정자금을 조달할 때 발생한다.

69. 다음의 폐쇄경제 모형에서 생산물시장과 화폐시장을 동시에 균형시키는 물가수준은? (단, Y는 국민소득, C는 소비, I는 투자, G는 정부지출, r은 이자율, M^d는 명목화폐수요, M^s는 명목화폐공급, P는 물가수준이다.)

$Y = C + I + G$(생산물시장의 균형)
$Y = 100$
$C = 20 + 0.5Y$
$I = 30 - 50r$
$G = 10$
$M^s = M^d$(화폐시장의 균형)
$\frac{M^d}{P} = 0.01Y - r$
$M^s = 20$

① 15　② 25　③ 50　④ 75　⑤ 100

70. 실물경기변동이론(real business cycle theory)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① 경기변동의 요인으로 기술 충격의 중요성을 강조한다.
② 노동시장은 항상 균형을 이룬다.
③ 경기변동은 시간에 따른 균형의 변화로 나타난다.
④ 불경기에도 생산의 효율성은 달성된다.
⑤ 생산성은 경기역행적(counter-cyclical)이다.

71. A국의 연간 실질 GDP 변화율과 실업률의 변화가 다음과 같은 관계에 있다. 이에 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실질 GDP 변화율(%) = 3% − 2 × 실업률(%)의 변화

① 자연실업률은 3%이다.
② 실업률이 5%에서 6%로 상승하면 실질 GDP는 2% 감소한다.
③ 실질 GDP가 1% 하락하면 실업률은 5%에서 5.5%로 상승한다.
④ 물가가 상승하면 단기적으로 실질 GDP가 감소한다.
⑤ 실업률이 변화하지 않을 경우 실질 GDP는 3% 증가한다.

72. 소비이론에 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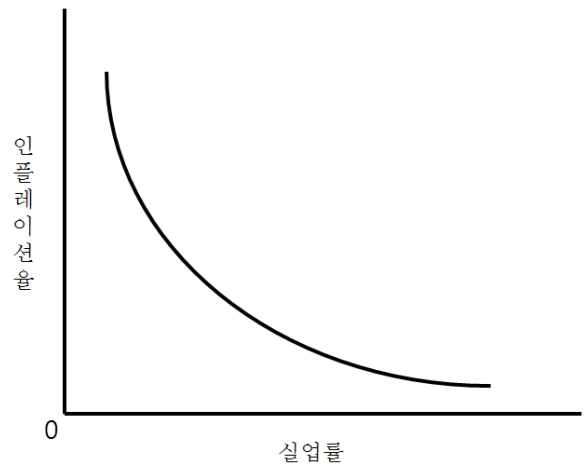
① 피셔(I. Fisher)의 기간 간 소비선택이론에 따르면 차입제약이 없는 경우 이자율은 현재소비에 영향을 줄 수 없다.
② 항상소득가설(permanent income hypothesis)은 소비자들이 유동성제약에 처해있다고 전제한다.
③ 생애주기가설(life cycle hypothesis)은 현재소비는 현재소득에만 의존한다고 전제한다.
④ 항상소득가설에 따르면 평균소비성향은 현재소득에 대한 항상소득의 비율에 의존한다.
⑤ 케인즈 소비함수에서 소득이 증가할 때 평균소비성향은 항상 일정하다.

73. 솔로우(R. Solow) 성장모형에서 일인당 생산함수는 $y=k^{1/2}$, 저축률은 12%, 인구증가율은 1%, 자본의 감가상각률은 2%이다. 다음 설명 중 옳은 것을 모두 고른 것은? (단, y는 일인당 생산량, k는 일인당 자본량이다.)

ㄱ. 균제상태(steady state)에서 일인당 산출량은 4이다. ㄴ. 자본소득분배율과 노동소득분배율은 같다. ㄷ. 균제상태에서 황금률(golden rule)이 달성되고 있다.

① ㄱ ② ㄴ ③ ㄱ, ㄴ
④ ㄴ, ㄷ ⑤ ㄱ, ㄴ, ㄷ

74. 다음 그림은 A국의 인플레이션율과 실업률 사이의 단기적 상충관계를 나타내는 필립스곡선이다. 이 관계에 근거하여 단기적으로 실업률을 낮추기 위한 정부의 정책 방향으로 옳은 것은? (단, 세로축은 인플레이션율, 가로축은 실업률이고, 단위는 %이다.)



① 정부지출을 감소시킨다.
② 소득세를 인하한다.
③ 통화량을 감소시킨다.
④ 기준금리를 인상한다.
⑤ 법인세를 인상한다.

75. 정기예금의 실질 수익률은 실질 이자율이다. 현금 보유의 실질 수익률은?

① 실질 이자율
② 실질 이자율의 마이너스 값
③ 인플레이션율
④ 인플레이션율의 마이너스 값
⑤ 실질 이자율과 인플레이션율의 합

76. 우리나라에서 산정되는 물가지수에 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① 소비자물가지수 산정에 포함되는 재화와 용역은 해마다 달라진다.
② GDP 디플레이터 산정에는 파셰 지수(Paasche Index) 산식을 사용한다.
③ 소비자물가지수 산정에는 국내에서 생산되는 재화와 용역만 포함된다.
④ 생산자물가지수 산정에 포함되는 재화와 용역은 해마다 달라진다.
⑤ GDP 디플레이터 산정에 포함되는 재화와 용역은 5년 마다 달라진다.

77. 중앙은행은 아래와 같은 테일러 준칙(Taylor rule)에 따라 명목이자율을 조정한다. 이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단, i는 명목이자율, π는 인플레이션율, π^*는 목표 인플레이션율, Y^*는 잠재 GDP, Y는 실제 GDP, $(Y^*-Y)/Y^*$는 총생산 갭이다.)

$$i=0.05+\pi+0.5(\pi-\pi^*)-0.5(Y^*-Y)/Y^*$$

① 목표 인플레이션율이 낮아지면 중앙은행은 명목이자율을 인상한다.
② 실제 GDP가 잠재 GDP보다 더 큰 경우에 중앙은행은 명목이자율을 인상한다.
③ 총생산 갭은 0이고 인플레이션율이 3%에서 4%로 상승하는 경우에, 중앙은행은 명목이자율을 0.5%포인트(%p) 인상한다.
④ 인플레이션율이 목표치와 같고 실제 GDP가 잠재 GDP와 같다면 실질이자율은 5%가 된다.
⑤ 인플레이션율은 목표치와 같고 총생산 갭이 0%에서 1%로 상승하는 경우에, 중앙은행은 명목이자율을 0.5%포인트(%p) 인하한다.

78. 중앙은행의 통화량 조절 방법에 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① 법정지급준비율을 인상하면 시중은행이 예금액 중에서 대출할 수 있는 금액이 증가한다.
② 중앙은행이 국채를 시중은행 A에 매도하면 시중은행 A의 지급준비금은 증가한다.
③ 법정지급준비율을 인하하면 예금통화승수는 감소한다.
④ 재할인율을 인상하면 통화량이 증가한다.
⑤ 중앙은행이 민간인들이 보유하고 있는 국채를 매입하면 통화량은 증가한다.

79. 마찰적 실업의 원인을 모두 고른 것은?

ㄱ. 노동자들이 자신에게 가장 잘 맞는 직장을 찾는데 시간이 걸리기 때문이다.
ㄴ. 기업이 생산성을 제고하기 위해 시장균형임금보다 높은 수준의 임금을 지불하는 경향이 있기 때문이다.
ㄷ. 노동조합의 존재로 인해 조합원의 임금이 생산성보다 높게 설정되기 때문이다.

① ㄱ ② ㄴ ③ ㄷ
④ ㄱ, ㄴ ⑤ ㄴ, ㄷ

80. 합리적 경제주체들이 인플레이션율을 6%로 예상하고 다음과 같은 경제행위를 하였다. 실제 인플레이션율이 3%일 때 손해를 보는 경제주체를 모두 고른 것은?

ㄱ. 고정금리로 정기예금에 가입한 가계
ㄴ. 고정된 봉급의 임금계약을 체결한 근로자
ㄷ. 고정금리로 국채를 발행한 정부
ㄹ. 고정금리로 주택담보 대출을 받은 차입자

① ㄱ, ㄴ ② ㄴ, ㄷ ③ ㄷ, ㄹ
④ ㄱ, ㄷ ⑤ ㄴ, ㄹ

2012년도 제23회 감정평가사 제1차 국가자격시험 문제지

교시	형별	시험과목	시험시간	수험번호	성명
1교시	B	1 민법 2 경제원론	80분		

< 유 의 사 항 >

○ 문제지 인쇄상태 및 매수 확인
○ 문제지에 수험번호와 성명 기재
○ 답안카드에 문제지 형별 기재 및 마킹
○ 시험종료시 답안카드 즉시 제출(미제출시 시험무효)
○ 의견제시에 대한 개별회신은 하지 않으며, 최종 정답 발표로 갈음함
○ 시험시행계획 공고일(2012.3.30) 현재 시행되는 법령, 회계처리 등을 적용(회계처리 등과 관련된 시험문제는 한국채택국제회계기준(K-IFRS) 적용)
○ 신분증 미지참자 및 사진상이자는 지정기일까지 공단 방문 후 신분확인을 받아야 함
○ 시험시간 중에는 중도퇴실이 불가하며, 시험포기자의 경우에는「시험포기각서」를 제출하시고 퇴실하여야 하며, 퇴실 후 재입실 불가(단, 설사, 배탈 등 긴급시 퇴실 가능하나 재입실 불가 및 해당교시 종료시까지 시험본부 대기)
○ 기타 공고된 수험자 유의사항 미준수시 그에 따른 책임은 수험자에게 있음

민 법

1. 조건과 기한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다툼이 있으면 판례에 의함)

① 기성조건이 정지조건이면 조건 없는 법률행위가 되고, 해제조건이면 그 법률행위는 무효이다.

② 조건의 성취로 인하여 불이익을 받을 당사자가 신의성실에 반하여 조건의 성취를 방해한 경우, 조건이 성취된 것으로 의제되는 시점은 방해행위 시점이다.

③ 기한이익의 상실약정이 있는 경우,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채권자가 통지나 청구 등을 하여야만 채무자의 기한이익이 상실된다.

④ 부첩관계 종료를 해제조건으로 하여 부동산을 증여한 경우, 증여계약은 무효이다.

⑤ 조건성취의 효력은 조건이 성취한 때로부터 생기고 소급하지 않는 것이 원칙이다.

2. 기간의 계산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다툼이 있으면 판례에 의함)

① 사원총회를 1주일 전에 통지하여야 하는 경우, 5월 25일 총회 예정일을 기준으로 늦어도 5월 17일 24시까지는 사원들에게 소집통지를 발송하여야 한다.

② 정년이 만 60세인 경우, 1952년 7월 8일 오후 3시에 출생한 직원은 2012년 7월 8일 오전 0시에 정년을 맞이한다.

③ 1981년 5월 20일 오전 11시에 출생한 자는 2001년 5월 21일 오전 0시에 성년으로 된다.

④ 기간의 말일이 2012년 3월 10일 토요일인 경우에는 2012년 3월 12일 월요일로 만료된다.

⑤ 다가오는 2012년 7월 7일부터 1주일까지라고 하면, 2012년 7월 13일 24시에 만료된다.

3. 물건에 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다툼이 있으면 판례에 의함)

① 완공된 신축 건물이라도 보존등기 전에는 소유권이 인정되지 않는다.

② 1필의 토지 일부에는 지상권을 설정할 수 없다.

③ 등기된 입목의 소유자는 입목을 토지와 분리하여 양도할 수 있고 이를 저당권의 목적으로 할 수 있다.

④ 권한 없이 타인의 토지에 농작물을 심은 경우, 수확기에 이른 농작물의 소유권은 토지 소유자에게 귀속된다.

⑤ 주유소의 주유기는 주유소 건물에 부합되어 종물로 볼 수 없다.

4. 무효와 취소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다툼이 있으면 판례에 의함)

① 의사무능력으로 인한 무효행위의 추인은 그 무효 원인이 소멸한 후에 하여야 효력이 있다.

② 취소권 행사기간은 제척기간이므로 당사자의 주장에 관계없이 법원이 당연히 조사하여 고려하여야 한다.

③ 미성년자는 성년자가 된 후에야 단독으로 추인할 수 있다.

④ 하나의 계약이라 할지라도 가분성을 가지거나 그 목적물의 일부가 특정될 수 있다면 그 일부만의 취소도 가능하다.

⑤ 무효인 법률행위는 추인에 의해 소급하여 유효한 법률행위로 전환된다.

5. 소멸시효 기간의 기산점에 관한 내용으로 옳지 않은 것은? (다툼이 있으면 판례에 의함)

① 동시이행의 항변권이 붙어 있는 채권은 이행기가 도래한 때부터 소멸시효가 진행한다.

② 부작위를 목적으로 하는 채권은 위반행위를 한 때로부터 소멸시효가 진행한다.

③ 불확정기한부 채권은 채무자가 그 기한의 도래를 안 때부터 소멸시효가 진행한다.

④ 기한을 정하고 있지 않은 채권은 그 채권이 발생한 때부터 소멸시효가 진행한다.

⑤ 이행불능으로 인한 전보배상청구권의 소멸시효는 이행불능시부터 진행된다.

6. 소멸시효와 제척기간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다툼이 있으면 판례에 의함)

① 명의신탁 해지를 원인으로 하는 소유권에 기한 이전등기청구권은 소멸시효의 대상이 되지 않는다.

② 점유자가 점유를 계속하는 동안에는 취득시효완성을 원인으로 한 소유권이전등기청구권은 소멸시효가 진행되지 않는다.

③ 공유물분할청구권은 공유관계가 존속하는 한 그 분할청구권만이 독립하여 시효로 소멸될 수 없다.

④ 제척기간을 정한 형성권의 경우, 그 행사로 인하여 발생하는 채권도 형성권의 제척기간 내에 행사하여야 한다.

⑤ 소멸시효의 중단에 관한 규정은 취득시효에 의한 소유권취득기간에 준용한다.

7. 부동산 취득시효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다툼이 있으면 판례에 의함)

① 중복등기 중 선등기가 원인무효가 아니어서 후등기가 무효로 된 경우, 말소되지 않은 후등기를 근거로 등기부취득시효의 완성을 주장할 수 없다.

② 시효기간 만료 전에 제3자가 등기명의를 넘겨받은 경우, 점유자는 시효기간완성 후에 그 제3자를 상대로 취득시효를 원인으로 소유권이전등기를 청구할 수 있다.

③ 점유자가 취득시효를 주장하는 경우, 자주점유 여부에 관한 증명책임은 취득시효의 성립을 부정하는 자에게 있다.

④ 자기 소유의 부동산은 취득시효의 대상이 될 수 없다.

⑤ 점유자가 점유 개시 당시에 소유권 취득의 원인이 될 수 있는 법률행위가 없다는 사실을 알면서 타인 소유의 부동산을 무단점유한 경우, 취득시효는 인정되지 않는다.

8. 전세권에 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다툼이 있으면 판례에 의함)

① 전전세권의 설정에는 원전세권자와 전전세권자 사이의 전전세권 설정의 합의 및 등기와 원전세권설정자의 동의를 요한다.

② 구분등기 되지 않은 건물 일부의 전세권자는 전세권의 목적물이 아닌 나머지 건물부분에 대해서는 전세권에 기하여 경매신청을 할 수 없으나 우선변제권은 가진다.

③ 전세권이 법정 갱신된 경우 갱신에 따른 등기를 하지 않으면, 전세권자는 그 목적물을 취득한 제3자에 대하여 갱신된 권리를 주장하지 못한다.

④ 전세금을 현실적으로 지급하지 아니하고 기존의 채권으로 갈음하기로 한 경우에는 전세권이 성립될 수 없다.

⑤ 전세권 존속기간이 만료된 경우 전세권의 용익물권적 권능은 소멸되고 전세금반환채권은 무담보채권으로 전환된다.

9. 신의성실의 원칙과 권리남용 금지원칙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다툼이 있으면 판례에 의함)

① 강행법규 위반임을 알면서 계약을 체결한 후 이를 이유로 계약의 무효를 주장하는 것은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신의칙에 반한다.

② 실효의 원칙을 적용하기 위해서는 의무자인 상대방이 더 이상 권리자가 그 권리를 행사하지 아니할 것으로 믿을 만한 정당한 사유가 있어야 한다.

③ 채무자가 채권자의 시효중단을 현저히 곤란하게 하여 채권자가 시효중단을 주장할 수 없는 경우, 채무자가 시효의 완성을 주장하는 것은 신의칙상 허용되지 않는다.

④ 법정지상권을 가진 건물소유자로부터 건물을 양수하면서 법정지상권까지 양도받기로 한 자에 대하여 대지소유자가 그 소유권에 기하여 건물철거를 청구하는 것은 허용되지 않는다.

⑤ 권리남용의 해당 여부는 당사자의 주장이 없더라도 법원이 직권으로 판단할 수 있다.

10. 혼동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다툼이 있으면 판례에 의함)

① 乙 소유의 토지에 지상권을 취득한 甲이 그 지상권을 목적으로 하는 저당권을 丙에게 설정한 후 甲이 토지의 소유권을 취득하였다면, 甲의 지상권은 소멸하지 않는다.

② 乙 소유의 토지에 지상권을 취득한 甲이 그 지상권을 목적으로 하는 저당권을 丙에게 설정한 후에 甲이 그 저당권을 취득한다면, 그 저당권은 소멸한다.

③ 甲 소유의 건물에 乙의 대항력 있는 임차권이 성립한 후 丙이 그 건물에 저당권을 취득하였다면, 후일 乙이 甲으로부터 그 건물을 매수하여도 임차권은 소멸하지 않는다.

④ 丙 소유의 토지에 甲의 1순위저당권과 乙의 2순위저당권이 설정되어 있을 때, 甲이 그 토지를 매수하여 소유권을 취득하였고 甲의 피담보채권이 존속할 경우에는 乙의 저당권이 1순위가 된다.

⑤ 근저당권자 甲이 근저당목적물인 건물을 매수한 후 그 소유권취득이 무효로 밝혀지면, 혼동으로 소멸하였던 근저당권은 부활한다.

11. 유치권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다툼이 있으면 판례에 의함)

① 유치권자는 피담보채권 전부의 변제를 받을 때까지 경매절차의 매수인에 대하여도 목적물의 인도를 거절할 수 있다.

② 유치권자의 점유는 직접점유이든 간접점유이든 관계가 없으나, 그 직접점유자가 채무자인 경우에는 유치권의 요건으로서의 점유에 해당되지 않는다.

③ 유치권을 행사하고 있는 동안에는 피담보채권의 소멸시효는 진행하지 않는다.

④ 건물의 임차인은 임대차 존속기간 중 지출한 유익비의 상환을 받을 때까지 유치권을 행사할 수 있다.

⑤ 건축업자가 건물을 점유하기 전에 건물공사로 취득한 건축비채권이라도 그 후 그 건물을 점유하였다면 유치권은 성립한다.

12. X 부동산을 甲으로부터 매수한 乙은 이전등기를 경료하지 않은 채 丙에게 그 부동산을 매도하였고 현재 丙은 이를 점유하여 사용·수익하고 있다. 다음 설명 중 옳지 않은 것은? (다툼이 있으면 판례에 의함)

① 3자간 중간생략등기의 합의가 있더라도 甲과 丙 사이에 토지거래허가를 받아 甲에서 丙 앞으로 직접 경료된 소유권이전등기는 무효이다.

② 甲과 丙 사이에 물권적 합의가 없더라도 중간생략등기에 관한 3자 합의가 있다면, 丙은 甲에 대하여 직접 자신의 명의로 이전등기를 청구할 수 있다.

③ 중간생략등기의 합의가 있은 후 甲과 乙 사이에 매매대금을 인상하는 약정이 체결된 경우, 인상된 매매대금이 지급되지 않았음을 이유로 甲은 丙에 대한 소유권이전등기의무의 이행을 거절할 수 없다.

④ 이미 甲에서 丙으로 소유권이전등기가 경료된 경우, 중간생략등기에 관한 합의가 없었다는 이유만으로는 중간생략등기가 무효라고 할 수 없다.

⑤ 乙의 甲에 대한 이전등기청구권은 중간생략등기의 합의가 있는 경우에도 소멸되지 않는다.

13. 甲은 乙에게 500만 원을 빌리면서 800만 원 상당의 명품시계에 질권을 설정하였다. 그 후 乙은 丙으로부터 300만 원을 빌리면서 甲의 시계에 관하여 丙에게 다시 질권을 설정하여 주고 그 사실을 甲에게 통지하였다. 다음 설명 중 甲이 질권의 소멸을 주장하여 시계를 돌려받을 수 있는 경우는?

① 甲이 乙에게 500만 원을 변제한 경우
② 甲이 丙에게 300만 원을 변제한 경우
③ 甲이 丙에게 200만 원을 변제한 경우
④ 甲이 丙에게 300만 원을 변제하고 乙에게 200만 원을 변제한 경우
⑤ 甲이 丙에게 200만 원을 변제하고 乙에게 300만 원을 변제한 경우

14. 상대방 없는 단독행위인 것은?

① 소유권의 포기 ② 해제
③ 동의 ④ 추인
⑤ 채무면제

15. 만 15세의 미성년자 甲은 친권자 丙의 동의를 얻어 자신의 소유인 X 토지를 乙에게 매도하는 경우, 다음 설명 중 옳은 것을 모두 고른 것은? (다툼이 있으면 판례에 의함)

ㄱ. 丙의 동의는 명시적으로 뿐만 아니라 묵시적으로도 가능하다.
ㄴ. 丙이 동의를 할 때에는 친족회의 동의를 필요로 한다.
ㄷ. 丙의 동의는 甲의 법률행위 이전에 하여야 하고 이후에 하는 동의는 효력이 없다.
ㄹ. 甲이 丙의 동의가 있는 것처럼 보이기 위하여 소극적인 사술을 쓴 것만으로도 취소권이 배제된다.
ㅁ. X 토지가 甲 명의의 매매계약서에 근거하여 乙에게 소유권이전등기가 경료되었다면, 丙의 동의 여부와 관계없이 적법한 등기로 추정된다.

① ㄱ, ㄹ ② ㄱ, ㅁ ③ ㄴ, ㄷ
④ ㄴ, ㄹ ⑤ ㄷ, ㅁ

16. 통정허위표시에 있어 선의의 제3자가 될 수 없는 자는? (다툼이 있으면 판례에 의함)

① 가장채권 양수인의 포괄승계인
② 가장행위에 기한 저당권부 채권을 가압류한 자
③ 가장양수인으로부터 매매계약에 의한 소유권이전등기청구권 보전을 위한 가등기를 경료받은 자
④ 가장저당권의 실행으로 경락받은 자
⑤ 가장양수인으로부터 목적부동산을 전득한 자

17. 의사표시의 효력발생시기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다툼이 있으면 판례에 의함)

① 무권대리인의 상대방이 상당한 기간을 정하여 본인에게 추인 여부를 최고한 경우, 본인이 그 기간 내에 확답을 발하지 않으면 추인을 거절한 것으로 본다.
② 공시송달을 함에 있어서 표의자는 상대방을 알지 못하거나 그 소재를 알지 못하는 데 과실이 없어야 한다.
③ 미성년자에 대한 의사표시의 도달을 법정대리인이 안 후에는 표의자가 의사표시의 도달을 주장할 수 있다.
④ 보통우편의 방법으로 의사표시가 발송된 경우에는 그 의사표시가 상당한 기간 내에 도달한 것으로 추정된다.
⑤ 승낙의 의사표시를 발송한 후 승낙자가 사망하더라도 승낙의 효력에는 영향을 미치지 않는다.

18. 불공정한 법률행위에 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다툼이 있으면 판례에 의함)

① 매도인이 불공정한 법률행위를 이유로 계약의 무효를 주장하는 경우, 매도인은 매매가격의 현저한 불균형을 증명하면 족하고, 매도인의 경솔 등의 여부는 매수인이 증명하여야 한다.
② 불공정한 법률행위가 대리인에 의하여 이루어진 경우, 궁박·경솔은 본인을 기준으로 하고 무경험은 대리인을 기준으로 판단한다.
③ 불공정한 법률행위가 성립하기 위해서는 폭리자에게 피해 당사자의 궁박·경솔 또는 무경험에 대한 인식과 이를 이용하려는 의사가 있어야 한다.
④ 불공정한 법률행위로서 무효인 경우에도 당사자가 그 무효임을 알고 추인한 때에는 새로운 법률행위로 본다.
⑤ 불공정한 법률행위에 있어서 급부와 반대급부 사이의 현저한 불균형이 있으면 이는 당사자의 궁박·경솔 또는 무경험에 의한 것으로 추정된다.

19. 甲은 乙을 강박하여 乙 소유의 X 토지를 무상으로 자신에게 증여하도록 강요하였다. 이에 乙은 자신의 재산을 甲에게 강제로 빼앗긴다는 인식을 하였지만 그래도 어쩔 수 없다고 생각하면서 X 토지를 무상으로 증여하였다. 다음 설명 중 옳은 것은? (다툼이 있으면 판례에 의함)

① 乙의 증여의 의사표시는 비진의 의사표시에 해당한다.
② 甲의 불법적인 해악의 고지로 말미암아 乙이 공포심을 느꼈다면 그것이 乙의 의사결정에 큰 영향을 주지 않았더라도 乙의 증여행위는 무효가 된다.
③ 불공정한 법률행위를 이유로 乙의 증여행위를 무효로 할 수 없다.
④ 乙은 강박에 의한 의사표시를 이유로 증여행위를 취소할 수 없다.
⑤ 乙의 증여의 의사표시는 통정허위표시에 해당하여 무효이다.

20. 법률행위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다툼이 있으면 판례에 의함)

① 착오에 의한 의사표시의 취소권은 형성권이다.
② 복대리에 대해서는 표현대리가 성립되지 않는다.
③ 대리인을 통한 계약체결시 의사표시의 하자 여부는 대리인을 표준으로 결정한다.
④ 대리인이 다수인 때에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각자가 본인을 대리한다.
⑤ 취소권자가 상대방으로부터 담보를 제공받은 경우 법정추인이 된다.

21. 착오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다툼이 있으면 판례에 의함)

① 동기의 착오를 이유로 계약을 취소하기 위해서는 그 동기가 상대방에게 표시되고 의사표시 내용의 중요부분으로 인정될 수 있어야 한다.
②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매매목적물의 시가는 의사표시 내용의 중요부분에 해당하므로 시가에 대한 착오를 이유로 매매계약을 취소할 수 있다.
③ 착오를 이유로 계약이 취소됨으로써 상대방이 손해를 입었더라도 상대방은 착오자에 대하여 불법행위를 원인으로 그 배상을 청구할 수는 없다.
④ 착오가 상대방의 기망에 의하여 유발된 경우에는 사기를 이유로 계약을 취소할 수 있다.
⑤ 상대방에 의하여 유발된 동기의 착오가 법률행위의 중요부분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계약을 취소할 수 있다.

22. 법률행위의 해석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다툼이 있으면 판례에 의함)

① 계약의 해석은 당사자가 그 표시행위에 부여한 객관적 의미를 명백하게 확정하는 것이다.
② 계약의 당사자가 누구인지는 그 계약에 관여한 당사자의 의사해석의 문제이다.
③ 진의 아닌 의사표시에 있어서 진의는 표의자가 진정으로 마음 속에서 바라는 사항을 의미한다.
④ 계약의 해석을 통하여 보충되는 당사자의 의사는 당사자의 주관적 의사가 아니라 거래관행이나 신의칙 등에 의하여 객관적으로 추인되는 의사를 의미한다.
⑤ 타인 명의로 계약을 체결하는 경우 계약을 체결한 자와 상대방의 의사가 일치한다면 그 일치된 의사대로 당사자를 확정하면 된다.

23. 복대리권의 소멸원인으로 볼 수 없는 것은?

① 본인의 사망
② 본인의 파산
③ 복대리인의 금치산
④ 대리인의 대리권 소멸
⑤ 대리인의 복임행위 철회

24. 甲이 등기를 하여야 비로소 소유권을 취득하는 경우는? (다툼이 있으면 판례에 의함)

① 甲이 수용재결을 통해 토지를 취득한 경우
② 甲 소유의 건물에 임차인이 창고를 지어 부합된 경우
③ 저당권 실행을 위한 경매에서 매수인 甲이 매각대금을 완납한 경우
④ 乙이 건물을 신축한 후 사망하여 甲이 상속한 경우
⑤ 甲이 부동산을 20년간 평온·공연하게 소유의 의사로 점유하여 점유취득시효를 완성한 경우

25. 乙은 대리권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甲의 대리인이라고 하면서 甲 소유의 X 토지를 丙에게 매도하는 계약을 체결하였다. 다음 설명 중 옳은 것은?

① 甲이 乙에 대하여 추인한 사실을 丙이 알았다고 하더라도 甲은 丙에 대하여 추인의 효과를 주장할 수 없다.

② 丙이 乙의 대리권 없음을 알고 있었다면, 丙은 甲에 대하여 추인 여부의 확답을 최고할 수 없다.

③ 丙은 乙의 대리권 없음을 알지 못한 데 대하여 과실이 있는 경우에도 乙에게 계약의 이행을 청구할 수 있다.

④ 丙이 乙의 대리권 없음을 알지 못한 경우에는 乙의 선택에 따라 계약의 이행을 청구할 수 있다.

⑤ 丙이 乙의 대리권 없음을 알지 못한 경우에는 계약을 철회할 수 있다.

26. 선의취득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다툼이 있으면 판례에 의함)

① 등록된 자동차는 선의취득의 대상이 아니다.

② 양수인의 선의·무과실의 기준시점은 물권행위가 완성된 때이다.

③ 점유개정에 의한 인도에 대하여는 선의취득이 인정되지 않는다.

④ 점유보조자가 본인의 의사에 반하여 본인의 물건을 처분하여 상대방이 선의취득한 경우에는 본인은 2년 내에 물건의 반환을 청구할 수 있다.

⑤ 선의취득이 유효하게 성립한 경우에는 취득자는 임의로 선의취득의 효과를 거부하고 종전 소유자에게 동산을 반환받아 갈 것을 요구할 수 없다.

27. 자주점유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다툼이 있으면 판례에 의함)

① 매도인에게 처분권이 없었다는 이유로 매매가 무효가 된 경우 그 사실을 알지 못한 매수인의 점유는 자주점유이다.

② 공유자 1인이 공유토지 전부를 점유하고 있는 경우,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다른 공유자의 지분비율 범위에 대해서는 타주점유에 해당한다.

③ 등기명의가 신탁되었다면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명의수탁자의 수탁부동산에 관한 점유는 타주점유이다.

④ 부동산을 타인에게 매도하여 소유권이전등기를 경료한 후 인도의무를 지고 있는 매도인의 점유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타주점유로 변경된다.

⑤ 매매대상 토지의 면적이 등기부상의 면적을 상당히 초과하더라도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초과부분에 대한 매수인의 점유는 자주점유이다.

28. 등기부상 甲 소유의 X 토지를 乙이 소유의 의사로 평온·공연하게 1989. 2. 1.부터 2012. 7. 1.까지 점유하고 있다. 다음 설명 중 옳지 않은 것은? (다툼이 있으면 판례에 의함)

① 2009. 3. 2. 甲이 丙에게 소유권이전등기 후 다시 20년이 경과하더라도 乙은 등기명의자인 丙에게 취득시효를 주장할 수 없다.

② 2012. 7. 1. 甲이 X 토지의 반환을 청구하는 경우, 乙은 등기 없이도 甲의 반환청구에 대항할 수 있다.

③ 甲은 乙에게 1989. 2. 1.부터 취득시효 완성시까지의 임료 상당액을 반환청구할 수 없다.

④ 2010. 3. 5. 甲이 丁에게 X 토지에 대한 저당권설정등기를 해준 경우,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저당권설정등기는 유효하다.

⑤ 1995. 5. 15. 甲이 戊에게 소유권이전등기를 해준 경우, 2012. 7. 1. 乙은 戊에 대하여 소유권이전등기를 청구할 수 있다.

29. 점유자와 회복자의 관계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다툼이 있으면 판례에 의함)

① 과실을 수취한 자가 선의의 점유자로 보호되기 위해서는 권원이 있다고 오신할만한 정당한 근거가 있어야 한다.

② 선의의 점유자가 직접 물건을 사용함으로써 얻은 이득은 과실이 아니므로 회복자에게 반환하여야 한다.

③ 악의의 점유자는 수취한 과실의 반환뿐만 아니라 자신의 책임있는 사유로 수취하지 못한 과실의 대가도 보상하여야 한다.

④ 선의의 타주점유자가 자신의 책임 있는 사유로 점유물을 멸실, 훼손하였다면 그로 인한 손해의 전부를 배상하여야 한다.

⑤ 점유자가 과실을 취득한 경우, 통상의 필요비는 반환을 청구할 수 없다.

30. 주위토지통행권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다툼이 있으면 판례에 의함)

① 주위토지통행권이 발생한 후 그 토지에 접하는 공로가 개설됨으로써 이를 인정할 필요성이 없어진 때에는 주위토지통행권이 소멸한다.

② 토지의 용도에 필요한 통로가 있는 경우에는 그 통로를 사용하는 것보다 더 편리하다는 이유만으로 주위토지통행권을 인정할 수는 없다.

③ 주위토지통행권의 본래적 기능 발휘를 위해서 그 통행에 방해가 되는 축조물은 적법하게 설치되었던 것이라 하더라도 철거되어야 한다.

④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주위토지통행권이 성립한 경우, 통행권자는 통행지소유자의 손해를 보상하여야 한다.

⑤ 토지사용권이 없는 명의신탁자에게도 주위토지통행권이 인정된다.

31. 공유물의 분할에 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다툼이 있으면 판례에 의함)

① 분할 협의가 성립된 경우에는 일부 공유자가 분할에 따른 이전등기에 협조하지 않더라도 공유물 분할의 소를 제기할 수 없다.

② 현물분할의 경우에는 공유자 전원에게 지분의 비율로 분할하고, 일부만을 공유로 남기는 방법은 허용되지 않는다.

③ 공유물분할은 재판상 분할을 원칙으로 한다.

④ 공유물의 분할시 각 공유자는 다른 공유자가 분할로 인하여 취득한 물건에 대하여 그 지분의 비율과 관계없이 공유물 전부에 대하여 매도인과 동일한 담보책임이 있다.

⑤ 재판상 분할에 의하여 현물분할하는 경우, 분할부분의 경제적 가치의 과부족을 공유자 상호간에 금전으로 조정하게 하는 것은 허용되지 않는다.

32. 민법상 법인의 설립등기사항이 아닌 것은?

① 법인의 목적 ② 법인의 사무소
③ 자산의 총액 ④ 설립허가의 연월일
⑤ 감사의 성명과 주소

33. 분묘기지권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다툼이 있으면 판례에 의함)

① 분묘기지권은 분묘를 소유하기 위하여 타인의 토지를 제한된 범위 내에서 사용할 수 있는 물권이다.

② 분묘가 멸실되더라도 유골이 존재하여 일시적인 멸실에 불과하다면 분묘기지권은 소멸하지 않는다.

③ 암장(暗葬)되어 있어 객관적으로 인식할 수 있는 외형을 갖추고 있지 아니한 경우에는 분묘기지권이 인정되지 않는다.

④ 분묘기지권을 시효로 취득한 경우에는 지료를 지급할 필요가 없다.

⑤ 분묘기지권의 효력이 미치는 지역의 범위에는 기존의 분묘 외에 새로운 분묘를 신설할 권능도 포함된다.

34. 저당권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다툼이 있으면 판례에 의함)

① 장래에 발생할 특정의 조건부 채권을 피담보채권으로 하는 근저당권을 설정하는 것도 가능하다.

② 구분건물의 전유부분에 설정된 저당권의 효력은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전유부분의 소유자가 나중에 취득한 대지사용권에 미친다.

③ 저당권자는 채권 전부의 변제를 받을 때까지 저당부동산 전부에 관하여 그 저당권을 행사할 수 있다.

④ 저당권자는 저당물의 공용징수로 인하여 저당권설정자가 받을 금전의 지급 전에 이를 압류함으로써 저당권을 행사할 수 있다.

⑤ 공유자 중 1인의 지분에 저당권이 설정된 후 공유토지가 분할된 경우, 저당권은 저당권설정자가 분할받은 토지에만 효력이 미친다.

35. 다음 설명 중 옳지 않은 것은?

① 점유보조자에게는 점유보호청구권이 인정되지 않는다.

② 무주의 부동산은 무주물선점의 대상이 되지 않는다.

③ 타인의 토지에서 발견한 매장물은 토지 소유자와 발견자가 절반하여 취득한다.

④ 설립등기된 법인은 총유의 형태로 부동산을 소유한다.

⑤ 공유자의 1인이 지역권을 취득한 때에는 다른 공유자도 이를 취득한다.

36. 저당권의 침해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다툼이 있으면 판례에 의함)

① 저당권이 설정된 임야의 수목이 부당하게 벌채·반출된 경우, 저당권자는 자신에게 수목의 반환을 청구할 수 있다.

② 선순위저당권이 소멸된 경우, 후순위저당권자는 선순위저당권의 말소등기를 청구할 수 있다.

③ 제3자가 저당권의 목적물을 손상시켜도 나머지 부분의 가액이 피담보채권을 담보하기에 충분한 경우에는 저당권자는 그 제3자에 대하여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없다.

④ 저당권설정자의 책임 있는 사유로 인하여 저당물의 가액이 현저히 감소된 때에는 저당권자는 원상회복 또는 상당한 담보제공을 청구할 수 있다.

⑤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저당 토지의 지상권자가 통상의 용법에 따라 토지를 사용·수익하는 경우, 저당권 침해에 해당하지 않는다.

37. 가등기담보권의 실행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다툼이 있으면 판례에 의함)

① 후순위권리자는 청산기간 내에 한하여 그 피담보채권의 변제기가 되기 전이라도 목적부동산의 경매를 청구할 수 있다.

② 채권자가 채무자에게 청산금을 통지하지 아니한 경우에도 청산금을 지급하고 등기를 마쳤다면 소유권을 취득할 수 있다.

③ 채권자는 사적실행의 방법으로 청산기간이나 동시이행관계를 인정하지 아니하는 처분정산형의 담보권 실행을 할 수 없다.

④ 목적부동산의 평가액이 채권액에 미달하여 청산금이 없다고 인정되는 때에는 채권자는 그 뜻을 채무자 등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⑤ 압류등기 전에 이루어진 담보가등기권리가 매각에 의하여 소멸되면 경매법원에 채권신고를 한 경우에만 그 채권자는 매각대금을 배당받거나 변제금을 받을 수 있다.

38. 물권적 청구권이 아닌 것은? (다툼이 있으면 판례에 의함)

① 부동산매수인의 소유권이전등기청구권

② 진정한 등기명의의 회복을 위한 소유권이전등기청구권

③ 지상권에 기한 방해예방청구권

④ 피담보채무 변제 후의 소유권에 기한 저당권 말소등기청구권

⑤ 저당권에 기한 방해배제청구권

39. 부동산 소유권 이전등기의 추정력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다툼이 있으면 판례에 의함)

① 등기명의자는 그 전 소유자에 대하여는 적법한 등기원인에 의하여 소유권을 취득한 것이라는 등기의 추정력을 주장할 수 없다.

② 등기명의자가 등기부와 다른 등기원인을 주장하였으나 그 주장 사실이 인정되지 않은 것만으로는 등기의 추정력이 깨어지는 것은 아니다.

③ 소유권이전등기의 원인으로 주장된 계약서가 진정하지 않은 것으로 증명된 경우, 그 등기의 적법 추정은 깨어진다.

④ 등기원인 사실에 대한 입증이 부족하다는 이유로 그 등기를 무효라고 단정할 수 없다.

⑤ 증여를 원인으로 미성년자에게서 친권자 앞으로 소유권이전등기가 경료된 경우,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그 이전등기에 관하여 필요한 절차를 적법하게 거친 것으로 추정된다.

40. 부합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① 동산이 부동산에 부합하여 동산의 소유권이 소멸한 때에는 그 동산을 목적으로 한 다른 권리도 소멸한다.

② 부합으로 인하여 권리를 상실하는 등 손해를 입은 자는 부당이득 규정에 의하여 보상을 청구할 수 있다.

③ 건물로서의 독립성이 없어서 기존 건물의 구성부분이 된 경우에는 타인이 권원에 의해 부속시킨 것이라도 기존 건물에 부합한다.

④ 저당권설정 후 저당목적물에 부합된 물건에는 저당권의 효력이 미치지 않는다.

⑤ 건물 증축에 있어서 부합 여부는 증축 부분의 객관적 상태 외에 소유자의 의사를 고려하여 결정한다.

경제원론

41. 기업 A의 노동과 자본의 투입량과 산출량 수준을 관찰한 결과 다음과 같은 표를 얻었다. 이 표에서 발견할 수 없는 현상은? (단, 생산에 투입되는 요소는 노동과 자본 뿐이다.)

노동투입	자본투입	총생산
1	4	20
2	2	20
3	2	28
4	1	20
4	2	35
4	3	38
4	4	40

① 규모의 경제
② 규모수익 불변
③ 노동의 한계생산 체감
④ 자본의 한계생산 체감
⑤ 노동에 대한 자본의 한계대체율 체감

42. 제품의 가격이 10원이고, 노동 한 단위의 가격은 5원, 자본 한 단위의 가격은 15원이다. 기업 A의 노동의 한계생산이 3이고, 자본의 한계생산은 1일 때, 현재 생산수준에서 비용극소화를 위한 방법으로 옳은 것은? (단, 모든 시장은 완전경쟁시장이고, 노동과 자본의 한계생산은 체감한다.)

① 노동의 투입량은 늘리고, 자본의 투입량은 줄일 것이다.
② 노동의 투입량은 줄이고, 자본의 투입량은 늘릴 것이다.
③ 노동과 자본 모두 투입량을 늘릴 것이다.
④ 노동과 자본 모두 투입량을 줄일 것이다.
⑤ 노동과 자본의 투입량을 그대로 유지할 것이다.

43. 가격차별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① 1급 가격차별을 하면 소비자 잉여는 모두 생산자 잉여가 된다.
② 완전경쟁시장과 가격차별은 양립하지 않는다.
③ 가격차별은 경제적 순손실(deadweight loss)을 항상 증대시킨다.
④ 가격차별은 독점기업의 이윤극대화 전략 중의 하나이다.
⑤ 극장에서의 조조할인 요금제는 가격차별의 일종이다.

44. 시장수요가 $Q=100-P$이고 독점기업의 비용함수가 $C=20Q$인 독점시장의 균형에서 수요의 가격탄력성은? (단, Q는 수요량, P는 가격, C는 총비용이고 수요의 가격탄력성은 절대값으로 표현한다.)

① 0.0 ② 0.5 ③ 1.0 ④ 1.5 ⑤ 2.0

45. 고정비용이 존재하고 노동만이 가변요소인 기업의 단기비용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① 단기평균고정비용 곡선은 언제나 우하향한다.
② 단기총평균비용은 단기평균가변비용과 단기평균고정비용의 합이다.
③ 노동의 한계생산이 체감하면 단기한계비용 곡선은 우상향한다.
④ 노동의 한계생산이 불변이면 단기총평균비용 곡선은 수평이다.
⑤ 단기한계비용이 단기총평균비용보다 큰 경우 단기총평균비용은 증가한다.

46. 기업 A의 비용함수는 $C=\sqrt{Q}+50$이다. 이 기업이 100개를 생산할 경우, 이윤이 0이 되는 가격은? (단, C는 총비용, Q는 생산량이다.)

① 1 ② 0.6 ③ 0.5 ④ 0.2 ⑤ 0.1

47. 완전경쟁시장에서 시장 수요함수가 $Q=1000-P$이고 기업들의 장기 평균비용은 생산량이 10일 때 100원으로 최소화된다. 이 때 장기균형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단, Q는 수요량, P는 가격이다.)

① 개별 기업의 이윤은 0원이다.
② 개별 기업의 생산량은 10이다.
③ 균형가격은 100원이다.
④ 시장에는 100개의 기업이 존재하게 된다.
⑤ 소비자들은 가격순응자로서 효용을 극대화한다.

48. 기업 A의 생산함수는 $Q=LK$이다. 노동과 자본의 가격이 각각 1원일 때, 다음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단, Q는 생산량, L은 노동, K는 자본이다.)

① 규모에 대한 수익이 체증한다.
② 노동의 한계생산은 체감한다.
③ 자본의 양이 단기적으로 1로 고정되어 있는 경우 100개를 생산하는데 드는 총비용은 101원이다.
④ 자본의 양이 단기적으로 1로 고정되어 있는 경우 단기총평균비용은 생산량이 늘어나면 하락한다.
⑤ 자본의 양이 단기적으로 1로 고정되어 있는 경우 한계비용은 불변이다.

49. 노동과 여가의 선택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단, 여가는 정상재이다.)

① 시간당 임금은 여가 한 시간의 기회비용이다.
② 시간당 임금이 상승할 경우, 소득효과만 고려하면 노동공급이 감소한다.
③ 시간당 임금에 대해 근로소득세율이 상승할 경우, 노동공급이 항상 감소한다.
④ 비근로소득이 증가하는 경우, 노동공급이 항상 감소한다.
⑤ 시간당 임금이 상승할 경우, 대체효과만 고려하면 노동공급이 항상 증가한다.

50. 동전을 던져 앞면이 나오면 9,000원을 따고 뒷면이 나오면 10,000원을 잃는 도박이 있다. 甲은 위험기피자, 乙은 위험애호자, 丙은 위험중립자인 경우 다음 설명으로 옳은 것은?

① 甲의 도박에의 참여 여부는 위험 기피도에 따라 결정될 것이다.
② 도박에 참여하는 대가로 500원을 준다 해도, 甲은 도박에 참여하지 않을 것이다.
③ 丙은 이 도박에 반드시 참여할 것이다.
④ 乙은 이 도박에 반드시 참여할 것이다.
⑤ 앞면이 나올 때 따는 금액을 1,000원 올려 10,000원으로 하고, 뒷면이 나올 때 잃는 금액을 1,000원 내려 9,000원으로 하면 甲, 乙, 丙 모두 이 도박에 반드시 참여할 것이다.

51. X재의 가격이 150원이고, Y재의 가격이 100원이다. 소비자 甲의 Y재에 대한 한계효용이 300이고 효용이 극대화된 상태라면, 甲의 X재에 대한 한계효용은? (단, X > 0, Y > 0이다.)

① 150 ② 200 ③ 300 ④ 450 ⑤ 550

52. 두 재화 X재와 Y재를 甲은 각각 50단위씩, 乙은 각각 30단위씩 갖고 있다. 이 상태에서 X재에 대한 Y재의 한계대체율이 甲은 3이고 乙은 2이다. 甲과 乙 사이에 자유로운 거래가 이루어진다면, X재에 대한 Y재의 교환비율은? (단, 甲과 乙은 효용을 극대화한다.)

① 0이다.
② 1 이상 2 미만이다.
③ 2 이상 3 이하이다.
④ 3보다 크고 4 이하이다.
⑤ 4보다 크다.

53. 수요의 법칙과 공급의 법칙이 성립하는 선풍기 시장에서 선풍기 균형가격의 상승을 유발하는 요인이 아닌 것은? (단, 선풍기는 열등재이다.)

① 대체재인 에어컨 생산기술의 발전으로 좀 더 저렴한 비용으로 에어컨을 생산할 수 있게 되었다.
② 대체재인 에어컨 가격이 상승했다.
③ 여름 날씨가 무척 더워진다는 예보가 있다.
④ 선풍기 물품세가 인상되었다.
⑤ 최근 불황으로 인해 소득이 하락하였다.

54. 단위당 동일한 종량세율로 생산자 또는 소비자에게 부과하는 조세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① 생산자에게 부과할 때와 소비자에게 부과할 때의 경제적 순손실(deadweight loss)은 같다.
② 조세부담의 귀착(tax incidence)은 조세당국과 생산자 및 소비자 간의 협상능력에 의존한다.
③ 수요의 가격탄력성이 클수록 생산자의 조세부담이 커진다.
④ 수요의 가격탄력성이 공급의 가격탄력성보다 클수록 생산자의 조세부담분이 커진다.
⑤ 수요의 가격탄력성이 0인 재화에 조세를 부과해도 사회후생은 감소하지 않는다.

55. 甲과 乙 두 사람이 사는 사회에서 甲의 소득을 X, 乙의 소득을 Y라 표시하고, 이들의 소득 분포는 (X, Y)의 형태로 표시한다. 소득 분포 상태를 평가하는 세 가지 원칙은 아래와 같다. 다음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 A : 사회에서 가장 가난한 사람의 소득이 높을수록 바람직하다. ○ B : 모든 사회 구성원들의 소득의 총합이 클수록 바람직하다. ○ C : 모든 사회 구성원들의 소득이 균등하게 분포될수록 바람직하다.

① 소득분포 (3, 2)와 (5, 1)을 비교할 때, 원칙 A에 따르면 (3, 2)가 더 바람직하다.

② 소득분포 (3, 2)와 (4, 2)를 비교할 때, 원칙 B에 따르면 (4, 2)가 더 바람직하다.

③ 소득분포 (1, 1)과 (4, 1)을 비교할 때, 원칙 C에 따르면 (1, 1)이 더 바람직하다.

④ 소득분포 (3, 3)과 (2, 3)을 비교할 때, 위 세 가지 원칙 모두 (3, 3)을 더 바람직하다고 판단한다.

⑤ 소득분포 (2, 3)과 (7, 3)을 비교할 때, 위 세 가지 원칙 중 (7, 3)이 명백히 더 바람직하다고 판단하는 원칙은 B 뿐이다.

56. 한 시장에 두 기업 A, B가 존재한다. 각 기업은 두 가지 생산 전략 L, H 중 하나를 선택할 수 있다. 두 기업의 생산 전략 선택에 따른 보수는 다음 표와 같다. (단, 표에서 각 셀 좌 하단의 숫자는 기업 A의 보수를, 우 상단의 숫자는 기업 B의 보수를 나타낸다.)

		B: L	B: H
A	L	1 1	0 0
	H	0 0	0 0

다음 설명 중 옳은 것을 모두 고른 것은?

ㄱ. 기업 A의 생산 전략 H는 우월전략이다. ㄴ. 기업 A와 B 모두 생산 전략 L을 선택하는 것은 내쉬균형이다. ㄷ. 기업 A와 B 모두 생산 전략 H를 선택하는 것은 내쉬균형이다.

① ㄱ ② ㄴ ③ ㄷ
④ ㄱ, ㄴ ⑤ ㄴ, ㄷ

57. 외부성에 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을 모두 고른 것은?

ㄱ. 부(−)의 외부성이 존재하면 시장 생산량은 사회적 최적 생산량보다 많다. ㄴ. 외부성은 합병이나 보조금 혹은 조세 등을 통해 내부화시킬 수 있다. ㄷ. 코우즈(R. Coase)에 의하면 외부성이 존재하더라도 재산권이 확립되어 있으면 정부의 개입이 불필요할 수 있다.

① ㄱ ② ㄱ, ㄴ ③ ㄴ, ㄷ
④ ㄱ, ㄷ ⑤ ㄱ, ㄴ, ㄷ

58. 효용극대화를 추구하는 소비자 甲의 효용함수는 $U(x,y)=\min\{x,y\}$이다. 甲의 수요에 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단, 甲은 X재와 Y재만 소비하고, x는 X재 소비량, y는 Y재 소비량을 나타낸다.)

① 수요의 가격탄력성이 0이다.

② 수요의 가격탄력성이 1이다.

③ 수요의 교차탄력성이 0이다.

④ 수요의 교차탄력성이 −1이다.

⑤ 수요의 소득탄력성이 1이다.

59. 국내물가가 4% 상승하고 외국물가가 6% 상승했으며 명목환율이 10% 하락한 경우에 실질환율의 하락 정도는? (단, 명목환율은 외국화폐 단위당 자국화폐의 교환비율이다.)

① 4% ② 6% ③ 8% ④ 10% ⑤ 12%

60. 국제거래 중 우리나라의 경상수지 흑자를 증가시키는 것은?

① 외국인이 우리나라 기업의 주식을 매입하였다.

② 우리나라 학생의 해외 유학이 증가하였다.

③ 미국 기업이 우리나라에 자동차 공장을 건설하였다.

④ 우리나라 기업이 중국 기업으로부터 특허료를 지급받았다.

⑤ 우리나라 기업이 외국인에게 주식투자에 대한 배당금을 지급하였다.

61. 개방경제의 국민소득계정에 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을 모두 고른 것은?

ㄱ. 국민소득이 소비, 투자, 정부지출의 합보다 큰 경우에 순수출은 반드시 양(+)이 된다. ㄴ. 민간 투자가 민간 저축보다 더 큰 경우에 순수출은 반드시 양(+)이 된다. ㄷ. 정부 세금 수입이 지출보다 더 큰 경우에 순수출은 반드시 양(+)이 된다.

① ㄱ ② ㄴ ③ ㄷ
④ ㄱ, ㄴ ⑤ ㄴ, ㄷ

62. A국은 자본이 상대적으로 풍부하고 B국은 노동이 상대적으로 풍부하다. 양국 간의 상품이동이 완전히 자유로워지고 양 국가가 부분 특화하는 경우, 헥셔-올린(Heckscher-Ohlin)모형과 스톨퍼-새뮤엘슨(Stolper-Samuelson)정리에서의 결과와 부합하는 것을 모두 고른 것은?

ㄱ. 두 국가의 자본가격은 같아진다. ㄴ. B국 자본가의 실질소득이 증가한다. ㄷ. A국 노동자의 실질소득이 감소하는 반면, B국 노동자의 실질소득은 증가한다.

① ㄱ ② ㄱ, ㄴ ③ ㄱ, ㄷ
④ ㄴ, ㄷ ⑤ ㄱ, ㄴ, ㄷ

63. 총수요-총공급 모형에서 총수요곡선을 이동시키는 요인으로 옳지 않은 것은?

① 원유 등 주요 원자재 가격의 하락
② 가계의 신용카드 사용액에 대한 소득공제 축소
③ 신용카드사기 증가로 현금사용 증가
④ 가계의 미래소득에 대한 낙관적인 전망
⑤ 유럽의 재정위기로 인한 유로지역 수출 감소

64. 폐쇄경제 IS-LM 모형과 관련된 설명으로 옳은 것은? (단, IS 곡선은 우하향, LM 곡선은 우상향한다.)

① IS 곡선과 LM 곡선에서 총공급 곡선이 도출된다.
② 정부지출의 구축효과는 발생하지 않는다.
③ 현재 경제상태가 IS 곡선의 왼쪽, LM 곡선의 오른쪽에 있다면 상품시장은 초과공급, 화폐시장은 초과수요 상태이다.
④ 피구효과(Pigou effect)에 의하면 물가수준이 하락할 때 IS 곡선이 우측으로 이동하여 국민소득이 증가한다.
⑤ IS-LM 모형에서 물가수준은 내생변수이다.

65. 고전학파의 화폐수량설에 따를 때, 통화량이 증가하는 경우 다음 설명 중 옳은 것은?

① 화폐유통속도가 감소한다.
② 화폐유통속도가 증가한다.
③ 물가가 상승한다.
④ 물가가 하락한다.
⑤ 명목 GDP는 불변이다.

66. 경제 내에 생산가능인구(working age population)가 5천만 명, 실업자가 5백만 명, 그리고 취업자가 2천만 명으로 파악되었다. 이 경제의 경제활동참가율과 고용률은?

① 50%, 40% ② 50%, 80% ③ 40%, 40%
④ 40%, 60% ⑤ 40%, 80%

67. 명목 GDP(국내총생산)와 명목 GNI(국민총소득)에 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을 모두 고른 것은?

ㄱ. 폐쇄경제에서 명목 GDP는 명목 GNI와 크기가 같다. ㄴ. 한국인이 해외에서 벌어들인 요소소득이 외국인이 한국에서 벌어들인 요소소득보다 더 큰 경우에 명목 GDP가 명목 GNI보다 더 크다. ㄷ. 외국인이 한국에서 벌어들인 근로소득은 한국의 GDP에 포함된다. ㄹ. 한국인이 해외에서 벌어들인 이자수입은 한국의 GDP에 포함된다.

① ㄱ, ㄴ ② ㄱ, ㄷ ③ ㄴ, ㄷ
④ ㄴ, ㄹ ⑤ ㄷ, ㄹ

68. 인플레이션 조세(inflation tax)에 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① 물가가 상승함에 따라 납세자들이 더 높은 세율등급을 적용받아 납부하는 소득세로 정의된다.

② 물가가 상승함에 따라 경제주체가 보유하고 있는 통화의 실질가치가 상승할 때 발생한다.

③ 세율이 인상됨에 따라 인플레이션율이 상승하는 것을 의미한다.

④ 정부가 정부채권을 시중금융기관으로부터 매입함으로써 발생한 이자율 하락으로 인한 금융자산의 가격하락을 의미한다.

⑤ 정부가 통화량을 증가시켜 재정자금을 조달할 때 발생한다.

69. 다음의 폐쇄경제 모형에서 생산물시장과 화폐시장을 동시에 균형시키는 물가수준은? (단, Y는 국민소득, C는 소비, I는 투자, G는 정부지출, r은 이자율, M^d는 명목화폐수요, M^s는 명목화폐공급, P는 물가수준이다.)

$Y = C + I + G$(생산물시장의 균형)
$Y = 100$
$C = 20 + 0.5Y$
$I = 30 - 50r$
$G = 10$
$M^s = M^d$(화폐시장의 균형)
$\frac{M^d}{P} = 0.01Y - r$
$M^s = 20$

① 15 ② 25 ③ 50 ④ 75 ⑤ 100

70. 실물경기변동이론(real business cycle theory)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① 경기변동의 요인으로 기술 충격의 중요성을 강조한다.

② 노동시장은 항상 균형을 이룬다.

③ 경기변동은 시간에 따른 균형의 변화로 나타난다.

④ 불경기에도 생산의 효율성은 달성된다.

⑤ 생산성은 경기역행적(counter-cyclical)이다.

71. 솔로우(R. Solow) 성장모형에서 일인당 생산함수는 $y = k^{1/2}$, 저축률은 12%, 인구증가율은 1%, 자본의 감가상각률은 2%이다. 다음 설명 중 옳은 것을 모두 고른 것은? (단, y는 일인당 생산량, k는 일인당 자본량이다.)

ㄱ. 균제상태(steady state)에서 일인당 산출량은 4이다.
ㄴ. 자본소득분배율과 노동소득분배율은 같다.
ㄷ. 균제상태에서 황금률(golden rule)이 달성되고 있다.

① ㄱ ② ㄴ ③ ㄱ, ㄴ
④ ㄴ, ㄷ ⑤ ㄱ, ㄴ, ㄷ

72. 소비이론에 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① 피셔(I. Fisher)의 기간 간 소비선택이론에 따르면 차입제약이 없는 경우 이자율은 현재소비에 영향을 줄 수 없다.

② 항상소득가설(permanent income hypothesis)은 소비자들이 유동성제약에 처해있다고 전제한다.

③ 생애주기가설(life cycle hypothesis)은 현재소비는 현재소득에만 의존한다고 전제한다.

④ 항상소득가설에 따르면 평균소비성향은 현재소득에 대한 항상소득의 비율에 의존한다.

⑤ 케인즈 소비함수에서 소득이 증가할 때 평균소비성향은 항상 일정하다.

73. A국의 연간 실질 GDP 변화율과 실업률의 변화가 다음과 같은 관계에 있다. 이에 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실질 GDP 변화율(%) = 3% − 2 × 실업률(%)의 변화

① 자연실업률은 3%이다.

② 실업률이 5%에서 6%로 상승하면 실질 GDP는 2% 감소한다.

③ 실질 GDP가 1% 하락하면 실업률은 5%에서 5.5%로 상승한다.

④ 물가가 상승하면 단기적으로 실질 GDP가 감소한다.

⑤ 실업률이 변화하지 않을 경우 실질 GDP는 3% 증가한다.

74. 우리나라에서 산정되는 물가지수에 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① 소비자물가지수 산정에 포함되는 재화와 용역은 해마다 달라진다.

② GDP 디플레이터 산정에는 파셰 지수(Paasche Index) 산식을 사용한다.

③ 소비자물가지수 산정에는 국내에서 생산되는 재화와 용역만 포함된다.

④ 생산자물가지수 산정에 포함되는 재화와 용역은 해마다 달라진다.

⑤ GDP 디플레이터 산정에 포함되는 재화와 용역은 5년 마다 달라진다.

75. 정기예금의 실질 수익률은 실질 이자율이다. 현금 보유의 실질 수익률은?

① 실질 이자율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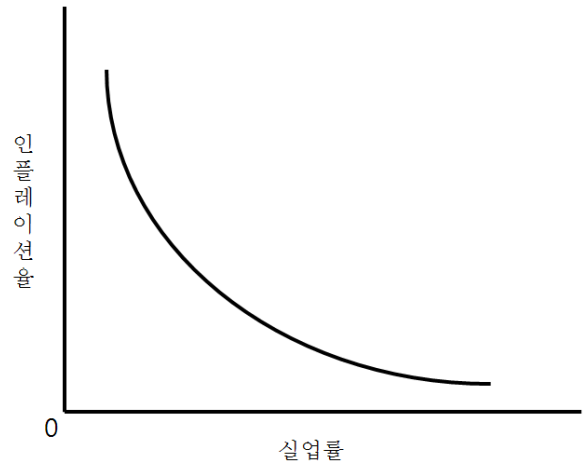
② 실질 이자율의 마이너스 값

③ 인플레이션율

④ 인플레이션율의 마이너스 값

⑤ 실질 이자율과 인플레이션율의 합

76. 다음 그림은 A국의 인플레이션율과 실업률 사이의 단기적 상충관계를 나타내는 필립스곡선이다. 이 관계에 근거하여 단기적으로 실업률을 낮추기 위한 정부의 정책 방향으로 옳은 것은? (단, 세로축은 인플레이션율, 가로축은 실업률이고, 단위는 %이다.)



① 정부지출을 감소시킨다.

② 소득세를 인하한다.

③ 통화량을 감소시킨다.

④ 기준금리를 인상한다.

⑤ 법인세를 인상한다.

77. 중앙은행은 아래와 같은 테일러 준칙(Taylor rule)에 따라 명목이자율을 조정한다. 이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단, i는 명목이자율, π는 인플레이션율, π^*는 목표 인플레이션율, Y^*는 잠재 GDP, Y는 실제 GDP, $(Y^* - Y)/Y^*$는 총생산 갭이다.)

$$i = 0.05 + \pi + 0.5(\pi - \pi^*) - 0.5(Y^* - Y)/Y^*$$

① 목표 인플레이션율이 낮아지면 중앙은행은 명목이자율을 인상한다.

② 실제 GDP가 잠재 GDP보다 더 큰 경우에 중앙은행은 명목이자율을 인상한다.

③ 총생산 갭은 0이고 인플레이션율이 3%에서 4%로 상승하는 경우에, 중앙은행은 명목이자율을 0.5%포인트(%p) 인상한다.

④ 인플레이션율이 목표치와 같고 실제 GDP가 잠재 GDP와 같다면 실질이자율은 5%가 된다.

⑤ 인플레이션율은 목표치와 같고 총생산 갭이 0%에서 1%로 상승하는 경우에, 중앙은행은 명목이자율을 0.5%포인트(%p) 인하한다.

78. 중앙은행의 통화량 조절 방법에 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① 법정지급준비율을 인상하면 시중은행이 예금액 중에서 대출할 수 있는 금액이 증가한다.

② 중앙은행이 국채를 시중은행 A에 매도하면 시중은행 A의 지급준비금은 증가한다.

③ 법정지급준비율을 인하하면 예금통화승수는 감소한다.

④ 재할인율을 인상하면 통화량이 증가한다.

⑤ 중앙은행이 민간인들이 보유하고 있는 국채를 매입하면 통화량은 증가한다.

79. 마찰적 실업의 원인을 모두 고른 것은?

ㄱ. 노동자들이 자신에게 가장 잘 맞는 직장을 찾는데 시간이 걸리기 때문이다.
ㄴ. 기업이 생산성을 제고하기 위해 시장균형임금보다 높은 수준의 임금을 지불하는 경향이 있기 때문이다.
ㄷ. 노동조합의 존재로 인해 조합원의 임금이 생산성보다 높게 설정되기 때문이다.

① ㄱ ② ㄴ ③ ㄷ
④ ㄱ, ㄴ ⑤ ㄴ, ㄷ

80. 합리적 경제주체들이 인플레이션율을 6%로 예상하고 다음과 같은 경제행위를 하였다. 실제 인플레이션율이 3%일 때 손해를 보는 경제주체를 모두 고른 것은?

ㄱ. 고정금리로 정기예금에 가입한 가계
ㄴ. 고정된 봉급의 임금계약을 체결한 근로자
ㄷ. 고정금리로 국채를 발행한 정부
ㄹ. 고정금리로 주택담보 대출을 받은 차입자

① ㄱ, ㄴ ② ㄴ, ㄷ ③ ㄷ, ㄹ
④ ㄱ, ㄷ ⑤ ㄴ, ㄹ

제23회 감정평가사 제1차 시험 최종정답

○ 1교시 A형

민법

1	3	2	3	3	2	4	4	5	3
6	5	7	4	8	2	9	3	10	4
11	3	12	1	13	2	14	1	15	4
16	1,2,3,4,5	17	4	18	3	19	3	20	2
21	2	22	3	23	5	24	2	25	5
26	4	27	5	28	1	29	2	30	5
31	1	32	5	33	5	34	5	35	1
36	4	37	2	38	1	39	1	40	4

경제원론

41	4	42	1	43	3	44	4	45	4
46	2	47	1	48	2	49	3	50	2
51	4	52	3	53	1	54	2	55	5
56	5	57	5	58	5	59	3	60	3
61	1	62	4	63	1	64	4	65	3
66	2	67	1	68	5	69	2	70	5
71	5	72	4	73	3	74	2	75	4
76	2	77	3	78	5	79	1	80	3

○ 1교시 B형

민법

1	2	2	3	3	3	4	5	5	3
6	4	7	4	8	2	9	1	10	4
11	3	12	3	13	4	14	1	15	2
16	1,2,3,4,5	17	4	18	3	19	3	20	2
21	2	22	3	23	2	24	5	25	5
26	4	27	5	28	1	29	2	30	5
31	1	32	5	33	5	34	5	35	4
36	1	37	2	38	1	39	1	40	4

경제원론

41	1	42	1	43	3	44	4	45	4
46	2	47	4	48	2	49	3	50	2
51	4	52	3	53	1	54	2	55	5
56	5	57	5	58	5	59	3	60	4
61	1	62	3	63	1	64	4	65	3
66	1	67	2	68	5	69	2	70	5
71	3	72	4	73	5	74	2	75	4
76	2	77	3	78	5	79	1	80	3

○ 2교시 A형

회계학

1	5	2	1	3	5	4	2	5	2
6	2	7	4	8	5	9	1	10	4
11	3	12	3	13	5	14	5	15	3
16	3	17	1	18	2	19	4	20	5
21	4	22	3	23	3	24	4	25	3
26	2	27	3	28	4	29	1	30	2
31	1	32	2	33	2	34	5	35	4
36	4	37	1	38	2	39	1	40	3

부동산관계법규

41	3	42	5	43	4	44	4	45	5
46	1	47	5	48	5	49	1	50	2
51	2	52	1	53	3	54	4	55	5
56	3	57	1	58	4	59	1	60	3
61	4	62	5	63	5	64	3	65	4
66	1	67	2	68	1,2,3,4,5	69	1	70	2
71	3	72	5	73	2	74	4	75	3
76	2	77	5	78	4	79	4	80	2

○ 2교시 B형

회계학

1	1	2	5	3	5	4	2	5	2
6	2	7	5	8	4	9	4	10	1
11	3	12	5	13	5	14	3	15	3
16	1	17	3	18	2	19	5	20	4
21	3	22	3	23	4	24	3	25	2
26	4	27	4	28	3	29	1	30	2
31	1	32	2	33	5	34	2	35	4
36	4	37	1	38	2	39	3	40	1

부동산관계법규

41	5	42	3	43	4	44	5	45	4
46	5	47	1	48	5	49	1	50	2
51	1	52	2	53	3	54	5	55	4
56	3	57	1	58	3	59	4	60	1
61	4	62	5	63	3	64	5	65	4
66	2	67	1	68	1,2,3,4,5	69	2	70	1
71	5	72	3	73	2	74	3	75	4
76	2	77	5	78	4	79	2	80	4

제23회 감정평가사 제1차 시험 최종정답

부동산관계법규									
41	③	49	①	57	①	65	④	73	②
42	⑤	50	②	58	④	66	①	74	④
43	④	51	②	59	①	67	②	75	③
44	④	52	①	60	③	68	모두정답	76	②
45	⑤	53	③	61	④	69	①	77	⑤
46	①	54	④	62	⑤	70	②	78	④
47	⑤	55	⑤	63	⑤	71	③	79	④
48	⑤	56	③	64	③	72	⑤	80	②

2012년도 제23회 감정평가사 제1차 국가자격시험 문제지

교시	형별	시험과목	시험시간	수험번호	성명
2교시	B	1 회계학 2 부동산관계법규	80분		

< 유 의 사 항 >

○ 문제지 인쇄상태 및 매수 확인
○ 문제지에 수험번호와 성명 기재
○ 답안카드에 문제지 형별 기재 및 마킹
○ 시험종료시 답안카드 즉시 제출(미제출시 시험무효)
○ 의견제시에 대한 개별회신은 하지 않으며, 최종 정답 발표로 갈음함
○ 시험시행계획 공고일(2012.3.30) 현재 시행되는 법령, 회계처리 등을 적용(회계처리 등과 관련된 시험문제는 한국채택국제회계기준(K-IFRS) 적용)
○ 신분증 미지참자 및 사진상이자는 지정기일까지 공단 방문 후 신분확인을 받아야 함
○ 시험시간 중에는 중도퇴실이 불가하며, 시험포기자의 경우에는「시험포기각서」를 제출하시고 퇴실하여야 하며, 퇴실 후 재입실 불가(단, 설사, 배탈 등 긴급시 퇴실 가능하나 재입실 불가 및 해당교시 종료시까지 시험본부 대기)
○ 기타 공고된 수험자 유의사항 미준수시 그에 따른 책임은 수험자에게 있음

회 계 학

※ 아래의 문제들에서 특별한 언급이 없는 한 기업의 보고기간(회계기간)은 매년 1월 1일부터 12월 31일까지이다. 또한, 기업은 주권상장법인으로 한국채택국제회계기준(K-IFRS)을 계속해서 적용해오고 있다고 가정하고 답지항 중에서 물음에 가장 합당한 답을 고르시오. 단, 자료에서 제시한 것 이외의 사항은 고려하지 않고 답한다. 예를 들어, 법인세에 대한 언급이 없으면 법인세 효과는 고려하지 않는다.

1. 유형자산의 취득원가에 포함되지 않는 것은?

① 유형자산과 관련된 산출물에 대한 수요가 형성되는 과정에서 발생하는 가동손실과 같은 초기 가동손실
② 설치장소 준비 원가
③ 유형자산이 정상적으로 작동되는지 여부를 시험하는 과정에서 발생하는 원가
④ 최초의 운송 및 취급관련 원가
⑤ 설치원가 및 조립원가

2. 재무보고를 위한 개념체계의 '유용한 재무정보의 질적 특성'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① 보강적 질적 특성은 정보가 목적적합하지 않거나 충실하게 표현되지 않으면, 개별적으로든 집단적으로든 그 정보를 유용하게 할 수 없다.
② 재무정보가 예측가치를 갖기 위해서 그 자체가 예측치 또는 예상치일 필요는 없다.
③ 보강적 질적 특성을 적용하는 것은 어떤 규정된 순서를 따르지 않는 반복적인 과정으로, 때로는 하나의 보강적 질적 특성이 다른 질적 특성의 극대화를 위해 감소되어야 할 수도 있다.
④ 중요성은 개별 기업 재무보고서 관점에서 해당 정보와 관련된 항목의 성격이나 규모 또는 이 둘 모두에 근거하여 해당 기업에 특유한 측면의 목적적 합성을 의미한다.
⑤ 보강적 질적 특성에는 비교가능성, 검증가능성, 적시성 및 충실한 표현이 있다.

3. (주)강남은 (주)대한으로부터 공정가치 ₩6,500,000의 기계장치를 리스하였다. 리스기간은 20×1년 초부터 20×4년 말까지 4년이고, 리스료는 매년 말 ₩2,000,000씩 후급하기로 하였으며, 추정 잔존가치 ₩120,000 중 ₩100,000을 (주)강남이 보증하기로 하였다. 이 리스는 금융리스에 해당되고, 내재이자율은 10%이며, 동 리스자산은 정액법으로 감가상각한다. (주)강남이 리스와 관련하여 20×1년에 계상할 총비용은? (단, 기간말 단일금액의 현가계수(4기간, 10%)는 0.6830, 정상연금의 현가계수(4기간, 10%)는 3.1670이다.)

① ₩1,570,325 ② ₩1,575,575 ③ ₩1,975,000
④ ₩2,000,000 ⑤ ₩2,215,805

4. (주)한국은 20×1년 12월 31일에 3개의 사업부 중 사업부 A를 매각하기로 결정하였다. (주)한국과 사업부 A의 20×1년 12월 31일 자산과 부채의 장부금액 및 20×1년의 수익과 비용 발생금액은 다음과 같다. 사업부 A의 자산은 모두 비유동자산으로 순공정가치가 ₩1,800이며, 부채의 순공정가치는 장부금액과 동일하다.

구 분	(주)한국	사업부 A
자 산	₩10,000	₩2,000
부 채	6,000	1,500
자 본	4,000	–
수 익	8,000	1,000
비 용	6,000	700

(주)한국의 20×1년 포괄손익계산서에 표시될 계속영업손익과 중단영업손익은?

① 계속영업이익 ₩2,000 중단영업이익 ₩100
② 계속영업이익 ₩1,700 중단영업이익 ₩100
③ 계속영업이익 ₩1,800 중단영업이익 ₩100
④ 계속영업이익 ₩1,700 중단영업이익 ₩300
⑤ 계속영업이익 ₩2,000 중단영업이익 ₩300

5. (주)대한은 20×1년 초 총계약금액이 ₩600,000인 교량 신축공사를 수주하였다. 공사기간은 20×1년 초부터 3년이며, 20×1년에 이 교량의 총계약원가는 ₩500,000으로 추정되었으나 완공 후 실제 총원가는 ₩540,000이 소요되었다. 다음 자료를 이용하여 (주)대한이 진행기준에 따라 인식할 20×2년 계약이익은?

	20×1년	20×2년	20×3년
실제발생 누적계약원가	₩200,000	₩390,000	₩540,000
완성시까지 잔여계약원가 예상액	300,000	130,000	–

① ₩10,000 ② ₩20,000 ③ ₩30,000
④ ₩40,000 ⑤ ₩50,000

6. 다음 자료를 이용하여 계산한 기말매입채무 잔액은? (단, 매입은 모두 외상으로 한다.)

기초매입채무	₩ 8,000	매입채무상환	₩35,000
기초상품재고	12,000	기말상품재고	11,000
당기매출	50,000	매출총이익	10,000

① ₩11,000 ② ₩12,000 ③ ₩13,000
④ ₩14,000 ⑤ ₩15,000

7. 유형자산의 감가상각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① 유형자산을 구성하는 일부의 원가가 당해 유형자산의 전체원가에 비교하여 유의적이라면, 해당 유형자산을 감가상각할 때 그 부분은 별도로 구분하여 감가상각한다.
② 유형자산의 전체원가에 비교하여 해당 원가가 유의적이지 않은 부분도 별도로 분리하여 감가상각할 수 있다.
③ 각 기간의 감가상각액은 다른 자산의 장부금액에 포함되는 경우가 아니라면 당기손익으로 인식한다.
④ 유형자산의 잔존가치와 내용연수는 적어도 매 회계연도말에 재검토한다.
⑤ 감가상각방법은 해당 자산의 공정가치 감소형태에 따라 선택한다.

8. (주)강남은 사옥을 건설하기 위하여 20×2년 1월 1일에 (주)대한과 건설계약을 체결하였다. (주)강남의 사옥은 20×3년 6월 30일에 준공될 예정이고, (주)강남은 사옥건설을 위해 다음과 같이 지출하였다.

일자	20×2.1.1	20×2.7.1	20×2.10.1	20×3.1.1
금액	₩50,000	₩50,000	₩60,000	₩70,000

(주)강남의 차입금은 다음과 같다.

차입금	차입일	차입금액	상환일
K은행	20×2.1.1	₩50,000	20×3.6.30
A은행	20×1.1.1	₩30,000	20×3.6.30
B은행	20×1.1.1	₩50,000	20×4.12.31

차입금	이자율	이자지급조건
K은행	12%	단리/매년말지급
A은행	10%	단리/매년말지급
B은행	12%	단리/매년말지급

이들 차입금 중 K은행에서의 차입금은 (주)강남의 사옥건설을 위한 특정차입금이며, A은행 차입금과 B은행 차입금은 일반차입금이다. (주)강남의 건설중인 사옥은 차입원가 자본화의 적격자산에 해당된다. 이에 대하여 (주)강남이 20×2년 자본화할 차입원가의 금액은?

① ₩4,500 ② ₩6,000 ③ ₩9,000
④ ₩10,500 ⑤ ₩13,500

9. 회계변경과 오류수정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① 기업은 회계정책의 변경을 반영한 재무제표가 거래, 기타 사건 또는 상황이 재무상태, 재무성과 또는 현금흐름에 미치는 영향에 대하여 신뢰성 있고 더 목적적합한 정보를 제공하는 경우 회계정책을 변경할 수 있다.

② 특정 범주별로 서로 다른 회계정책을 적용하도록 규정하거나 허용하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유사한 거래, 기타 사건 및 상황에는 동일한 회계정책을 선택하여 일관성 있게 적용한다.

③ 과거에 발생한 거래와 실질이 다른 거래에 대하여 다른 회계정책을 적용하는 경우는 회계정책의 변경에 해당하지 않는다.

④ 당기 기초시점에 과거기간 전체에 대한 새로운 회계정책 적용의 누적효과를 실무적으로 결정할 수 없는 경우, 실무적으로 적용할 수 있는 가장 이른 날부터 새로운 회계정책을 소급적용하여 비교정보를 재작성한다.

⑤ 전기오류는 특정기간에 미치는 오류의 영향이나 오류의 누적효과를 실무적으로 결정할 수 없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소급재작성에 의하여 수정한다.

10. (주)서울은 사옥을 건설하기 위하여 토지를 구입한 후 토지 위에 있던 건물을 철거하면서 철거비용 ₩150,000을 지불하였으며, 철거할 때 나온 철근을 ₩19,000에 매각하였다. (주)서울은 공유도로로부터 사옥까지 도로공사비 ₩80,000, 신축건물의 설계비 ₩100,000, 신축건물 건설을 위한 측량비 ₩45,000, 신축건물 건설공사비 ₩450,000, 신축건물 완성 후 조경공사비 ₩270,000을 지불하였다. 이 경우 건물의 취득원가는?

① ₩595,000 ② ₩726,000 ③ ₩745,000
④ ₩806,000 ⑤ ₩825,000

11. 다음은 20×1년 (주)서울의 기초와 기말 재무상태에 관한 자료이다.

	기초	기말
자산총계	₩25,000	₩27,000
부채총계	16,000	15,000

당기 중에 배당으로 현금 ₩400의 지급과 주식교부(금액 ₩100)가 있었고, 유형자산재평가이익 ₩100이 발생하였다면 20×1년 당기순이익은?

① ₩3,000 ② ₩3,200 ③ ₩3,300
④ ₩3,400 ⑤ ₩3,500

12. 다음 자료를 이용하여 계산한 (주)한국의 20×1년 매출액순이익률은?

자산총액	₩900억
자기자본순이익률 (당기순이익/자본)	15%
총자산회전율	0.5회
부채비율(부채/자본)	200%
・기초자산과 기말자산 금액은 동일 ・기초자본과 기말자본 금액은 동일	

① 2% ② 4% ③ 6% ④ 8% ⑤ 10%

13. 다음 자료를 이용하여 계산한 현금및현금성자산은?

보관중인 현금	₩100	받을어음	₩400
요구불예금	200	선급금	500
자기앞수표	600	우편환증서	300

① ₩100 ② ₩300 ③ ₩700
④ ₩900 ⑤ ₩1,200

14. (주)남부는 20×1년 1월 1일 설비자산을 ₩2,000,000에 취득하면서 구입자금의 일부인 ₩600,000을 정부로부터 보조받았다. 설비자산의 내용연수는 5년, 잔존가치는 없으며, 감가상각방법은 정액법으로 한다. 정부보조금에 부수되는 조건은 이미 충족되었고 상환의무는 없다. (주)남부가 정부보조금을 이연수익으로 처리하는 경우 20×3년 12월 31일 재무상태표에 보고할 정부보조금과 관련된 이연수익은?

① ₩120,000 ② ₩220,000 ③ ₩240,000
④ ₩360,000 ⑤ ₩440,000

15. (주)서울은 20×1년 12월 1일에 창고의 화재로 인하여 재고자산 전부와 회계장부의 일부가 소실되었다. 기초재고자산 ₩360,000, 당기순매입액 ₩900,000, 당기순매출액 ₩1,200,000 이고, 과거 3년간 평균매출총이익률이 30%라면 화재 직전 창고에 남아 있었던 재고자산은?

① ₩370,000 ② ₩378,000 ③ ₩420,000
④ ₩470,000 ⑤ ₩490,000

16. 충당부채, 우발부채 및 우발자산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① 소송이 진행중인 경우는 보고기간 말에 현재의무가 존재하지 아니할 가능성이 높더라도 경제적 효익이 내재된 자원의 유출가능성이 아주 낮지 않는 한 충당부채로 공시한다.

② 우발부채는 경제적 효익이 내재된 자원의 유출을 초래할 현재의무가 있는지의 여부가 아직 확인되지 아니한 잠재적 의무이다.

③ 충당부채는 현재의무이고 이를 이행하기 위하여 경제적 효익이 내재된 자원이 유출될 가능성이 높고 당해 금액을 신뢰성 있게 추정할 수 있으므로 부채로 인식한다.

④ 충당부채로 인식하는 금액은 현재의무를 보고기간 말에 이행하기 위하여 소요되는 지출에 대한 최선의 추정치이어야 한다.

⑤ 미래에 전혀 실현되지 아니할 수도 있는 수익을 인식하는 결과를 초래할 수 있기 때문에 우발자산은 재무제표에 인식하지 아니한다.

17. (주)한국은 매년 말 모든 자산에 대하여 손상검사를 실시하고 있으며, 20×1년 말 실시한 손상검사로 영업권 손상차손 ₩5,000, 토지 손상차손 ₩20,000, 기계장치 손상차손 ₩20,000이 발생하였다. 20×1년 초 토지에 대한 재평가잉여금이 ₩30,000일 때, 손상차손 회계처리가 20×1년 포괄손익계산서의 당기순이익과 총포괄이익에 미치는 영향은?

① 당기순이익 ₩ 5,000감소, 총포괄이익 ₩ 5,000감소
② 당기순이익 ₩25,000감소, 총포괄이익 ₩20,000감소
③ 당기순이익 ₩25,000감소, 총포괄이익 ₩45,000감소
④ 당기순이익 ₩45,000감소, 총포괄이익 ₩25,000감소
⑤ 당기순이익 ₩45,000감소, 총포괄이익 ₩45,000감소

18. (주)서울은 20×1년 중에 ₩10,100을 지급하고 지분상품을 취득하였는데, 지급액 중 ₩100은 매매수수료이다. 20×1년 말 현재 지분상품의 공정가치는 ₩11,000이며, (주)서울은 20×2년 초에 지분상품 전체를 ₩11,200에 처분하였다. (주)서울이 이 지분상품을 단기매매금융자산으로 인식할 경우, 이에 대한 회계처리가 20×1년과 20×2년 당기순이익에 미치는 영향은?

① 20×1년 ₩100 감소, 20×2년 ₩1,200 증가
② 20×1년 ₩900 증가, 20×2년 ₩200 증가
③ 20×1년 ₩900 증가, 20×2년 ₩900 증가
④ 20×1년 ₩1,000 증가, 20×2년 ₩200 증가
⑤ 20×1년 ₩1,000 증가, 20×2년 ₩1,200 증가

19. 무형자산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① 무형자산은 물리적 실체는 없지만 식별가능한 비화폐성자산을 말하며, 식별가능성은 자산의 분리가능성 여부와 계약상 또는 법적 권리여부에 의해 판단할 수 있다.

② 무형자산으로 분류되기 위해서는, 식별가능해야 하고, 통제하고 있어야 하며, 그로부터 미래경제적 효익이 창출되어야 한다.

③ 광물자원과 관련된 지출은 해당자산이 기술적 실현가능성과 상업화가능성이 있다고 판단되어 개발활동을 시작하면 이 단계부터의 지출을 탐사평가자산이 아닌 개발비로 인식한다.

④ 무형자산이 한정할 수 없는 기간동안 순현금유입을 창출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면 그 무형자산은 비한정내용연수를 가지며, 상각하지 아니한다.

⑤ 무형자산의 공정가치는 합리적인 공정가치측정치의 범위의 편차가 자산가치에 비하여 유의적일 때 신뢰성 있게 측정할 수 있다.

20. (주)서울은 20×1년 1월 1일 ₩1,000,000에 기계장치를 취득하여 사용하기 시작하였다. 기계장치의 내용연수는 5년이고 잔존가치 없이 정액법으로 상각하며 원가모형을 적용한다. (주)서울은 20×2년부터 기계장치에 대해서 재평가모형을 최초 적용하기로 하였다. 또한 내용연수를 재검토한 결과 당초 내용연수를 5년이 아니라 6년으로 재추정하였다. 20×2년 12월 31일 기계장치의 공정가치는 ₩700,000이다. (주)서울이 20×2년에 인식할 기계장치의 감가상각비와 20×2년 12월 31일 재평가잉여금의 잔액은?

① 감가상각비 ₩133,333 재평가잉여금 ₩33,333
② 감가상각비 ₩133,333 재평가잉여금 ₩0
③ 감가상각비 ₩166,667 재평가잉여금 ₩66,667
④ 감가상각비 ₩160,000 재평가잉여금 ₩60,000
⑤ 감가상각비 ₩160,000 재평가잉여금 ₩0

21. 20×1년 1월 1일에 (주)한국은 20×1년 12월 31일부터 매년 말 ₩100,000씩 3년간 수취하는 조건으로 상품을 할부판매하였다. 이 상품의 현금판매가격은 ₩257,710으로 취득 당시의 유효이자율 8%를 반영하여 결정된 것이다. 유효이자율법을 적용하여 회계처리하는 경우, 20×1년 12월 31일 판매대금 ₩100,000을 회수할 때 인식하여야 하는 이자수익은? (단, 계산금액은 소수점 첫째자리에서 반올림한다.)

① ₩8,000 ② ₩16,000 ③ ₩20,617
④ ₩22,266 ⑤ ₩24,000

22. (주)한국은 제품 판매를 촉진하기 위하여 제품을 구입하는 고객에게 판매액 ₩1,000마다 1장씩의 경품권을 교부하고 있으며, 경품권 1장과 현금 ₩100을 가져오는 고객에게 경품용 제품 1개를 제공하고 있다. (주)한국은 경품용 제품을 개당 ₩300에 구입하였으며, 교부한 경품권 중 60%가 회수될 것으로 추정하고 있다. 경품과 관련된 다음 자료를 이용하여 계산한 (주)한국의 20×2년 말 경품부채 잔액은?

· 20×1년 말 경품부채 ₩120,000
· 20×2년 제품 매출액 ₩2,400,000
· 20×2년 중 회수된 경품권 1,000장

① ₩108,000 ② ₩160,000 ③ ₩208,000
④ ₩288,000 ⑤ ₩408,000

23. (주)한국은 20×6년 초 (주)서울을 매수하기로 하였다. 다음 자료를 이용하여 초과이익을 고려한 (주)한국의 (주)서울에 대한 매수금액은?

· (주)서울의 20×5년 말 자산의 공정가치 합계는 ₩1,500,000이고, 부채의 공정가치 합계는 ₩200,000이다.
· 과거 5년간 (주)서울의 당기순이익은 아래와 같으며, 20×3년 당기순이익에는 중단사업이익 ₩200,000이 포함되어 있다.

· 20×1년	₩150,000	· 20×4년	₩240,000
· 20×2년	₩100,000	· 20×5년	₩120,000
· 20×3년	₩300,000		

· 정상이익률은 동일업종의 평균이익률인 10%, (주)한국이 기대하는 투자수익률은 20%이다.
· 초과이익은 영구적이라고 가정한다.

① ₩710,000 ② ₩1,100,000 ③ ₩1,148,000
④ ₩1,360,000 ⑤ ₩1,560,000

24. 다음 자료를 이용하여 계산한 기말재고액은?

· 기초재고액 ₩10,000
· 3월 8일 상품 ₩60,000 매입
· 11월 3일 원가 ₩45,000(판매가격 ₩60,000)인 상품을 시용판매하기 위하여 고객에게 배송
· 12월 20일 고객으로부터 판매가격 ₩40,000에 해당하는 시송품의 매입의사통지 수취
· 기말 실지재고액 ₩20,000

① ₩20,000 ② ₩29,500 ③ ₩35,000
④ ₩39,500 ⑤ ₩45,500

25. (주)대한은 내용연수가 종료되면 원상복구를 해야 하는 구축물을 20×1년 1월 1일에 취득하였다. 구축물의 취득원가는 ₩4,000,000이고, 감가상각은 정액법(내용연수는 5년, 잔존가치는 ₩200,000)을 사용하기로 하였다. 복구원가와 관련된 예상현금흐름의 현재가치는 ₩376,000(할인율 8%)으로 추정되었다. 복구공사시점인 20×6년 1월 1일에 실제 복구비가 ₩600,000 소요된 경우 복구공사손실은? (단, 계산금액은 소수점 첫째자리에서 반올림한다. 기간말 단일금액의 미래가치계수(5기간, 8%)는 1.4693이다.)

① ₩30,080 ② ₩47,543 ③ ₩150,400
④ ₩224,000 ⑤ ₩552,456

26. (주)한국은 20×1년 사업결합과 관련하여 새로 개점되는 영업점 1개당 보통주 5주를 발행하는 조건에 따라 보통주를 추가로 발행하기로 하였다. (주)한국의 20×1년 1월 1일 유통보통주식수는 1,000주이고, 이 외 유통되고 있는 희석증권 및 우선주는 없다. (주)한국은 20×1년 4월 1일과 10월 1일에 각각 새로운 영업점 1개씩을 개점하였으며, 20×1년 당기순이익은 ₩290,000이다. 20×1년 기본주당순이익은? (단, 계산금액은 소수점 첫째자리에서 반올림한다.)

① ₩278 ② ₩281 ③ ₩287
④ ₩289 ⑤ ₩290

27. (주)강북은 20×1년 1월 1일 건물(매입가격 ₩10,000,000, 매입부대비용 ₩150,000)을 취득하는 과정에서 공채(액면금액 ₩100,000, 이자율 7%, 만기 3년, 매년말 이자지급 조건)를 불가피하게 액면금액에 인수하였다. 공채 취득시점의 (주)강북에 적용될 시장이자율은 10%였고, 건물대금과 공채대금은 모두 현금으로 지급하였다. 취득한 공채는 만기보유금융자산으로 분류되었고, 건물은 정액법으로 감가상각(내용연수 5년, 잔존가치 없음)한다. 이의 회계처리에 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단, 계산금액은 소수점 첫째자리에서 반올림한다. 기간말 단일금액의 현가계수(3기간, 10%)는 0.7513, 정상연금의 현가계수(3기간, 10%)는 2.4868이다.)

① 20×1년 12월 31일 인식할 건물의 감가상각비는 ₩2,030,000이다.

② 20×1년 1월 1일 만기보유금융자산의 장부금액은 ₩93,500이다.

③ 20×1년 12월 31일 인식될 이자수익은 ₩7,000이다.

④ 20×1년 1월 1일 건물의 취득원가는 ₩10,157,462이다.

⑤ 20×1년 12월 31일 만기보유금융자산의 장부금액은 ₩95,000이다.

28. (주)서울은 20×1년 1월 1일 유형자산을 ₩600,000에 취득하여 원가모형을 적용하였다. 동 자산의 내용연수는 10년이고, 잔존가치는 없으며 정액법으로 감가상각하였다. 20×2년 12월 31일 동 자산의 회수가능액은 ₩400,000이고, (주)서울은 이에 대한 손상차손을 인식하였다. 20×4년 12월 31일 동 자산의 회수가능액이 ₩470,000으로 회복된 경우 20×4년에 (주)서울이 계상하여야 할 손상차손 환입액은?

① ₩0 ② ₩20,000 ③ ₩60,000
④ ₩70,000 ⑤ ₩80,000

29. (주)서울은 20×1년 초에 토지를 ₩10,000에 취득하여 사용하기 시작하였다. 20×1년 말과 20×2년 말 현재 동 토지의 공정가치는 각각 ₩11,000과 ₩9,500이다. (주)서울은 매기간 말에 토지를 공정가치로 평가하는 재평가모형을 적용한다. (주)서울의 토지의 회계처리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① 토지재평가가 20×1년과 20×2년 당기손익에 미치는 영향은 없다.

② 20×1년 말과 20×2년 말 재평가잉여금의 잔액은 각각 ₩1,000과 ₩0이다.

③ 만약 (주)서울이 20×2년 초에 동 토지를 모두 처분하였다면, 20×1년 말에 인식한 재평가잉여금은 당기손익으로 재분류할 수 없다.

④ 만약 (주)서울이 20×3년 초에 동 토지를 ₩9,600에 처분하였다면, (주)서울은 처분이익 ₩100을 당기손익으로 인식한다.

⑤ (주)서울의 20×2년 당기손익으로 보고할 토지재평가손실은 ₩500이다.

30. (주)서울은 (주)감평과 협의하여 사용하던 기계장치(취득원가 ₩8,000,000, 감가상각누계액 ₩3,000,000, 공정가치 ₩4,500,000)를 제공하는 조건으로 차량운반구를 취득하였다. 차량운반구의 판매가격은 ₩8,000,000이며, (주)감평은 이 기계장치의 가치를 ₩5,000,000으로 인정하기로 하였으며, (주)서울은 차액 ₩3,000,000을 현금으로 지급하였다. 이 교환거래는 상업적 실질이 있고, 공정가치는 합리적으로 측정한 금액이다. 차량운반구의 취득원가는?

① ₩7,000,000 ② ₩7,500,000 ③ ₩8,000,000
④ ₩8,500,000 ⑤ ₩9,000,000

31. 제조부문 A, B와 보조부문 X, Y의 서비스 제공관계는 다음과 같다.

	보조부문		제조부문		합 계
	X	Y	A	B	
X	–	40단위	20단위	40단위	100단위
Y	80단위	–	60단위	60단위	200단위

X, Y부문의 원가는 각각 ₩160,000, ₩200,000이다. 단계배부법에 의해 X부문을 먼저 배부하는 경우와 Y부문을 먼저 배부하는 경우의 제조부문 A에 배부되는 총보조부문원가의 차이는?

① ₩24,000 ② ₩25,000 ③ ₩26,000
④ ₩27,000 ⑤ ₩28,000

32. (주)한국은 단일제품을 대량으로 생산하고 있다. 직접재료는 공정 초기에 모두 투입되고 가공원가는 공정 중에 균등하게 발생한다. 생산 중에는 공손이 발생하는 데 품질검사를 통과한 수량의 10%에 해당하는 공손수량은 정상공손으로 간주한다. 공손여부는 공정의 50% 완성시의 검사시점에서 파악된다. 다음 자료를 이용하여 계산한 비정상공손수량은? (단, 물량흐름은 선입선출법을 가정한다.)

· 기초재공품수량	2,000단위(완성도 30%)
· 당기착수량	8,000단위
· 당기완성량	7,200단위
· 기말재공품수량	1,500단위(완성도 60%)

① 380단위 ② 430단위 ③ 450단위
④ 520단위 ⑤ 540단위

33. 다음은 개별원가계산제도를 이용하고 있는 (주)한국의 원가계산 자료이다. 제조간접원가는 기본원가(prime costs)를 기준으로 배부한다.

원가항목	작업#1	작업#2	작업#3	합 계
기초재공품	₩2,000	₩4,000	–	₩6,000
직접재료원가	2,800	3,000	₩2,200	8,000
직접노무원가	4,000	5,000	3,000	12,000
제조간접원가	( )	( )	( )	6,000

작업#1과 작업#3는 완성되었고, 작업#2는 미완성되었다. (주)한국이 기말재공품으로 계상할 금액은?

① ₩9,600 ② ₩10,200 ③ ₩12,500
④ ₩13,600 ⑤ ₩14,400

34. 다음은 제품A의 판매가격과 원가구조에 대한 자료이다.

단위당 판매가격		₩ 10,000
고정원가	생산량 20,000단위 미만	5,000,000
	생산량 20,000단위 이상	8,000,000

제품A의 공헌이익률이 10%이고 법인세율이 20%일 때 세후순이익 ₩2,000,000을 달성하기 위한 판매량은?

① 7,000단위 ② 7,500단위
③ 9,000단위 ④ 10,000단위
⑤ 10,500단위

35. (주)한국은 한 종류의 수출용 스웨터를 제조한다. 3년간에 걸친 이 제품과 관련된 원가와 영업상황의 자료는 다음과 같다.

· 단위당 변동제조원가	₩ 10
· 단위당 변동판매비와관리비	1
· 연간 고정제조원가	300,000
· 연간 고정판매비와관리비	200,000

	20×1년	20×2년	20×3년
기초제품 재고량	–	20,000	10,000
당기생산량	60,000	30,000	50,000
당기판매량	40,000	40,000	40,000
기말제품 재고량	20,000	10,000	20,000

3년간 판매가격의 변동과 원가구조의 변동이 없다는 가정하에서 20×1년 변동원가계산하의 영업이익이 ₩500,000일 경우 20×3년 전부원가계산하의 영업이익은? (단, 원가흐름은 선입선출법을 가정하고, 재공품은 없다.)

① ₩460,000 ② ₩480,000 ③ ₩500,000
④ ₩520,000 ⑤ ₩540,000

36. (주)한국은 제품A와 제품B를 거래처에 납품하는 업체이다. 제품은 생산과 동시에 전량 납품된다. (주)한국은 합리적인 가격설정목적으로 주요활동을 분석하여 다음과 같은 자료를 수집하였다.

활 동	활동별 제조간접원가	원가동인	총원가 동인 수
제품설계	₩450,000	설계제품 부품수	100단위
생산준비	325,000	준비횟수	650회
생산운영	637,500	기계작업시간	12,750시간
선적준비	80,000	선적횟수	200회
배 달	300,000	배달제품 중량	60,000kg

제품A의 생산량은 1,000단위이고, 제품A의 원가동인이 설계제품 부품수 70단위, 준비횟수 286회, 기계작업시간 3,060시간, 선적횟수 100회, 배달제품 중량 21,000kg일 경우 활동기준원가계산방법을 적용하여 계산한 제품A의 단위당 제조간접원가는?

① ₩525 ② ₩620 ③ ₩682
④ ₩756 ⑤ ₩810

37. 화장품을 제조하는 (주)한국의 20×1년 직접재료예산과 관련된 자료를 이용하여 계산한 3분기의 재료구입 예산액은?

- 매출계획 및 재고계획에 따른 각 분기별 화장품 추정생산량

20×1년			
1분기	2분기	3분기	4분기
1,400단위	3,200단위	3,600단위	1,900단위

- 화장품 1단위를 생산하는데 필요한 재료는 15kg이다.
- 분기말 목표재료재고량은 다음 분기 생산량에 필요한 재료의 10%로 한다.
- 재료구입단가는 kg당 ₩2이다.

① ₩102,900 ② ₩103,200 ③ ₩104,100
④ ₩105,300 ⑤ ₩106,400

38. (주)서울은 완제품 생산에 필요한 부품을 자가제조하고 있다. 부품 10,000단위를 제조하는데 소요되는 연간제조원가는 다음과 같다.

직접재료원가	₩600,000
직접노무원가	150,000
변동제조간접원가	50,000
부품생산용설비 감가상각비	120,000
고정제조간접원가배부액	70,000
총 계	₩990,000

(주)서울은 (주)공덕으로부터 단위당 ₩85에 10,000단위의 부품을 공급하겠다는 제의를 받았다. 이 제의를 수락하더라도 부품생산용설비 감가상각비와 고정제조간접원가는 계속 발생한다. (주)서울이 이 제의를 수락할 경우에는 연간 ₩70,000에 설비를 임대할 수 있다. (주)서울이 이 제의를 수락하는 경우 (주)서울의 이익에 미치는 영향은?

① ₩10,000 증가 ② ₩20,000 증가
③ ₩20,000 감소 ④ ₩50,000 감소
⑤ ₩50,000 증가

39. 표준원가시스템을 사용하고 있는 (주)한국의 직접재료원가의 제품단위당 표준사용량은 10kg이고, 표준가격은 kg당 ₩6이다. (주)한국은 6월에 직접재료 40,000kg을 ₩225,000에 구입하여 36,000kg을 사용하였다. (주)한국의 6월 중 제품생산량은 3,000단위이다. 직접재료 가격차이를 구입시점에 분리하는 경우, 6월의 직접재료원가에 대한 가격차이와 능률차이(수량차이)는?

① 가격차이 ₩ 6,000불리, 능률차이 ₩32,000유리
② 가격차이 ₩ 9,000불리, 능률차이 ₩36,000불리
③ 가격차이 ₩15,000유리, 능률차이 ₩36,000불리
④ 가격차이 ₩15,000유리, 능률차이 ₩32,000불리
⑤ 가격차이 ₩ 9,000불리, 능률차이 ₩36,000유리

40. (주)한국은 제품 20,000단위를 판매하고 있다. 제품단위당 판매가격은 ₩600, 단위당 변동제조원가는 ₩280, 단위당 변동판매비와관리비는 ₩170이다. (주)한국은 (주)구포로부터 단위당 ₩500에 7,000단위의 특별주문을 받았다. 이때 소요되는 추가 판매비와관리비는 총 ₩1,200,000이다. 회사의 최대생산능력은 25,000단위이므로 이 특별주문을 받아들일 경우 기존 판매제품의 수량이 2,000단위 감소할 것이다. 이 특별주문을 수락하는 경우 이익에 미치는 영향은?

① ₩40,000 증가 ② ₩206,000 증가
③ ₩240,000 감소 ④ ₩340,000 증가
⑤ ₩340,000 감소

부동산관계법규

41.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령상 개발행위허가의 절차 등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① 도시계획사업에 의한 개발행위는 허가를 받을 필요가 없다.
② 허가권자가 개발행위허가에 조건을 붙이려는 때에는 미리 신청한 자의 의견을 들어야 한다.
③ 허가권자는 개발행위허가의 신청에 대하여 특별한 사유가 없으면 15일(심의 또는 협의기간은 제외) 이내에 처분을 하여야 한다.
④ 허가권자가 처분을 할 때에는 허가증을 발급하거나 불허가처분의 사유를 서면으로 신청인에게 알려야 한다.
⑤ 개발밀도관리구역 안에서 개발행위허가 신청을 할 때에는 기반시설의 설치나 그에 필요한 용지의 확보에 관한 계획서를 제출하여야 한다.

42.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령상 광역도시계획 및 도시기본계획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① 국토해양부장관은 광역도시계획을 수립하려면 미리 공청회를 열어 주민과 관계 전문가 등으로부터 의견을 들어야 하며, 공청회에서 제시된 의견이 타당하다고 인정하면 광역도시계획에 반영하여야 한다.
② 광역계획권이 같은 도의 관할 구역에 속하여 있는 경우 시장 또는 군수가 협의를 거쳐 요청하면 도지사가 단독으로 광역도시계획을 수립할 수 있다.
③ 도시기본계획의 수립권자는 특별시장·광역시장·시장 또는 군수이며, 도시기본계획의 수립기준은 승인권자인 시·도지사가 정한다.
④ 도지사는 시장 또는 군수가 수립한 도시기본계획을 승인하려면 관계 행정기관의 장과 협의한 후 지방도시계획위원회의 심의를 거쳐야 한다.
⑤ 특별시장·광역시장·시장 또는 군수는 5년마다 관할 구역의 도시기본계획에 대하여 그 타당성 여부를 전반적으로 재검토하여 정비하여야 한다.

43.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령상 용도지역에 관한 설명이다. (　　)에 들어갈 용어가 옳게 연결된 것은?

(　㉠　) : 공동주택 중심의 양호한 주거환경을 보호하기 위하여 필요한 지역 (　㉡　) : 근린지역에서의 일용품 및 서비스의 공급을 위하여 필요한 지역 (　㉢　) : 주로 농업적 생산을 위하여 개발을 유보할 필요가 있는 지역

	㉠	㉡	㉢
①	제2종일반주거지역	근린상업지역	생산녹지지역
②	제2종일반주거지역	근린상업지역	농림지역
③	제2종일반주거지역	일반상업지역	농림지역
④	제2종전용주거지역	근린상업지역	생산녹지지역
⑤	제2종전용주거지역	일반상업지역	생산녹지지역

44.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령상 도시관리계획의 내용에 해당하지 않는 것은?

① 수산자원보호구역의 변경에 관한 계획
② 기반시설의 개량에 관한 계획
③ 도시개발사업이나 정비사업에 관한 계획
④ 지구단위계획구역의 변경에 관한 계획
⑤ 자연보전권역의 변경에 관한 계획

45.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령상 기반시설과 그 종류의 연결이 옳은 것은?

① 교통시설 : 도로, 궤도, 폐차장
② 공간시설 : 공원, 유원지, 운동장
③ 유통·공급시설 : 수도, 공동구, 하수도
④ 보건위생시설 : 장례식장, 도축장, 종합의료시설
⑤ 방재시설 : 하천, 수질오염방지시설, 저수지

46.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령상 허가구역 안에 있는 토지에 대하여 토지거래계약의 허가를 요하지 아니하는 토지의 면적기준으로 옳은 것은? (단, 국토해양부장관이 따로 정하여 공고하는 경우는 고려하지 않음)

① 주거지역 : 200 m^2 이하
② 상업지역 : 220 m^2 이하
③ 공업지역 : 680 m^2 이하
④ 녹지지역 : 120 m^2 이하
⑤ 도시지역 안에서 용도지역의 지정이 없는 구역 : 90 m^2 이하

47.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령상 지구단위계획의 내용에 해당하지 않는 것은?

① 정비구역에서 용도지역을 일반주거지역에서 일반상업지역으로 변경하는 내용
② 경관지구를 자연경관지구와 시가지경관지구로 세분하는 내용
③ 당해 지구단위계획구역의 지정목적 달성을 위하여 필요한 주차장의 배치와 규모
④ 건축물의 용도제한
⑤ 건축물의 색채

48.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령상 용도지구에 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① 용도지구란 토지의 이용 및 건축물의 용도 등에 대한 용도구역의 제한을 완화하여 적용함으로써 용도구역의 기능을 증진시키기 위하여 도시기본계획으로 결정하는 지역을 말한다.
② 복합개발진흥지구는 주거기능, 공업기능, 유통·물류기능 및 관광·휴양기능 외의 기능을 중심으로 특정한 목적을 위하여 개발·정비할 필요가 있는 지구를 말한다.
③ 집단취락지구는 녹지지역·관리지역·농림지역 또는 자연환경보전지역 안의 취락을 정비하기 위하여 필요한 지구를 말한다.
④ 시·도지사는 지역여건상 필요하면 법에서 정하고 있는 용도지역 또는 용도구역의 행위제한을 완화하는 용도지구를 신설하여 도시관리계획으로 결정할 수 있다.
⑤ 일반미관지구는 중심지미관지구 및 역사문화미관지구 외의 지역으로서 미관을 유지·관리하기 위하여 필요한 지구를 말한다.

49.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령상 개발행위허가에 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① 개발행위허가를 할 때에 시장 또는 군수가 「광업법」에 따른 채굴계획의 인가에 관하여 미리 관계 행정기관의 장과 협의한 사항에 대하여는 그 인가를 받은 것으로 본다.
② 시장 또는 군수는 지구단위계획구역으로 지정된 지역에 대하여는 3년 이내의 기간 동안 개발행위허가를 제한할 수 있으며, 개발행위허가의 제한은 그 기간을 연장할 수 없다.
③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하는 공공단체가 시행하는 개발행위에 대하여 시장 또는 군수는 이행보증금을 예치하게 할 수 있다.
④ 지구단위계획을 수립한 지역에서 행하는 개발행위를 허가하려면 지방도시계획위원회의 심의를 거쳐야 한다.
⑤ 개발행위허가를 받은 행정청이 새로 공공시설을 설치한 경우 새로 설치된 공공시설은 그 시설을 관리할 관리청에 유상으로 귀속된다.

50.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령상 토지거래허가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① 허가신청 면적이 그 토지의 이용목적으로 보아 적합하지 않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허가를 받을 수 없다.
② 기존의 농업인이 아닌 자가 농업용 토지를 취득하고자 하는 경우 그가 거주하는 시·군에 소재하는 토지와 거주지로부터 20 km 이내에 소재하는 토지에 한해서 허가를 받을 수 있다.
③ 토지거래계약을 체결하려는 자의 토지이용목적이 도시계획에 맞지 아니한 경우에는 허가를 받을 수 없다.
④ 법률에 따라 토지를 수용할 수 있는 사업을 시행하는 자가 그 사업을 시행하기 위하여 필요한 것인 경우 허가를 받을 수 있다.
⑤ 허가구역을 포함한 지역의 주민을 위한 편익시설로서 관할 시장·군수 또는 구청장이 확인한 시설의 설치에 이용하려는 경우 허가를 받을 수 있다.

51.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령상 기반시설설치비용에 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① 특별시장·광역시장·시장 또는 군수는 기반시설설치비용을 부과하려면 부과기준시점부터 30일 이내에 납부의무자에게 적용되는 부과기준 및 부과될 기반시설설치비용을 미리 알려야 한다.

② 기존 건축물을 철거하고 신축하는 경우 기존 건축물의 연면적은 고려하지 않고 신축하는 건축물의 연면적만을 고려하여 기반시설설치비용을 부과한다.

③ 납부의무자는 건축허가를 받은 날부터 2개월 이내에 기반시설설치비용을 납부하여야 한다.

④ 기반시설설치비용 중 기반시설을 설치하는 데 필요한 기반시설 표준시설비용에는 해당 구역의 평균 개별공시지가가 반영된다.

⑤ 납부한 기반시설설치비용은 해당 기반시설부담구역에 필요한 기반시설 및 용지를 모두 확보한 후 잔액이 생기면 납부의무자에게 환급된다.

52.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령상 토지거래허가구역에 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① 허가구역의 지정권자는 국토해양부장관이지만 특별히 투기가 성행할 우려가 있을 경우에는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도 지정할 수 있다.

② 국토해양부장관이 허가구역을 지정하려면 중앙도시계획위원회의 심의를 거쳐야 한다.

③ 허가구역을 처음으로 지정하고자 할 때에는 미리 시·도지사 및 시장·군수 또는 구청장의 의견을 들어야 한다.

④ 허가구역의 지정은 허가구역의 지정을 공고한 날부터 그 효력이 발생한다.

⑤ 허가구역의 지정에 대해서는 15일 이상 그 사실을 공고하고 공고내용을 15일 이상 일반이 열람할 수 있도록 하여야 한다.

53.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령상 행정청인 도시계획시설사업의 시행자가 사업시행과 관련하여 타인의 토지를 출입하는 경우 등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① 타인의 토지에 출입하려면 출입하려는 날의 3일 전까지 그 토지의 소유자·점유자 또는 관리인에게 그 일시와 장소를 알려야 한다.

② 타인의 토지를 임시통로로 일시사용하려면 그 토지의 소유자·점유자 또는 관리인의 동의를 받아야 한다.

③ 타인의 토지를 재료적치장으로 일시사용하고자 할 때, 그 토지의 소유자·점유자 또는 관리인의 주소가 불분명하여 동의를 받을 수 없는 경우에는 미리 관할 시장 또는 군수의 허가를 받아야 한다.

④ 장애물을 제거하려면 제거하려는 날의 3일 전까지 장애물의 소유자·점유자 또는 관리인에게 알려야 한다.

⑤ 일출 전이나 일몰 후에는 그 토지 점유자의 승낙 없이 택지나 담장 또는 울타리로 둘러싸인 타인의 토지에 출입할 수 없다.

54.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령상 도시계획 등에 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① 도시계획은 광역도시계획과 도시기본계획으로 구분한다.

② 개발제한구역, 시가화조정구역의 지정 또는 변경에 관한 계획은 도시기본계획으로 결정한다.

③ 도시관리계획을 시행하기 위한 정비사업은 도시계획시설사업에 포함된다.

④ 도시계획시설은 기반시설 중 도시기본계획으로 결정된 시설을 말한다.

⑤ 자동차 및 건설기계검사시설과 그 시설의 기능발휘와 이용을 위하여 필요한 부대시설 및 편익시설은 기반시설에 해당한다.

55.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령상 지형도면에 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① 지형도면은 도시관리계획에 대한 주민의견청취 이전에 작성·제공되어야 한다.

② 지적이 표시된 지형도의 데이터베이스가 구축되어 있는 경우에도 이를 사용하여 지형도면을 작성할 수 없다.

③ 도시관리계획 결정의 효력은 원칙적으로 지형도면에 대한 도지사의 승인·고시로 발생한다.

④ 도시지역 외의 지역으로서 해당 토지에 도시계획시설이 결정되지 아니한 경우에는 지적이 표시되지 아니한 축척 5천분의 1 이상의 지형도에 도시관리계획사항을 명시한 도면을 작성할 수 있다.

⑤ 주거지역에서 축척 3천분의 1 이상의 지형도를 사용하여 도시관리계획결정을 고시한 경우에는 지형도면을 따로 작성하지 않을 수 있다.

56.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령상 용도지역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① 도시지역, 관리지역, 농림지역 또는 자연환경보전지역으로 용도가 지정되지 아니한 지역에서 용도지역에서의 행위제한 등에 대하여는 자연환경보전지역에 관한 규정을 적용한다.

② 용도지역이 미세분된 도시지역에서의 행위제한 등에 대하여는 보전녹지지역에 관한 규정을 적용한다.

③ 관리지역에서「농지법」에 따른 농업진흥지역으로 지정·고시된 지역은 생산관리지역으로 결정·고시된 것으로 본다.

④ 용도지역이 미세분된 관리지역에서의 행위제한 등에 대하여는 보전관리지역에 관한 규정을 적용한다.

⑤ 바다인 공유수면의 매립목적이 그 매립구역과 이웃하고 있는 용도지역의 내용과 같으면, 도시관리계획의 입안 및 결정절차 없이 그 매립준공구역은 그 매립의 준공인가일부터 이와 이웃하고 있는 용도지역으로 지정된 것으로 본다.

57. 부동산 가격공시 및 감정평가에 관한 법률의 목적과 관련하여 (　　)의 용어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이 법은 토지, (㉠) 등 부동산의 (㉡)을(를) 공시하여 부동산 가격산정의 기준이 되게 하고, 토지·건물·동산 등의 (㉢)에 관한 사항을 정함으로써 이의 적정한 가격형성을 도모하며, 나아가 국토의 효율적인 이용과 국민경제의 발전에 이바지하게 함을 목적으로 한다.

① ㉠에 포함되는 공동주택은 아파트, 연립주택, 다세대주택, 다가구주택으로 구분된다.

② ㉡은 통상적인 시장에서 정상적인 거래가 이루어지는 경우 성립될 가능성이 가장 높다고 인정되는 가격을 말한다.

③ 표준지의 ㉡을 평가함에 있어 건물 그 밖의 정착물이 있는 때에는 당해 정착물이 존재하지 아니하는 것으로 보고 평가하여야 한다.

④ 국토해양부장관이 표준지의 ㉡을 조사·평가하고자 할 때에는 둘 이상의 감정평가업자에게 이를 의뢰하여야 한다.

⑤ ㉢은 토지등의 경제적 가치를 판정하여 그 결과를 가액으로 표시하는 것을 말한다.

58. 부동산 가격공시 및 감정평가에 관한 법령상 표준지공시지가의 공시에 포함되어야 하는 사항만을 모두 고른 것은?

ㄱ. 지번	ㄴ. 경계	ㄷ. 3.3 m^2당 가격
ㄹ. 도로·교통상황		ㅁ. 주변토지의 이용상황

① ㄱ, ㄴ, ㄷ　　② ㄱ, ㄷ, ㄹ

③ ㄱ, ㄹ, ㅁ　　④ ㄱ, ㄴ, ㄹ, ㅁ

⑤ ㄴ, ㄷ, ㄹ, ㅁ

59. 부동산 가격공시 및 감정평가에 관한 법령상 감정평가사의 징계사유에 해당하지 않는 것은?

① 자기의 소유토지를 감정평가한 경우

② 국토해양부 소속 공무원의 장부검사를 기피한 경우

③ 구비서류를 거짓으로 작성하는 방법으로 갱신등록을 한 경우

④ 업무가 정지된 자가 등록증을 국토해양부장관에게 반납하지 않은 경우

⑤ 유가증권의 매매업을 직접 영위하는 경우

60. 부동산 가격공시 및 감정평가에 관한 법령상 감정평가업자 또는 감정평가사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① 국토해양부장관은 감정평가사의 자격등록취소처분을 하고자 하는 경우 청문을 실시하여야 한다.

② 감정평가업자는 감정평가서의 원본을 교부일로부터 10년 이상 보존하여야 한다.

③ 파산선고를 받고 복권된 자는 감정평가법인의 대표이사가 될 수 있다.

④ 감정평가업자는 의뢰인에 대한 손해배상책임을 보장하기 위하여 보증보험이나 공제사업에 가입하고, 이를 국토해양부장관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⑤ 부정한 방법으로 감정평가사의 자격을 얻었음을 이유로 그 자격이 취소된 후 3년이 경과되지 아니한 자는 감정평가사가 될 수 없다.

61. 부동산 가격공시 및 감정평가에 관한 법령상 주택가격의 공시에 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① 표준주택가격은 국토해양부장관이 중앙부동산평가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조사·평가한 후 공시하여야 한다.

② 신축된 단독주택에 대하여 개별주택가격을 결정·공시할 경우에는 당해 연도의 공시기준일을 기준으로 한다.

③ 165 m^2 미만인 연립주택의 공동주택가격은 국세청장이 결정·고시하여야 한다.

④ 표준주택가격은 국가·지방자치단체 등의 기관이 그 업무와 관련하여 개별주택가격을 산정하는 경우에 그 기준이 된다.

⑤ 개별주택 및 공동주택의 가격은 국가·지방자치단체 등의 기관이 수용방식의 도시계획사업을 시행할 때 보상가격으로 사용된다.

62. 부동산 가격공시 및 감정평가에 관한 법령상 개별공시지가의 결정·공시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공시기준일은 1월 1일로 함)

① 개별공시지가를 결정·공시하지 아니한 표준지에 대하여는 당해 토지의 공시지가를 개별공시지가로 본다.

② 시장·군수 또는 구청장은 조세의 부과대상이 아닌 토지에 대해서는 개별공시지가를 결정·공시하지 아니할 수 있다.

③ 2011년 11월 15일 분할·합병된 토지에 대해서는 2012년 5월 31일까지 개별공시지가를 결정·공시하여야 한다.

④ 2012년 5월 15일 토지의 형질변경으로 지목이 변경된 토지에 대해서는 2012년 7월 1일을 기준일로 하여 개별공시지가를 결정·공시하여야 한다.

⑤ 시장·군수 또는 구청장이 개별공시지가를 결정·공시하기 위하여 개별토지의 가격을 산정한 때에는 토지소유자 등의 의견을 들어야 하나, 미리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과 협의한 경우에는 의견청취를 생략할 수 있다.

63. 국토해양부장관은 성실의무 등의 위반을 이유로 A 감정평가법인에 대한 업무정지 6개월의 처분에 갈음하여 과징금을 부과하고자 한다. 이 경우 부동산 가격공시 및 감정평가에 관한 법령상 국토해양부장관이 위반행위와 관련한 제반 사정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부과할 수 있는 과징금의 최저액수는?

① 5천만 원 ② 1억 원
③ 1억 2천 5백만 원 ④ 1억 7천 5백만 원
⑤ 2억 5천만 원

64. 부동산 가격공시 및 감정평가에 관한 법령상 표준지공시지가에 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① 국토해양부장관은 표준지에 토지의 사용·수익을 제한하는 권리가 설정되어 있는 때에는 당해 권리를 포함하여 적정가격을 평가하여야 한다.

② 국가가 국유토지를 처분하기 위하여 토지의 가격을 산정하는 경우에 유사한 이용가치를 지닌 표준지공시지가를 적용할 수 없다.

③ 표준지공시지가에 대하여 이의가 있는 자는 서면으로 시장·군수 또는 구청장을 거쳐 국토해양부장관에게 이의를 신청하여야 한다.

④ 국토해양부장관은 표준지공시지가에 대한 이의신청을 받은 날로부터 30일 이내에 이의신청을 심사하여, 그 결과를 신청인에게 서면으로 통지하여야 한다.

⑤ 표준지의 적정가격 조사·평가를 의뢰받은 감정평가업자가 표준지조사평가보고서를 제출하고자 하는 때에는 미리 당해 표준지를 관할하는 시장·군수 또는 구청장의 의견을 들어야 한다.

65. 국유재산법령상 국유재산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① 중앙관서의 장이 국유재산의 관리에 관련된 법령을 개정하려면 그 내용에 관하여 총괄청 및 감사원과 협의하여야 한다.

② 총괄청이나 중앙관서의 장은 소유자 없는 부동산을 국유재산으로 취득한다.

③ 확정판결에 의한 경우에는 일반재산에 대하여 사권을 설정할 수 있다.

④ 위법한 재산관리로 사용승인이 철회되어 총괄청에 인계된 행정재산도 그 용도가 폐지되는 것은 아니다.

⑤ 총괄청은 일반재산을 보존용재산으로 전환하여 관리할 수 있다.

66. 국유재산법령상 일반재산에 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① 일반재산을 개발하는 경우에 공공의 편익성이나 지역발전의 기여도 등은 고려해야 하지만 재정수입의 증대는 고려요소가 아니다.

② 용도를 지정하여 매각하는 일반재산은 그 재산의 매각일로부터 10년 이상 지정된 용도로 활용하여야 한다.

③ 일반재산은 부동산신탁을 취급하는 신탁업자에게 신탁하여 개발하게 해서는 안 된다.

④ 증권이 아닌 일반재산을 공공기관에 처분하는 경우에 예정가격은 두 개의 감정평가법인의 평가액을 산술평균한 금액으로 결정한다.

⑤ 중앙관서의 장이 국가 외의 자가 소유하는 토지에 있는 국가소유의 건물을 그 토지 소유자에게 양여하는 경우에는 총괄청과 협의 없이 양여할 수 있다.

67. 국유재산법령상 국유재산의 종류와 범위 등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① 정부기업이 직원의 주거용으로 사용하는 국유재산은 일반재산이다.

② 국유재산을 관리·처분할 경우에는 취득과 처분이 균형을 이루어야 한다.

③ 디자인권은 국유재산의 범위에 포함된다.

④ 국유재산은 행정재산과 일반재산으로 구분되며, 행정재산은 공용재산, 공공용재산, 기업용재산, 보존용재산으로 분류된다.

⑤ 정부기업이 사용하던 궤도차량이 정부기업의 폐지와 함께 포괄적으로 용도폐지된 경우에도 국유재산에 해당한다.

68. 국유재산법령상 행정재산의 사용허가 등에 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① 공유(公有) 또는 사유재산과 교환하여 그 교환받은 재산을 행정재산으로 관리하려는 경우에는 행정재산도 교환하거나 양여할 수 있다.

② 행정재산의 사용허가에 관하여는「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의 규정이 준용되지 않는다.

③ 행정재산을 주거용으로 사용허가할 수 있지만, 수의의 방법으로 할 수는 없다.

④ 5년을 초과하지 아니하는 범위에서 행정재산의 사용허가를 갱신할 수 있지만, 수의의 방법으로 사용허가를 받은 재산에 대하여는 1회에 한하여 갱신할 수 있다.

⑤ 중앙관서의 장이 행정재산을 직접 공용으로 사용하려는 지방자치단체에게 사용허가하는 경우에는 사용료를 면제하여야 한다.

69. 건축법령상 건축허가 및 신고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① 허가권자는 주변의 교육환경을 고려할 때 부적합하다고 인정되는 숙박시설에 대해서는 건축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건축허가를 거부할 수 있다.

② 허가권자는 공사에 착수하였으나 공사의 완료가 불가능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건축허가를 취소할 수 있다.

③ 연면적 200 m^2 미만이고 3층 미만인 건축물의 대수선은 건축신고 사항이다.

④ 건축신고일부터 1년 이내에 공사에 착수하지 아니하면 그 신고의 효력은 없어진다.

⑤ 국토해양부장관은 국토관리를 위하여 특히 필요하다고 인정할 경우 건축허가를 받은 건축물의 착공을 제한할 수 있다.

70. 건축법령상 용어의 정의로서 옳지 않은 것은?

① "고층건축물"이란 층수가 30층 이상이거나 높이가 100m 이상인 건축물을 말한다.

② "지하층"이란 건축물의 바닥이 지표면 아래에 있는 층으로서 바닥에서 지표면까지 평균높이가 해당 층 높이의 2분의 1 이상인 것을 말한다.

③ "리모델링"이란 건축물의 노후화를 억제하거나 기능 향상 등을 위하여 대수선하거나 일부 증축하는 행위를 말한다.

④ "건축물의 용도"란 건축물의 종류를 유사한 구조, 이용 목적 및 형태별로 묶어 분류한 것을 말한다.

⑤ "건축주"란 건축물의 건축·대수선·용도변경, 건축설비의 설치 또는 공작물의 축조에 관한 공사를 발주하거나 현장 관리인을 두어 스스로 그 공사를 하는 자를 말한다.

71. 건축법령상 건축물의 대지와 도로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① 대지의 배수에 지장이 없는 경우에는 대지가 인접한 도로면보다 낮아도 된다.
② 녹지지역의 건축물은 면적이 200 m^2 이상인 대지에 건축하는 경우에도 조경 등의 조치를 하지 아니할 수 있다.
③ 건축물의 대지는 2 m 이상이 자동차전용도로가 아닌 도로에 접하여야 하지만, 해당 건축물의 출입에 지장이 없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④ 이해관계인이 해외에 거주하여 동의를 받기 곤란한 경우에 허가권자는 건축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이해관계인의 동의 없이 도로의 위치를 지정·공고할 수 있다.
⑤ 건축물은 지표의 위·아래 부분에서 건축선의 수직면을 넘어서는 아니 되며, 도로면으로부터 높이 4.5 m 이하에 있는 창문은 열고 닫을 때 건축선의 수직면을 넘지 않는 구조로 하여야 한다.

72. 건축법령상 건축물의 구조 및 재료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① 건축물은 고정하중, 적재하중, 적설하중 등에 대하여 안전한 구조를 가져야 한다.
② 인접 대지경계선으로부터 직선거리 1.5 m에 이웃 주택의 내부가 보이는 창문을 설치하려면 차면시설을 설치하여야 한다.
③ 방화지구 안에서 간판, 광고탑을 건축물의 지붕위에 설치하는 경우 그 높이가 3 m 미만인 경우에는 주요부를 불연재료로 하지 않아도 된다.
④ 바닥면적의 합계가 3천 m^2인 공연장을 지하층에 설치하는 경우에는 각 실에 있는 자가 피난층으로 대피할 수 있도록 천장이 개방된 외부 공간을 설치하여야 한다.
⑤ 건축물의 일부가 문화 및 집회시설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 부분과 다른 부분을 방화구획으로 구획하여야 한다.

73. 측량·수로조사 및 지적에 관한 법령상 지번의 구성 및 부여에 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① 경계점좌표등록부에는 지번을 등록하지 아니 한다.
② 여러 필지로 되어 있는 토지를 등록전환할 경우에는 그 지번부여지역의 최종 본번의 다음 순번부터 본번으로 하여 순차적으로 지번을 부여할 수 있다.
③ 도시개발사업 시행지역의 지번은 그 사업의 준공 이전에 부여하여야 한다.
④ 지번은 북동에서 남서로 순차적으로 부여한다.
⑤ 지적소관청이 지번부여지역 전부의 지번을 변경할 경우에는 국토해양부장관의 승인을 받고, 일부의 지번을 변경할 경우에는 시·도지사나 대도시 시장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74. 측량·수로조사 및 지적에 관한 법령상 지목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① 묘지의 관리를 위한 건축물 부지의 지목은 “대”로 한다.
② 과수류를 집단적으로 재배하는 토지에 접속된 주거용 건축물 부지의 지목은 “대”로 한다.
③ 「주차장법」에 따른 노상주차장 부지의 지목은 “주차장”으로 한다.
④ 제조업을 하고 있는 공장시설물의 부지와 같은 구역에 있는 부속시설물인 의료시설 부지의 지목은 “공장용지”로 한다.
⑤ 자연의 유수가 있을 것으로 예상되는 토지의 지목은 “하천”으로 한다.

75. 측량·수로조사 및 지적에 관한 법령상 지적측량을 하여야 하는 경우에 해당하지 않는 것은? (단, 측량의 필요성은 인정되고 도시개발사업 등의 시행지역이 아님)

① 지적공부를 복구하는 경우
② 토지를 등록전환하는 경우
③ 축척을 변경하는 경우
④ 토지를 합병하는 경우
⑤ 경계점을 지상에 복원하는 경우

76. 측량·수로조사 및 지적에 관한 법령상 개별공시지가와 그 기준일을 등록한 지적공부로 옳게 짝지어진 것은?

① 지적도과 임야도
② 토지대장과 임야대장
③ 토지대장과 대지권등록부
④ 임야대장과 공유지연명부
⑤ 지적도와 경계점좌표등록부

77. 부동산등기법상 등기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① 등기는 법률에 다른 규정이 없는 경우에는 등기권리자와 등기의무자가 공동으로 신청한다.
② 부동산표시의 변경등기는 소유권의 등기명의인이 단독으로 신청한다.
③ 판결에 의한 등기는 승소한 등기권리자 또는 등기의무자가 단독으로 신청한다.
④ 소유권보존등기의 말소등기는 등기명의인이 단독으로 신청한다.
⑤ 등기관이 등기를 마친 경우 그 때부터 등기는 효력을 발생한다.

78. 부동산등기법상 건물의 표시에 관한 등기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① 건물이 멸실된 경우 그 건물 소유권의 등기명의인은 그 사실이 있는 때부터 1개월 이내에 멸실등기를 신청하여야 한다.
② 존재하지 아니하는 건물에 대한 등기가 있을 때에는 그 소유권의 등기명의인은 지체 없이 멸실등기를 신청하여야 한다.
③ 건물의 합병이 있는 경우에 그 건물 소유권의 등기명의인은 그 사실이 있는 때부터 1개월 이내에 변경등기를 신청하여야 한다.
④ 구분건물의 등기기록 중 1동 표제부에 관한 변경등기는 그 구분건물과 같은 1동의 건물에 속하는 다른 구분건물에 대하여는 변경등기로서의 효력이 없다.
⑤ 구분건물로서 그 건물이 속하는 1동 전부가 멸실된 경우에 그 구분건물의 소유권의 등기명의인은 1동의 건물에 속하는 다른 구분건물의 소유권의 등기명의인을 대위하여 1동 전부에 대한 멸실등기를 신청할 수 있다.

79. 부동산등기법상 신탁등기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① 수익자 또는 위탁자는 수탁자를 대위하여 신탁등기를 신청할 수 있다.
② 수탁자가 여러 명인 경우 등기관은 신탁재산이 공유인 뜻을 기록하여야 한다.
③ 신탁등기의 신청은 해당 신탁으로 인한 권리의 이전 또는 보존이나 설정등기의 신청과 동시에 하여야 한다.
④ 신탁을 원인으로 위탁자가 자기 명의의 재산을 수탁자에게 처분하는 경우 신탁등기의 신청은 위탁자를 등기의무자로 하고 수탁자를 등기권리자로 한다.
⑤ 신탁재산에 속한 권리가 소멸된 경우 신탁등기의 말소신청은 신탁된 권리의 말소등기의 신청과 동시에 하여야 한다.

80. 부동산등기법상 등기신청의 각하 사유에 해당하지 않는 것은? (단, 신청의 잘못된 부분에 대한 보정은 고려하지 아니함)

① 신청할 권한이 없는 자가 신청한 경우
② 신청정보와 등기원인을 증명하는 정보가 일치하지 아니한 경우
③ 등기에 필요한 첨부정보를 제공하지 아니한 경우
④ 신청정보의 등기권리자의 표시가 등기기록과 일치하지 아니한 경우
⑤ 신청정보의 등기의 목적인 권리의 표시가 등기기록과 일치하지 아니한 경우

2012년도 제23회 감정평가사 제1차 국가자격시험 문제지

교시	형별	시험과목	시험시간	수험번호	성명
2교시	A	1 회계학 2 부동산관계법규	80분		

< 유 의 사 항 >

○ 문제지 인쇄상태 및 매수 확인
○ 문제지에 수험번호와 성명 기재
○ 답안카드에 문제지 형별 기재 및 마킹
○ 시험종료시 답안카드 즉시 제출(미제출시 시험무효)
○ 의견제시에 대한 개별회신은 하지 않으며, 최종 정답 발표로 갈음함
○ 시험시행계획 공고일(2012.3.30) 현재 시행되는 법령, 회계처리 등을 적용(회계처리 등과 관련된 시험문제는 한국채택국제회계기준(K-IFRS) 적용)
○ 신분증 미지참자 및 사진상이자는 지정기일까지 공단 방문 후 신분확인을 받아야 함
○ 시험시간 중에는 중도퇴실이 불가하며, 시험포기자의 경우에는「시험포기각서」를 제출하시고 퇴실하여야 하며, 퇴실 후 재입실 불가(단, 설사, 배탈 등 긴급시 퇴실 가능하나 재입실 불가 및 해당교시 종료시까지 시험본부 대기)
○ 기타 공고된 수험자 유의사항 미준수시 그에 따른 책임은 수험자에게 있음

회 계 학

※ 아래의 문제들에서 특별한 언급이 없는 한 기업의 보고기간(회계기간)은 매년 1월 1일부터 12월 31일까지이다. 또한, 기업은 주권상장법인으로 한국채택국제회계기준(K-IFRS)을 계속해서 적용해오고 있다고 가정하고 답지항 중에서 물음에 가장 합당한 답을 고르시오. 단, 자료에서 제시한 것 이외의 사항은 고려하지 않고 답한다. 예를 들어, 법인세에 대한 언급이 없으면 법인세 효과는 고려하지 않는다.

1. 재무보고를 위한 개념체계의 '유용한 재무정보의 질적 특성'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① 보강적 질적 특성은 정보가 목적적합하지 않거나 충실하게 표현되지 않으면, 개별적으로든 집단적으로든 그 정보를 유용하게 할 수 없다.
② 재무정보가 예측가치를 갖기 위해서 그 자체가 예측치 또는 예상치일 필요는 없다.
③ 보강적 질적 특성을 적용하는 것은 어떤 규정된 순서를 따르지 않는 반복적인 과정으로, 때로는 하나의 보강적 질적 특성이 다른 질적 특성의 극대화를 위해 감소되어야 할 수도 있다.
④ 중요성은 개별 기업 재무보고서 관점에서 해당 정보와 관련된 항목의 성격이나 규모 또는 이 둘 모두에 근거하여 해당 기업에 특유한 측면의 목적적합성을 의미한다.
⑤ 보강적 질적 특성에는 비교가능성, 검증가능성, 적시성 및 충실한 표현이 있다.

2. 유형자산의 취득원가에 포함되지 않는 것은?

① 유형자산과 관련된 산출물에 대한 수요가 형성되는 과정에서 발생하는 가동손실과 같은 초기 가동손실
② 설치장소 준비 원가
③ 유형자산이 정상적으로 작동되는지 여부를 시험하는 과정에서 발생하는 원가
④ 최초의 운송 및 취급관련 원가
⑤ 설치원가 및 조립원가

3. (주)강남은 (주)대한으로부터 공정가치 ₩6,500,000의 기계장치를 리스하였다. 리스기간은 20×1년 초부터 20×4년 말까지 4년이고, 리스료는 매년 말 ₩2,000,000씩 후급하기로 하였으며, 추정 잔존가치 ₩120,000 중 ₩100,000을 (주)강남이 보증하기로 하였다. 이 리스는 금융리스에 해당되고, 내재이자율은 10%이며, 동 리스자산은 정액법으로 감가상각한다. (주)강남이 리스와 관련하여 20×1년에 계상할 총비용은? (단, 기간말 단일금액의 현가계수(4기간, 10%)는 0.6830, 정상연금의 현가계수(4기간, 10%)는 3.1670이다.)

① ₩1,570,325 ② ₩1,575,575 ③ ₩1,975,000
④ ₩2,000,000 ⑤ ₩2,215,805

4. 다음 자료를 이용하여 계산한 기말매입채무 잔액은? (단, 매입은 모두 외상으로 한다.)

기초매입채무	₩ 8,000	매입채무상환	₩35,000
기초상품재고	12,000	기말상품재고	11,000
당기매출	50,000	매출총이익	10,000

① ₩11,000 ② ₩12,000 ③ ₩13,000
④ ₩14,000 ⑤ ₩15,000

5. (주)대한은 20×1년 초 총계약금액이 ₩600,000인 교량 신축공사를 수주하였다. 공사기간은 20×1년 초부터 3년이며, 20×1년에 이 교량의 총계약원가는 ₩500,000으로 추정되었으나 완공 후 실제 총원가는 ₩540,000이 소요되었다. 다음 자료를 이용하여 (주)대한이 진행기준에 따라 인식할 20×2년 계약이익은?

	20×1년	20×2년	20×3년
실제발생 누적계약원가	₩200,000	₩390,000	₩540,000
완성시까지 잔여계약원가 예상액	300,000	130,000	–

① ₩10,000 ② ₩20,000 ③ ₩30,000
④ ₩40,000 ⑤ ₩50,000

6. (주)한국은 20×1년 12월 31일에 3개의 사업부 중 사업부 A를 매각하기로 결정하였다. (주)한국과 사업부 A의 20×1년 12월 31일 자산과 부채의 장부금액 및 20×1년의 수익과 비용 발생금액은 다음과 같다. 사업부 A의 자산은 모두 비유동자산으로 순공정가치가 ₩1,800이며, 부채의 순공정가치는 장부금액과 동일하다.

구 분	(주)한국	사업부 A
자 산	₩10,000	₩2,000
부 채	6,000	1,500
자 본	4,000	–
수 익	8,000	1,000
비 용	6,000	700

(주)한국의 20×1년 포괄손익계산서에 표시될 계속영업손익과 중단영업손익은?

① 계속영업이익 ₩2,000 중단영업이익 ₩100
② 계속영업이익 ₩1,700 중단영업이익 ₩100
③ 계속영업이익 ₩1,800 중단영업이익 ₩100
④ 계속영업이익 ₩1,700 중단영업이익 ₩300
⑤ 계속영업이익 ₩2,000 중단영업이익 ₩300

7. (주)강남은 사옥을 건설하기 위하여 20×2년 1월 1일에 (주)대한과 건설계약을 체결하였다. (주)강남의 사옥은 20×3년 6월 30일에 준공될 예정이고, (주)강남은 사옥건설을 위해 다음과 같이 지출하였다.

일자	20×2.1.1	20×2.7.1	20×2.10.1	20×3.1.1
금액	₩50,000	₩50,000	₩60,000	₩70,000

(주)강남의 차입금은 다음과 같다.

차입금	차입일	차입금액	상환일
K은행	20×2.1.1	₩50,000	20×3.6.30
A은행	20×1.1.1	₩30,000	20×3.6.30
B은행	20×1.1.1	₩50,000	20×4.12.31

차입금	이자율	이자지급조건
K은행	12%	단리/매년말지급
A은행	10%	단리/매년말지급
B은행	12%	단리/매년말지급

이들 차입금 중 K은행에서의 차입금은 (주)강남의 사옥건설을 위한 특정차입금이며, A은행 차입금과 B은행 차입금은 일반차입금이다. (주)강남의 건설 중인 사옥은 차입원가 자본화의 적격자산에 해당된다. 이에 대하여 (주)강남이 20×2년 자본화할 차입원가의 금액은?

① ₩4,500 ② ₩6,000 ③ ₩9,000
④ ₩10,500 ⑤ ₩13,500

8. 유형자산의 감가상각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① 유형자산을 구성하는 일부의 원가가 당해 유형자산의 전체원가에 비교하여 유의적이라면, 해당 유형자산을 감가상각할 때 그 부분은 별도로 구분하여 감가상각한다.
② 유형자산의 전체원가에 비교하여 해당 원가가 유의적이지 않은 부분도 별도로 분리하여 감가상각할 수 있다.
③ 각 기간의 감가상각액은 다른 자산의 장부금액에 포함되는 경우가 아니라면 당기손익으로 인식한다.
④ 유형자산의 잔존가치와 내용연수는 적어도 매 회계연도말에 재검토한다.
⑤ 감가상각방법은 해당 자산의 공정가치 감소형태에 따라 선택한다.

9. (주)서울은 사옥을 건설하기 위하여 토지를 구입한 후 토지 위에 있던 건물을 철거하면서 철거비용 ₩150,000을 지불하였으며, 철거할 때 나온 철근을 ₩19,000에 매각하였다. (주)서울은 공유도로로부터 사옥까지 도로공사비 ₩80,000, 신축건물의 설계비 ₩100,000, 신축건물 건설을 위한 측량비 ₩45,000, 신축건물 건설공사비 ₩450,000, 신축건물 완성 후 조경공사비 ₩270,000을 지불하였다. 이 경우 건물의 취득원가는?

① ₩595,000 ② ₩726,000 ③ ₩745,000
④ ₩806,000 ⑤ ₩825,000

10. 회계변경과 오류수정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① 기업은 회계정책의 변경을 반영한 재무제표가 거래, 기타 사건 또는 상황이 재무상태, 재무성과 또는 현금흐름에 미치는 영향에 대하여 신뢰성 있고 더 목적적합한 정보를 제공하는 경우 회계정책을 변경할 수 있다.
② 특정 범주별로 서로 다른 회계정책을 적용하도록 규정하거나 허용하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유사한 거래, 기타 사건 및 상황에는 동일한 회계정책을 선택하여 일관성 있게 적용한다.
③ 과거에 발생한 거래와 실질이 다른 거래에 대하여 다른 회계정책을 적용하는 경우는 회계정책의 변경에 해당하지 않는다.
④ 당기 기초시점에 과거기간 전체에 대한 새로운 회계정책 적용의 누적효과를 실무적으로 결정할 수 없는 경우, 실무적으로 적용할 수 있는 가장 이른 날부터 새로운 회계정책을 소급적용하여 비교정보를 재작성한다.
⑤ 전기오류는 특정기간에 미치는 오류의 영향이나 오류의 누적효과를 실무적으로 결정할 수 없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소급재작성에 의하여 수정한다.

11. 다음은 20×1년 (주)서울의 기초와 기말 재무상태에 관한 자료이다.

	기초	기말
자산총계	₩25,000	₩27,000
부채총계	16,000	15,000

당기 중에 배당으로 현금 ₩400의 지급과 주식교부(금액 ₩100)가 있었고, 유형자산재평가이익 ₩100이 발생하였다면 20×1년 당기순이익은?

① ₩3,000 ② ₩3,200 ③ ₩3,300
④ ₩3,400 ⑤ ₩3,500

12. (주)남부는 20×1년 1월 1일 설비자산을 ₩2,000,000에 취득하면서 구입자금의 일부인 ₩600,000을 정부로부터 보조받았다. 설비자산의 내용연수는 5년, 잔존가치는 없으며, 감가상각방법은 정액법으로 한다. 정부보조금에 부수되는 조건은 이미 충족되었고 상환의무는 없다. (주)남부가 정부보조금을 이연수익으로 처리하는 경우 20×3년 12월 31일 재무상태표에 보고할 정부보조금과 관련된 이연수익은?

① ₩120,000 ② ₩220,000 ③ ₩240,000
④ ₩360,000 ⑤ ₩440,000

13. 다음 자료를 이용하여 계산한 현금및현금성자산은?

보관중인 현금	₩100	받을어음	₩400
요구불예금	200	선급금	500
자기앞수표	600	우편환증서	300

① ₩100 ② ₩300 ③ ₩700
④ ₩900 ⑤ ₩1,200

14. 다음 자료를 이용하여 계산한 (주)한국의 20×1년 매출액순이익률은?

자산총액	₩900억
자기자본순이익률 (당기순이익/자본)	15%
총자산회전율	0.5회
부채비율(부채/자본)	200%
・기초자산과 기말자산 금액은 동일 ・기초자본과 기말자본 금액은 동일	

① 2% ② 4% ③ 6% ④ 8% ⑤ 10%

15. (주)서울은 20×1년 12월 1일에 창고의 화재로 인하여 재고자산 전부와 회계장부의 일부가 소실되었다. 기초재고자산 ₩360,000, 당기순매입액 ₩900,000, 당기순매출액 ₩1,200,000 이고, 과거 3년간 평균매출총이익률이 30%라면 화재 직전 창고에 남아 있었던 재고자산은?

① ₩370,000 ② ₩378,000 ③ ₩420,000
④ ₩470,000 ⑤ ₩490,000

16. (주)한국은 매년 말 모든 자산에 대하여 손상검사를 실시하고 있으며, 20×1년 말 실시한 손상검사로 영업권 손상차손 ₩5,000, 토지 손상차손 ₩20,000, 기계장치 손상차손 ₩20,000이 발생하였다. 20×1년 초 토지에 대한 재평가잉여금이 ₩30,000일 때, 손상차손 회계처리가 20×1년 포괄손익계산서의 당기순이익과 총포괄이익에 미치는 영향은?

① 당기순이익 ₩ 5,000감소, 총포괄이익 ₩ 5,000감소
② 당기순이익 ₩25,000감소, 총포괄이익 ₩20,000감소
③ 당기순이익 ₩25,000감소, 총포괄이익 ₩45,000감소
④ 당기순이익 ₩45,000감소, 총포괄이익 ₩25,000감소
⑤ 당기순이익 ₩45,000감소, 총포괄이익 ₩45,000감소

17. 충당부채, 우발부채 및 우발자산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① 소송이 진행중인 경우는 보고기간 말에 현재의무가 존재하지 아니할 가능성이 높더라도 경제적 효익이 내재된 자원의 유출가능성이 아주 낮지 않는 한 충당부채로 공시한다.
② 우발부채는 경제적 효익이 내재된 자원의 유출을 초래할 현재의무가 있는지의 여부가 아직 확인되지 아니한 잠재적 의무이다.
③ 충당부채는 현재의무이고 이를 이행하기 위하여 경제적 효익이 내재된 자원이 유출될 가능성이 높고 당해 금액을 신뢰성 있게 추정할 수 있으므로 부채로 인식한다.
④ 충당부채로 인식하는 금액은 현재의무를 보고기간 말에 이행하기 위하여 소요되는 지출에 대한 최선의 추정치이어야 한다.
⑤ 미래에 전혀 실현되지 아니할 수도 있는 수익을 인식하는 결과를 초래할 수 있기 때문에 우발자산은 재무제표에 인식하지 아니한다.

18. (주)서울은 20×1년 중에 ₩10,100을 지급하고 지분상품을 취득하였는데, 지급액 중 ₩100은 매매수수료이다. 20×1년 말 현재 지분상품의 공정가치는 ₩11,000이며, (주)서울은 20×2년 초에 지분상품 전체를 ₩11,200에 처분하였다. (주)서울이 이 지분상품을 단기매매금융자산으로 인식할 경우, 이에 대한 회계처리가 20×1년과 20×2년 당기순이익에 미치는 영향은?

① 20×1년 ₩100 감소, 20×2년 ₩1,200 증가
② 20×1년 ₩900 증가, 20×2년 ₩200 증가
③ 20×1년 ₩900 증가, 20×2년 ₩900 증가
④ 20×1년 ₩1,000 증가, 20×2년 ₩200 증가
⑤ 20×1년 ₩1,000 증가, 20×2년 ₩1,200 증가

19. (주)서울은 20×1년 1월 1일 ₩1,000,000에 기계장치를 취득하여 사용하기 시작하였다. 기계장치의 내용연수는 5년이고 잔존가치 없이 정액법으로 상각하며 원가모형을 적용한다. (주)서울은 20×2년부터 기계장치에 대해서 재평가모형을 최초 적용하기로 하였다. 또한 내용연수를 재검토한 결과 당초 내용연수를 5년이 아니라 6년으로 재추정하였다. 20×2년 12월 31일 기계장치의 공정가치는 ₩700,000이다. (주)서울이 20×2년에 인식할 기계장치의 감가상각비와 20×2년 12월 31일 재평가잉여금의 잔액은?

① 감가상각비 ₩133,333 재평가잉여금 ₩33,333
② 감가상각비 ₩133,333 재평가잉여금 ₩0
③ 감가상각비 ₩166,667 재평가잉여금 ₩66,667
④ 감가상각비 ₩160,000 재평가잉여금 ₩60,000
⑤ 감가상각비 ₩160,000 재평가잉여금 ₩0

20. 무형자산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① 무형자산은 물리적 실체는 없지만 식별가능한 비화폐성자산을 말하며, 식별가능성은 자산의 분리가능성 여부와 계약상 또는 법적 권리여부에 의해 판단할 수 있다.
② 무형자산으로 분류되기 위해서는, 식별가능해야 하고, 통제하고 있어야 하며, 그로부터 미래경제적 효익이 창출되어야 한다.
③ 광물자원과 관련된 지출은 해당자산이 기술적 실현가능성과 상업화가능성이 있다고 판단되어 개발활동을 시작하면 이 단계부터의 지출을 탐사평가자산이 아닌 개발비로 인식한다.
④ 무형자산이 한정할 수 없는 기간동안 순현금유입을 창출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면 그 무형자산은 비한정내용연수를 가지며, 상각하지 아니한다.
⑤ 무형자산의 공정가치는 합리적인 공정가치측정치의 범위의 편차가 자산가치에 비하여 유의적일 때 신뢰성 있게 측정할 수 있다.

21. (주)한국은 20×6년 초 (주)서울을 매수하기로 하였다. 다음 자료를 이용하여 초과이익을 고려한 (주)한국의 (주)서울에 대한 매수금액은?

· (주)서울의 20×5년 말 자산의 공정가치 합계는 ₩1,500,000이고, 부채의 공정가치 합계는 ₩200,000이다. · 과거 5년간 (주)서울의 당기순이익은 아래와 같으며, 20×3년 당기순이익에는 중단사업이익 ₩200,000이 포함되어 있다. · 20×1년 ₩150,000 · 20×4년 ₩240,000 · 20×2년 ₩100,000 · 20×5년 ₩120,000 · 20×3년 ₩300,000 · 정상이익률은 동일업종의 평균이익률인 10%, (주)한국이 기대하는 투자수익률은 20%이다. · 초과이익은 영구적이라고 가정한다.

① ₩710,000 ② ₩1,100,000 ③ ₩1,148,000
④ ₩1,360,000 ⑤ ₩1,560,000

22. (주)한국은 제품 판매를 촉진하기 위하여 제품을 구입하는 고객에게 판매액 ₩1,000마다 1장씩의 경품권을 교부하고 있으며, 경품권 1장과 현금 ₩100을 가져오는 고객에게 경품용 제품 1개를 제공하고 있다. (주)한국은 경품용 제품을 개당 ₩300에 구입하였으며, 교부한 경품권 중 60%가 회수될 것으로 추정하고 있다. 경품과 관련된 다음 자료를 이용하여 계산한 (주)한국의 20×2년 말 경품부채 잔액은?

· 20×1년 말 경품부채 ₩120,000 · 20×2년 제품 매출액 ₩2,400,000 · 20×2년 중 회수된 경품권 1,000장

① ₩108,000 ② ₩160,000 ③ ₩208,000
④ ₩288,000 ⑤ ₩408,000

23. 20×1년 1월 1일에 (주)한국은 20×1년 12월 31일부터 매년 말 ₩100,000씩 3년간 수취하는 조건으로 상품을 할부판매하였다. 이 상품의 현금판매가격은 ₩257,710으로 취득 당시의 유효이자율 8%를 반영하여 결정된 것이다. 유효이자율법을 적용하여 회계처리하는 경우, 20×1년 12월 31일 판매대금 ₩100,000을 회수할 때 인식하여야 하는 이자수익은? (단, 계산금액은 소수점 첫째자리에서 반올림한다.)

① ₩8,000 ② ₩16,000 ③ ₩20,617
④ ₩22,266 ⑤ ₩24,000

24. (주)한국은 20×1년 사업결합과 관련하여 새로 개점되는 영업점 1개당 보통주 5주를 발행하는 조건에 따라 보통주를 추가로 발행하기로 하였다. (주)한국의 20×1년 1월 1일 유통보통주식수는 1,000주이고, 이 외 유통되고 있는 희석증권 및 우선주는 없다. (주)한국은 20×1년 4월 1일과 10월 1일에 각각 새로운 영업점 1개씩을 개점하였으며, 20×1년 당기순이익은 ₩290,000이다. 20×1년 기본주당순이익은? (단, 계산금액은 소수점 첫째자리에서 반올림한다.)

① ₩278 ② ₩281 ③ ₩287
④ ₩289 ⑤ ₩290

25. 다음 자료를 이용하여 계산한 기말재고액은?

· 기초재고액 ₩10,000 · 3월 8일 상품 ₩60,000 매입 · 11월 3일 원가 ₩45,000(판매가격 ₩60,000)인 상품을 시용판매하기 위하여 고객에게 배송 · 12월 20일 고객으로부터 판매가격 ₩40,000에 해당하는 시송품의 매입의사통지 수취 · 기말 실지재고액 ₩20,000

① ₩20,000 ② ₩29,500 ③ ₩35,000
④ ₩39,500 ⑤ ₩45,500

26. (주)대한은 내용연수가 종료되면 원상복구를 해야 하는 구축물을 20×1년 1월 1일에 취득하였다. 구축물의 취득원가는 ₩4,000,000이고, 감가상각은 정액법(내용연수는 5년, 잔존가치는 ₩200,000)을 사용하기로 하였다. 복구원가와 관련된 예상현금흐름의 현재가치는 ₩376,000(할인율 8%)으로 추정되었다. 복구공사시점인 20×6년 1월 1일에 실제 복구비가 ₩600,000 소요된 경우 복구공사손실은? (단, 계산금액은 소수점 첫째자리에서 반올림한다. 기간말 단일금액의 미래가치계수(5기간, 8%)는 1.4693이다.)

① ₩30,080 ② ₩47,543 ③ ₩150,400
④ ₩224,000 ⑤ ₩552,456

27. (주)서울은 20×1년 1월 1일 유형자산을 ₩600,000에 취득하여 원가모형을 적용하였다. 동 자산의 내용연수는 10년이고, 잔존가치는 없으며 정액법으로 감가상각하였다. 20×2년 12월 31일 동 자산의 회수가능액은 ₩400,000이고, (주)서울은 이에 대한 손상차손을 인식하였다. 20×4년 12월 31일 동 자산의 회수가능액이 ₩470,000으로 회복된 경우 20×4년에 (주)서울이 계상하여야 할 손상차손 환입액은?

① ₩0 ② ₩20,000 ③ ₩60,000
④ ₩70,000 ⑤ ₩80,000

28. (주)강북은 20×1년 1월 1일 건물(매입가격 ₩10,000,000, 매입부대비용 ₩150,000)을 취득하는 과정에서 공채(액면금액 ₩100,000, 이자율 7%, 만기 3년, 매년말 이자지급 조건)를 불가피하게 액면금액에 인수하였다. 공채 취득시점의 (주)강북에 적용될 시장이자율은 10%였고, 건물대금과 공채대금은 모두 현금으로 지급하였다. 취득한 공채는 만기보유금융자산으로 분류되었고, 건물은 정액법으로 감가상각(내용연수 5년, 잔존가치 없음)한다. 이의 회계처리에 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단, 계산금액은 소수점 첫째자리에서 반올림한다. 기간말 단일금액의 현가계수(3기간, 10%)는 0.7513, 정상연금의 현가계수(3기간, 10%)는 2.4868이다.)

① 20×1년 12월 31일 인식할 건물의 감가상각비는 ₩2,030,000이다.
② 20×1년 1월 1일 만기보유금융자산의 장부금액은 ₩93,500이다.
③ 20×1년 12월 31일 인식될 이자수익은 ₩7,000이다.
④ 20×1년 1월 1일 건물의 취득원가는 ₩10,157,462이다.
⑤ 20×1년 12월 31일 만기보유금융자산의 장부금액은 ₩95,000이다.

29. (주)서울은 20×1년 초에 토지를 ₩10,000에 취득하여 사용하기 시작하였다. 20×1년 말과 20×2년 말 현재 동 토지의 공정가치는 각각 ₩11,000과 ₩9,500이다. (주)서울은 매기간 말에 토지를 공정가치로 평가하는 재평가모형을 적용한다. (주)서울의 토지의 회계처리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① 토지재평가가 20×1년과 20×2년 당기손익에 미치는 영향은 없다.
② 20×1년 말과 20×2년 말 재평가잉여금의 잔액은 각각 ₩1,000과 ₩0이다.
③ 만약 (주)서울이 20×2년 초에 동 토지를 모두 처분하였다면, 20×1년 말에 인식한 재평가잉여금은 당기손익으로 재분류할 수 없다.
④ 만약 (주)서울이 20×3년 초에 동 토지를 ₩9,600에 처분하였다면, (주)서울은 처분이익 ₩100을 당기손익으로 인식한다.
⑤ (주)서울의 20×2년 당기손익으로 보고할 토지재평가손실은 ₩500이다.

30. (주)서울은 (주)감평과 협의하여 사용하던 기계장치(취득원가 ₩8,000,000, 감가상각누계액 ₩3,000,000, 공정가치 ₩4,500,000)를 제공하는 조건으로 차량운반구를 취득하였다. 차량운반구의 판매가격은 ₩8,000,000이며, (주)감평은 이 기계장치의 가치를 ₩5,000,000으로 인정하기로 하였으며, (주)서울은 차액 ₩3,000,000을 현금으로 지급하였다. 이 교환거래는 상업적 실질이 있고, 공정가치는 합리적으로 측정한 금액이다. 차량운반구의 취득원가는?

① ₩7,000,000 ② ₩7,500,000 ③ ₩8,000,000
④ ₩8,500,000 ⑤ ₩9,000,000

31. 제조부문 A, B와 보조부문 X, Y의 서비스 제공관계는 다음과 같다.

	보조부문		제조부문		합 계
	X	Y	A	B	
X	–	40단위	20단위	40단위	100단위
Y	80단위	–	60단위	60단위	200단위

X, Y부문의 원가는 각각 ₩160,000, ₩200,000이다. 단계배부법에 의해 X부문을 먼저 배부하는 경우와 Y부문을 먼저 배부하는 경우의 제조부문 A에 배부되는 총보조부문원가의 차이는?

① ₩24,000 ② ₩25,000 ③ ₩26,000
④ ₩27,000 ⑤ ₩28,000

32. 다음은 제품A의 판매가격과 원가구조에 대한 자료이다.

단위당 판매가격		₩ 10,000
고정원가	생산량 20,000단위 미만	5,000,000
	생산량 20,000단위 이상	8,000,000

제품A의 공헌이익률이 10%이고 법인세율이 20%일 때 세후순이익 ₩2,000,000을 달성하기 위한 판매량은?

① 7,000단위 ② 7,500단위
③ 9,000단위 ④ 10,000단위
⑤ 10,500단위

33. (주)한국은 단일제품을 대량으로 생산하고 있다. 직접재료는 공정 초기에 모두 투입되고 가공원가는 공정 중에 균등하게 발생한다. 생산 중에는 공손이 발생하는 데 품질검사를 통과한 수량의 10%에 해당하는 공손수량은 정상공손으로 간주한다. 공손여부는 공정의 50% 완성시의 검사시점에서 파악된다. 다음 자료를 이용하여 계산한 비정상공손수량은? (단, 물량흐름은 선입선출법을 가정한다.)

- 기초재공품수량 2,000단위(완성도 30%)
- 당기착수량 8,000단위
- 당기완성량 7,200단위
- 기말재공품수량 1,500단위(완성도 60%)

① 380단위 ② 430단위 ③ 450단위
④ 520단위 ⑤ 540단위

34. 다음은 개별원가계산제도를 이용하고 있는 (주)한국의 원가계산 자료이다. 제조간접원가는 기본원가(prime costs)를 기준으로 배부한다.

원가항목	작업#1	작업#2	작업#3	합 계
기초재공품	₩2,000	₩4,000	–	₩6,000
직접재료원가	2,800	3,000	₩2,200	8,000
직접노무원가	4,000	5,000	3,000	12,000
제조간접원가	( )	( )	( )	6,000

작업#1과 작업#3는 완성되었고, 작업#2는 미완성되었다. (주)한국이 기말재공품으로 계상할 금액은?

① ₩9,600 ② ₩10,200 ③ ₩12,500
④ ₩13,600 ⑤ ₩14,400

35. (주)한국은 제품A와 제품B를 거래처에 납품하는 업체이다. 제품은 생산과 동시에 전량 납품된다. (주)한국은 합리적인 가격설정목적으로 주요활동을 분석하여 다음과 같은 자료를 수집하였다.

활 동	활동별 제조간접원가	원가동인	총원가 동인 수
제품설계	₩450,000	설계제품 부품수	100단위
생산준비	325,000	준비횟수	650회
생산운영	637,500	기계작업시간	12,750시간
선적준비	80,000	선적횟수	200회
배 달	300,000	배달제품 중량	60,000kg

제품A의 생산량은 1,000단위이고, 제품A의 원가동인이 설계제품 부품수 70단위, 준비횟수 286회, 기계작업시간 3,060시간, 선적횟수 100회, 배달제품 중량 21,000kg일 경우 활동기준원가계산방법을 적용하여 계산한 제품A의 단위당 제조간접원가는?

① ₩525 ② ₩620 ③ ₩682
④ ₩756 ⑤ ₩810

36. (주)한국은 한 종류의 수출용 스웨터를 제조한다. 3년간에 걸친 이 제품과 관련된 원가와 영업상황의 자료는 다음과 같다.

- 단위당 변동제조원가 ₩ 10
- 단위당 변동판매비와관리비 1
- 연간 고정제조원가 300,000
- 연간 고정판매비와관리비 200,000

	20×1년	20×2년	20×3년
기초제품 재고량	–	20,000	10,000
당기생산량	60,000	30,000	50,000
당기판매량	40,000	40,000	40,000
기말제품 재고량	20,000	10,000	20,000

3년간 판매가격의 변동과 원가구조의 변동이 없다는 가정하에서 20×1년 변동원가계산하의 영업이익이 ₩500,000일 경우 20×3년 전부원가계산하의 영업이익은? (단, 원가흐름은 선입선출법을 가정하고, 재공품은 없다.)

① ₩460,000 ② ₩480,000 ③ ₩500,000
④ ₩520,000 ⑤ ₩540,000

37. 화장품을 제조하는 (주)한국의 20×1년 직접재료예산과 관련된 자료를 이용하여 계산한 3분기의 재료구입 예산액은?

- 매출계획 및 재고계획에 따른 각 분기별 화장품 추정생산량

20×1년			
1분기	2분기	3분기	4분기
1,400단위	3,200단위	3,600단위	1,900단위

- 화장품 1단위를 생산하는데 필요한 재료는 15kg이다.
- 분기말 목표재료재고량은 다음 분기 생산량에 필요한 재료의 10%로 한다.
- 재료구입단가는 kg당 ₩2이다.

① ₩102,900 ② ₩103,200 ③ ₩104,100
④ ₩105,300 ⑤ ₩106,400

38. (주)서울은 완제품 생산에 필요한 부품을 자가제조하고 있다. 부품 10,000단위를 제조하는데 소요되는 연간제조원가는 다음과 같다.

직접재료원가	₩600,000
직접노무원가	150,000
변동제조간접원가	50,000
부품생산용설비 감가상각비	120,000
고정제조간접원가배부액	70,000
총 계	₩990,000

(주)서울은 (주)공덕으로부터 단위당 ₩85에 10,000단위의 부품을 공급하겠다는 제의를 받았다. 이 제의를 수락하더라도 부품생산용설비 감가상각비와 고정제조간접원가는 계속 발생한다. (주)서울이 이 제의를 수락할 경우에는 연간 ₩70,000에 설비를 임대할 수 있다. (주)서울이 이 제의를 수락하는 경우 (주)서울의 이익에 미치는 영향은?

① ₩10,000 증가 ② ₩20,000 증가
③ ₩20,000 감소 ④ ₩50,000 감소
⑤ ₩50,000 증가

39. (주)한국은 제품 20,000단위를 판매하고 있다. 제품 단위당 판매가격은 ₩600, 단위당 변동제조원가는 ₩280, 단위당 변동판매비와관리비는 ₩170이다. (주)한국은 (주)구포로부터 단위당 ₩500에 7,000단위의 특별주문을 받았다. 이때 소요되는 추가 판매비와관리비는 총 ₩1,200,000이다. 회사의 최대생산능력은 25,000단위이므로 이 특별주문을 받아들일 경우 기존 판매제품의 수량이 2,000단위 감소할 것이다. 이 특별주문을 수락하는 경우 이익에 미치는 영향은?

① ₩40,000 증가 ② ₩206,000 증가
③ ₩240,000 감소 ④ ₩340,000 증가
⑤ ₩340,000 감소

40. 표준원가시스템을 사용하고 있는 (주)한국의 직접재료원가의 제품단위당 표준사용량은 10kg이고, 표준가격은 kg당 ₩6이다. (주)한국은 6월에 직접재료 40,000kg을 ₩225,000에 구입하여 36,000kg을 사용하였다. (주)한국의 6월 중 제품생산량은 3,000단위이다. 직접재료 가격차이를 구입시점에 분리하는 경우, 6월의 직접재료원가에 대한 가격차이와 능률차이(수량차이)는?

① 가격차이 ₩ 6,000불리, 능률차이 ₩32,000유리
② 가격차이 ₩ 9,000불리, 능률차이 ₩36,000불리
③ 가격차이 ₩15,000유리, 능률차이 ₩36,000불리
④ 가격차이 ₩15,000유리, 능률차이 ₩32,000불리
⑤ 가격차이 ₩ 9,000불리, 능률차이 ₩36,000유리

부동산관계법규

41.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령상 광역도시계획 및 도시기본계획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① 국토해양부장관은 광역도시계획을 수립하려면 미리 공청회를 열어 주민과 관계 전문가 등으로부터 의견을 들어야 하며, 공청회에서 제시된 의견이 타당하다고 인정하면 광역도시계획에 반영하여야 한다.

② 광역계획권이 같은 도의 관할 구역에 속하여 있는 경우 시장 또는 군수가 협의를 거쳐 요청하면 도지사가 단독으로 광역도시계획을 수립할 수 있다.

③ 도시기본계획의 수립권자는 특별시장·광역시장·시장 또는 군수이며, 도시기본계획의 수립기준은 승인권자인 시·도지사가 정한다.

④ 도지사는 시장 또는 군수가 수립한 도시기본계획을 승인하려면 관계 행정기관의 장과 협의한 후 지방도시계획위원회의 심의를 거쳐야 한다.

⑤ 특별시장·광역시장·시장 또는 군수는 5년마다 관할 구역의 도시기본계획에 대하여 그 타당성 여부를 전반적으로 재검토하여 정비하여야 한다.

42.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령상 개발행위허가의 절차 등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① 도시계획사업에 의한 개발행위는 허가를 받을 필요가 없다.

② 허가권자가 개발행위허가에 조건을 붙이려는 때에는 미리 신청한 자의 의견을 들어야 한다.

③ 허가권자는 개발행위허가의 신청에 대하여 특별한 사유가 없으면 15일(심의 또는 협의기간은 제외) 이내에 처분을 하여야 한다.

④ 허가권자가 처분을 할 때에는 허가증을 발급하거나 불허가처분의 사유를 서면으로 신청인에게 알려야 한다.

⑤ 개발밀도관리구역 안에서 개발행위허가 신청을 할 때에는 기반시설의 설치나 그에 필요한 용지의 확보에 관한 계획서를 제출하여야 한다.

43.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령상 용도지역에 관한 설명이다. (　　)에 들어갈 용어가 옳게 연결된 것은?

(　㉠　) : 공동주택 중심의 양호한 주거환경을 보호하기 위하여 필요한 지역
(　㉡　) : 근린지역에서의 일용품 및 서비스의 공급을 위하여 필요한 지역
(　㉢　) : 주로 농업적 생산을 위하여 개발을 유보할 필요가 있는 지역

	㉠	㉡	㉢
①	제2종일반주거지역	근린상업지역	생산녹지지역
②	제2종일반주거지역	근린상업지역	농림지역
③	제2종일반주거지역	일반상업지역	농림지역
④	제2종전용주거지역	근린상업지역	생산녹지지역
⑤	제2종전용주거지역	일반상업지역	생산녹지지역

44.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령상 기반시설과 그 종류의 연결이 옳은 것은?

① 교통시설 : 도로, 궤도, 폐차장

② 공간시설 : 공원, 유원지, 운동장

③ 유통·공급시설 : 수도, 공동구, 하수도

④ 보건위생시설 : 장례식장, 도축장, 종합의료시설

⑤ 방재시설 : 하천, 수질오염방지시설, 저수지

45.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령상 도시관리계획의 내용에 해당하지 않는 것은?

① 수산자원보호구역의 변경에 관한 계획

② 기반시설의 개량에 관한 계획

③ 도시개발사업이나 정비사업에 관한 계획

④ 지구단위계획구역의 변경에 관한 계획

⑤ 자연보전권역의 변경에 관한 계획

46.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령상 지구단위계획의 내용에 해당하지 않는 것은?

① 정비구역에서 용도지역을 일반주거지역에서 일반상업지역으로 변경하는 내용
② 경관지구를 자연경관지구와 시가지경관지구로 세분하는 내용
③ 당해 지구단위계획구역의 지정목적 달성을 위하여 필요한 주차장의 배치와 규모
④ 건축물의 용도제한
⑤ 건축물의 색채

47.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령상 용도지구에 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① 용도지구란 토지의 이용 및 건축물의 용도 등에 대한 용도구역의 제한을 완화하여 적용함으로써 용도구역의 기능을 증진시키기 위하여 도시기본계획으로 결정하는 지역을 말한다.
② 복합개발진흥지구는 주거기능, 공업기능, 유통·물류기능 및 관광·휴양기능 외의 기능을 중심으로 특정한 목적을 위하여 개발·정비할 필요가 있는 지구를 말한다.
③ 집단취락지구는 녹지지역·관리지역·농림지역 또는 자연환경보전지역 안의 취락을 정비하기 위하여 필요한 지구를 말한다.
④ 시·도지사는 지역여건상 필요하면 법에서 정하고 있는 용도지역 또는 용도구역의 행위제한을 완화하는 용도지구를 신설하여 도시관리계획으로 결정할 수 있다.
⑤ 일반미관지구는 중심지미관지구 및 역사문화미관지구 외의 지역으로서 미관을 유지·관리하기 위하여 필요한 지구를 말한다.

48.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령상 허가구역 안에 있는 토지에 대하여 토지거래계약의 허가를 요하지 아니하는 토지의 면적기준으로 옳은 것은? (단, 국토해양부장관이 따로 정하여 공고하는 경우는 고려하지 않음)

① 주거지역 : 200 m^2 이하
② 상업지역 : 220 m^2 이하
③ 공업지역 : 680 m^2 이하
④ 녹지지역 : 120 m^2 이하
⑤ 도시지역 안에서 용도지역의 지정이 없는 구역 : 90 m^2 이하

49.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령상 개발행위허가에 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① 개발행위허가를 할 때에 시장 또는 군수가 「광업법」에 따른 채굴계획의 인가에 관하여 미리 관계 행정기관의 장과 협의한 사항에 대하여는 그 인가를 받은 것으로 본다.
② 시장 또는 군수는 지구단위계획구역으로 지정된 지역에 대하여는 3년 이내의 기간 동안 개발행위허가를 제한할 수 있으며, 개발행위허가의 제한은 그 기간을 연장할 수 없다.
③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하는 공공단체가 시행하는 개발행위에 대하여 시장 또는 군수는 이행보증금을 예치하게 할 수 있다.
④ 지구단위계획을 수립한 지역에서 행하는 개발행위를 허가하려면 지방도시계획위원회의 심의를 거쳐야 한다.
⑤ 개발행위허가를 받은 행정청이 새로 공공시설을 설치한 경우 새로 설치된 공공시설은 그 시설을 관리할 관리청에 유상으로 귀속된다.

50.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령상 토지거래허가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① 허가신청 면적이 그 토지의 이용목적으로 보아 적합하지 않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허가를 받을 수 없다.
② 기존의 농업인이 아닌 자가 농업용 토지를 취득하고자 하는 경우 그가 거주하는 시·군에 소재하는 토지와 거주지로부터 20 km 이내에 소재하는 토지에 한해서 허가를 받을 수 있다.
③ 토지거래계약을 체결하려는 자의 토지이용목적이 도시계획에 맞지 아니한 경우에는 허가를 받을 수 없다.
④ 법률에 따라 토지를 수용할 수 있는 사업을 시행하는 자가 그 사업을 시행하기 위하여 필요한 것인 경우 허가를 받을 수 있다.
⑤ 허가구역을 포함한 지역의 주민을 위한 편익시설로서 관할 시장·군수 또는 구청장이 확인한 시설의 설치에 이용하려는 경우 허가를 받을 수 있다.

51.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령상 토지거래허가구역에 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① 허가구역의 지정권자는 국토해양부장관이지만 특별히 투기가 성행할 우려가 있을 경우에는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도 지정할 수 있다.

② 국토해양부장관이 허가구역을 지정하려면 중앙도시계획위원회의 심의를 거쳐야 한다.

③ 허가구역을 처음으로 지정하고자 할 때에는 미리 시·도지사 및 시장·군수 또는 구청장의 의견을 들어야 한다.

④ 허가구역의 지정은 허가구역의 지정을 공고한 날부터 그 효력이 발생한다.

⑤ 허가구역의 지정에 대해서는 15일 이상 그 사실을 공고하고 공고내용을 15일 이상 일반이 열람할 수 있도록 하여야 한다.

52.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령상 기반시설설치비용에 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① 특별시장·광역시장·시장 또는 군수는 기반시설설치비용을 부과하려면 부과기준시점부터 30일 이내에 납부의무자에게 적용되는 부과기준 및 부과될 기반시설설치비용을 미리 알려야 한다.

② 기존 건축물을 철거하고 신축하는 경우 기존 건축물의 연면적은 고려하지 않고 신축하는 건축물의 연면적만을 고려하여 기반시설설치비용을 부과한다.

③ 납부의무자는 건축허가를 받은 날부터 2개월 이내에 기반시설설치비용을 납부하여야 한다.

④ 기반시설설치비용 중 기반시설을 설치하는 데 필요한 기반시설 표준시설비용에는 해당 구역의 평균 개별공시지가가 반영된다.

⑤ 납부한 기반시설설치비용은 해당 기반시설부담구역에 필요한 기반시설 및 용지를 모두 확보한 후 잔액이 생기면 납부의무자에게 환급된다.

53.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령상 행정청인 도시계획시설사업의 시행자가 사업시행과 관련하여 타인의 토지를 출입하는 경우 등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① 타인의 토지에 출입하려면 출입하려는 날의 3일 전까지 그 토지의 소유자·점유자 또는 관리인에게 그 일시와 장소를 알려야 한다.

② 타인의 토지를 임시통로로 일시사용하려면 그 토지의 소유자·점유자 또는 관리인의 동의를 받아야 한다.

③ 타인의 토지를 재료적치장으로 일시사용하고자 할 때, 그 토지의 소유자·점유자 또는 관리인의 주소가 불분명하여 동의를 받을 수 없는 경우에는 미리 관할 시장 또는 군수의 허가를 받아야 한다.

④ 장애물을 제거하려면 제거하려는 날의 3일 전까지 장애물의 소유자·점유자 또는 관리인에게 알려야 한다.

⑤ 일출 전이나 일몰 후에는 그 토지 점유자의 승낙 없이 택지나 담장 또는 울타리로 둘러싸인 타인의 토지에 출입할 수 없다.

54.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령상 지형도면에 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① 지형도면은 도시관리계획에 대한 주민의견청취 이전에 작성·제공되어야 한다.

② 지적이 표시된 지형도의 데이터베이스가 구축되어 있는 경우에도 이를 사용하여 지형도면을 작성할 수 없다.

③ 도시관리계획 결정의 효력은 원칙적으로 지형도면에 대한 도지사의 승인·고시로 발생한다.

④ 도시지역 외의 지역으로서 해당 토지에 도시계획시설이 결정되지 아니한 경우에는 지적이 표시되지 아니한 축척 5천분의 1 이상의 지형도에 도시관리계획사항을 명시한 도면을 작성할 수 있다.

⑤ 주거지역에서 축척 3천분의 1 이상의 지형도를 사용하여 도시관리계획결정을 고시한 경우에는 지형도면을 따로 작성하지 않을 수 있다.

55.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령상 도시계획 등에 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① 도시계획은 광역도시계획과 도시기본계획으로 구분한다.

② 개발제한구역, 시가화조정구역의 지정 또는 변경에 관한 계획은 도시기본계획으로 결정한다.

③ 도시관리계획을 시행하기 위한 정비사업은 도시계획시설사업에 포함된다.

④ 도시계획시설은 기반시설 중 도시기본계획으로 결정된 시설을 말한다.

⑤ 자동차 및 건설기계검사시설과 그 시설의 기능발휘와 이용을 위하여 필요한 부대시설 및 편익시설은 기반시설에 해당한다.

56.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령상 용도지역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① 도시지역, 관리지역, 농림지역 또는 자연환경보전지역으로 용도가 지정되지 아니한 지역에서 용도지역에서의 행위제한 등에 대하여는 자연환경보전지역에 관한 규정을 적용한다.

② 용도지역이 미세분된 도시지역에서의 행위제한 등에 대하여는 보전녹지지역에 관한 규정을 적용한다.

③ 관리지역에서「농지법」에 따른 농업진흥지역으로 지정·고시된 지역은 생산관리지역으로 결정·고시된 것으로 본다.

④ 용도지역이 미세분된 관리지역에서의 행위제한 등에 대하여는 보전관리지역에 관한 규정을 적용한다.

⑤ 바다인 공유수면의 매립목적이 그 매립구역과 이웃하고 있는 용도지역의 내용과 같으면, 도시관리계획의 입안 및 결정절차 없이 그 매립준공구역은 그 매립의 준공인가일부터 이와 이웃하고 있는 용도지역으로 지정된 것으로 본다.

57. 부동산 가격공시 및 감정평가에 관한 법률의 목적과 관련하여 ( )의 용어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이 법은 토지, (㉠) 등 부동산의 (㉡)을(를) 공시하여 부동산 가격산정의 기준이 되게 하고, 토지·건물·동산 등의 (㉢)에 관한 사항을 정함으로써 이의 적정한 가격형성을 도모하며, 나아가 국토의 효율적인 이용과 국민경제의 발전에 이바지하게 함을 목적으로 한다.

① ㉠에 포함되는 공동주택은 아파트, 연립주택, 다세대주택, 다가구주택으로 구분된다.

② ㉡은 통상적인 시장에서 정상적인 거래가 이루어지는 경우 성립될 가능성이 가장 높다고 인정되는 가격을 말한다.

③ 표준지의 ㉡을 평가함에 있어 건물 그 밖의 정착물이 있는 때에는 당해 정착물이 존재하지 아니하는 것으로 보고 평가하여야 한다.

④ 국토해양부장관이 표준지의 ㉡을 조사·평가하고자 할 때에는 둘 이상의 감정평가업자에게 이를 의뢰하여야 한다.

⑤ ㉢은 토지등의 경제적 가치를 판정하여 그 결과를 가액으로 표시하는 것을 말한다.

58. 부동산 가격공시 및 감정평가에 관한 법령상 감정평가사의 징계사유에 해당하지 않는 것은?

① 자기의 소유토지를 감정평가한 경우

② 국토해양부 소속 공무원의 장부검사를 기피한 경우

③ 구비서류를 거짓으로 작성하는 방법으로 갱신등록을 한 경우

④ 업무가 정지된 자가 등록증을 국토해양부장관에게 반납하지 않은 경우

⑤ 유가증권의 매매업을 직접 영위하는 경우

59. 부동산 가격공시 및 감정평가에 관한 법령상 감정평가업자 또는 감정평가사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① 국토해양부장관은 감정평가사의 자격등록취소처분을 하고자 하는 경우 청문을 실시하여야 한다.

② 감정평가업자는 감정평가서의 원본을 교부일로부터 10년 이상 보존하여야 한다.

③ 파산선고를 받고 복권된 자는 감정평가법인의 대표이사가 될 수 있다.

④ 감정평가업자는 의뢰인에 대한 손해배상책임을 보장하기 위하여 보증보험이나 공제사업에 가입하고, 이를 국토해양부장관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⑤ 부정한 방법으로 감정평가사의 자격을 얻었음을 이유로 그 자격이 취소된 후 3년이 경과되지 아니한 자는 감정평가사가 될 수 없다.

60. 부동산 가격공시 및 감정평가에 관한 법령상 표준지공시지가의 공시에 포함되어야 하는 사항만을 모두 고른 것은?

ㄱ. 지번	ㄴ. 경계	ㄷ. 3.3 m^2당 가격
ㄹ. 도로·교통상황	ㅁ. 주변토지의 이용상황	

① ㄱ, ㄴ, ㄷ　　② ㄱ, ㄷ, ㄹ

③ ㄱ, ㄹ, ㅁ　　④ ㄱ, ㄴ, ㄹ, ㅁ

⑤ ㄴ, ㄷ, ㄹ, ㅁ

61. 부동산 가격공시 및 감정평가에 관한 법령상 주택가격의 공시에 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① 표준주택가격은 국토해양부장관이 중앙부동산평가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조사·평가한 후 공시하여야 한다.
② 신축된 단독주택에 대하여 개별주택가격을 결정·공시할 경우에는 당해 연도의 공시기준일을 기준으로 한다.
③ 165 m^2 미만인 연립주택의 공동주택가격은 국세청장이 결정·고시하여야 한다.
④ 표준주택가격은 국가·지방자치단체 등의 기관이 그 업무와 관련하여 개별주택가격을 산정하는 경우에 그 기준이 된다.
⑤ 개별주택 및 공동주택의 가격은 국가·지방자치단체 등의 기관이 수용방식의 도시계획사업을 시행할 때 보상가격으로 사용된다.

62. 부동산 가격공시 및 감정평가에 관한 법령상 개별공시지가의 결정·공시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공시기준일은 1월 1일로 함)

① 개별공시지가를 결정·공시하지 아니한 표준지에 대하여는 당해 토지의 공시지가를 개별공시지가로 본다.
② 시장·군수 또는 구청장은 조세의 부과대상이 아닌 토지에 대해서는 개별공시지가를 결정·공시하지 아니할 수 있다.
③ 2011년 11월 15일 분할·합병된 토지에 대해서는 2012년 5월 31일까지 개별공시지가를 결정·공시하여야 한다.
④ 2012년 5월 15일 토지의 형질변경으로 지목이 변경된 토지에 대해서는 2012년 7월 1일을 기준일로 하여 개별공시지가를 결정·공시하여야 한다.
⑤ 시장·군수 또는 구청장이 개별공시지가를 결정·공시하기 위하여 개별토지의 가격을 산정한 때에는 토지소유자 등의 의견을 들어야 하나, 미리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과 협의한 경우에는 의견청취를 생략할 수 있다.

63. 부동산 가격공시 및 감정평가에 관한 법령상 표준지공시지가에 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① 국토해양부장관은 표준지에 토지의 사용·수익을 제한하는 권리가 설정되어 있는 때에는 당해 권리를 포함하여 적정가격을 평가하여야 한다.
② 국가가 국유토지를 처분하기 위하여 토지의 가격을 산정하는 경우에 유사한 이용가치를 지닌 표준지공시지가를 적용할 수 없다.
③ 표준지공시지가에 대하여 이의가 있는 자는 서면으로 시장·군수 또는 구청장을 거쳐 국토해양부장관에게 이의를 신청하여야 한다.
④ 국토해양부장관은 표준지공시지가에 대한 이의신청을 받은 날로부터 30일 이내에 이의신청을 심사하여, 그 결과를 신청인에게 서면으로 통지하여야 한다.
⑤ 표준지의 적정가격 조사·평가를 의뢰받은 감정평가업자가 표준지조사평가보고서를 제출하고자 하는 때에는 미리 당해 표준지를 관할하는 시장·군수 또는 구청장의 의견을 들어야 한다.

64. 국토해양부장관은 성실의무 등의 위반을 이유로 A 감정평가법인에 대한 업무정지 6개월의 처분에 갈음하여 과징금을 부과하고자 한다. 이 경우 부동산 가격공시 및 감정평가에 관한 법령상 국토해양부장관이 위반행위와 관련한 제반 사정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부과할 수 있는 과징금의 최저액수는?

① 5천만 원 ② 1억 원
③ 1억 2천 5백만 원 ④ 1억 7천 5백만 원
⑤ 2억 5천만 원

65. 국유재산법령상 국유재산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① 중앙관서의 장이 국유재산의 관리에 관련된 법령을 개정하려면 그 내용에 관하여 총괄청 및 감사원과 협의하여야 한다.
② 총괄청이나 중앙관서의 장은 소유자 없는 부동산을 국유재산으로 취득한다.
③ 확정판결에 의한 경우에는 일반재산에 대하여 사권을 설정할 수 있다.
④ 위법한 재산관리로 사용승인이 철회되어 총괄청에 인계된 행정재산도 그 용도가 폐지되는 것은 아니다.
⑤ 총괄청은 일반재산을 보존용재산으로 전환하여 관리할 수 있다.

66. 국유재산법령상 국유재산의 종류와 범위 등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① 정부기업이 직원의 주거용으로 사용하는 국유재산은 일반재산이다.

② 국유재산을 관리·처분할 경우에는 취득과 처분이 균형을 이루어야 한다.

③ 디자인권은 국유재산의 범위에 포함된다.

④ 국유재산은 행정재산과 일반재산으로 구분되며, 행정재산은 공용재산, 공공용재산, 기업용재산, 보존용재산으로 분류된다.

⑤ 정부기업이 사용하던 궤도차량이 정부기업의 폐지와 함께 포괄적으로 용도폐지된 경우에도 국유재산에 해당한다.

67. 국유재산법령상 일반재산에 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① 일반재산을 개발하는 경우에 공공의 편익성이나 지역발전의 기여도 등은 고려해야 하지만 재정수입의 증대는 고려요소가 아니다.

② 용도를 지정하여 매각하는 일반재산은 그 재산의 매각일로부터 10년 이상 지정된 용도로 활용하여야 한다.

③ 일반재산은 부동산신탁을 취급하는 신탁업자에게 신탁하여 개발하게 해서는 안 된다.

④ 증권이 아닌 일반재산을 공공기관에 처분하는 경우에 예정가격은 두 개의 감정평가법인의 평가액을 산술평균한 금액으로 결정한다.

⑤ 중앙관서의 장이 국가 외의 자가 소유하는 토지에 있는 국가소유의 건물을 그 토지 소유자에게 양여하는 경우에는 총괄청과 협의 없이 양여할 수 있다.

68. 국유재산법령상 행정재산의 사용허가 등에 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① 공유(公有) 또는 사유재산과 교환하여 그 교환받은 재산을 행정재산으로 관리하려는 경우에는 행정재산도 교환하거나 양여할 수 있다.

② 행정재산의 사용허가에 관하여는「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의 규정이 준용되지 않는다.

③ 행정재산을 주거용으로 사용허가할 수 있지만, 수의의 방법으로 할 수는 없다.

④ 5년을 초과하지 아니하는 범위에서 행정재산의 사용허가를 갱신할 수 있지만, 수의의 방법으로 사용허가를 받은 재산에 대하여는 1회에 한하여 갱신할 수 있다.

⑤ 중앙관서의 장이 행정재산을 직접 공용으로 사용하려는 지방자치단체에게 사용허가하는 경우에는 사용료를 면제하여야 한다.

69. 건축법령상 용어의 정의로서 옳지 않은 것은?

① "고층건축물"이란 층수가 30층 이상이거나 높이가 100m 이상인 건축물을 말한다.

② "지하층"이란 건축물의 바닥이 지표면 아래에 있는 층으로서 바닥에서 지표면까지 평균높이가 해당 층 높이의 2분의 1 이상인 것을 말한다.

③ "리모델링"이란 건축물의 노후화를 억제하거나 기능 향상 등을 위하여 대수선하거나 일부 증축하는 행위를 말한다.

④ "건축물의 용도"란 건축물의 종류를 유사한 구조, 이용 목적 및 형태별로 묶어 분류한 것을 말한다.

⑤ "건축주"란 건축물의 건축·대수선·용도변경, 건축설비의 설치 또는 공작물의 축조에 관한 공사를 발주하거나 현장 관리인을 두어 스스로 그 공사를 하는 자를 말한다.

70. 건축법령상 건축허가 및 신고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① 허가권자는 주변의 교육환경을 고려할 때 부적합하다고 인정되는 숙박시설에 대해서는 건축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건축허가를 거부할 수 있다.

② 허가권자는 공사에 착수하였으나 공사의 완료가 불가능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건축허가를 취소할 수 있다.

③ 연면적 200 m^2 미만이고 3층 미만인 건축물의 대수선은 건축신고 사항이다.

④ 건축신고일부터 1년 이내에 공사에 착수하지 아니하면 그 신고의 효력은 없어진다.

⑤ 국토해양부장관은 국토관리를 위하여 특히 필요하다고 인정할 경우 건축허가를 받은 건축물의 착공을 제한할 수 있다.

71. 건축법령상 건축물의 구조 및 재료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① 건축물은 고정하중, 적재하중, 적설하중 등에 대하여 안전한 구조를 가져야 한다.
② 인접 대지경계선으로부터 직선거리 1.5 m에 이웃 주택의 내부가 보이는 창문을 설치하려면 차면시설을 설치하여야 한다.
③ 방화지구 안에서 간판, 광고탑을 건축물의 지붕위에 설치하는 경우 그 높이가 3 m 미만인 경우에는 주요부를 불연재료로 하지 않아도 된다.
④ 바닥면적의 합계가 3천 m^2인 공연장을 지하층에 설치하는 경우에는 각 실에 있는 자가 피난층으로 대피할 수 있도록 천장이 개방된 외부 공간을 설치하여야 한다.
⑤ 건축물의 일부가 문화 및 집회시설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 부분과 다른 부분을 방화구획으로 구획하여야 한다.

72. 건축법령상 건축물의 대지와 도로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① 대지의 배수에 지장이 없는 경우에는 대지가 인접한 도로면보다 낮아도 된다.
② 녹지지역의 건축물은 면적이 200 m^2 이상인 대지에 건축하는 경우에도 조경 등의 조치를 하지 아니할 수 있다.
③ 건축물의 대지는 2 m 이상이 자동차전용도로가 아닌 도로에 접하여야 하지만, 해당 건축물의 출입에 지장이 없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④ 이해관계인이 해외에 거주하여 동의를 받기 곤란한 경우에 허가권자는 건축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이해관계인의 동의 없이 도로의 위치를 지정·공고할 수 있다.
⑤ 건축물은 지표의 위·아래 부분에서 건축선의 수직면을 넘어서는 아니 되며, 도로면으로부터 높이 4.5 m 이하에 있는 창문은 열고 닫을 때 건축선의 수직면을 넘지 않는 구조로 하여야 한다.

73. 측량·수로조사 및 지적에 관한 법령상 지번의 구성 및 부여에 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① 경계점좌표등록부에는 지번을 등록하지 아니 한다.
② 여러 필지로 되어 있는 토지를 등록전환할 경우에는 그 지번부여지역의 최종 본번의 다음 순번부터 본번으로 하여 순차적으로 지번을 부여할 수 있다.
③ 도시개발사업 시행지역의 지번은 그 사업의 준공 이전에 부여하여야 한다.
④ 지번은 북동에서 남서로 순차적으로 부여한다.
⑤ 지적소관청이 지번부여지역 전부의 지번을 변경할 경우에는 국토해양부장관의 승인을 받고, 일부의 지번을 변경할 경우에는 시·도지사나 대도시 시장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74. 측량·수로조사 및 지적에 관한 법령상 지적측량을 하여야 하는 경우에 해당하지 않는 것은? (단, 측량의 필요성은 인정되고 도시개발사업 등의 시행지역이 아님)

① 지적공부를 복구하는 경우
② 토지를 등록전환하는 경우
③ 축척을 변경하는 경우
④ 토지를 합병하는 경우
⑤ 경계점을 지상에 복원하는 경우

75. 측량·수로조사 및 지적에 관한 법령상 지목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① 묘지의 관리를 위한 건축물 부지의 지목은 “대”로 한다.
② 과수류를 집단적으로 재배하는 토지에 접속된 주거용 건축물 부지의 지목은 “대”로 한다.
③ 「주차장법」에 따른 노상주차장 부지의 지목은 “주차장”으로 한다.
④ 제조업을 하고 있는 공장시설물의 부지와 같은 구역에 있는 부속시설물인 의료시설 부지의 지목은 “공장용지”로 한다.
⑤ 자연의 유수가 있을 것으로 예상되는 토지의 지목은 “하천”으로 한다.

76. 측량·수로조사 및 지적에 관한 법령상 개별공시지가와 그 기준일을 등록한 지적공부로 옳게 짝지어진 것은?

① 지적도과 임야도
② 토지대장과 임야대장
③ 토지대장과 대지권등록부
④ 임야대장과 공유지연명부
⑤ 지적도와 경계점좌표등록부

77. 부동산등기법상 등기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① 등기는 법률에 다른 규정이 없는 경우에는 등기권리자와 등기의무자가 공동으로 신청한다.
② 부동산표시의 변경등기는 소유권의 등기명의인이 단독으로 신청한다.
③ 판결에 의한 등기는 승소한 등기권리자 또는 등기의무자가 단독으로 신청한다.
④ 소유권보존등기의 말소등기는 등기명의인이 단독으로 신청한다.
⑤ 등기관이 등기를 마친 경우 그 때부터 등기는 효력을 발생한다.

78. 부동산등기법상 건물의 표시에 관한 등기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① 건물이 멸실된 경우 그 건물 소유권의 등기명의인은 그 사실이 있는 때부터 1개월 이내에 멸실등기를 신청하여야 한다.
② 존재하지 아니하는 건물에 대한 등기가 있을 때에는 그 소유권의 등기명의인은 지체 없이 멸실등기를 신청하여야 한다.
③ 건물의 합병이 있는 경우에 그 건물 소유권의 등기명의인은 그 사실이 있는 때부터 1개월 이내에 변경등기를 신청하여야 한다.
④ 구분건물의 등기기록 중 1동 표제부에 관한 변경등기는 그 구분건물과 같은 1동의 건물에 속하는 다른 구분건물에 대하여는 변경등기로서의 효력이 없다.
⑤ 구분건물로서 그 건물이 속하는 1동 전부가 멸실된 경우에 그 구분건물의 소유권의 등기명의인은 1동의 건물에 속하는 다른 구분건물의 소유권의 등기명의인을 대위하여 1동 전부에 대한 멸실등기를 신청할 수 있다.

79. 부동산등기법상 등기신청의 각하 사유에 해당하지 않는 것은? (단, 신청의 잘못된 부분에 대한 보정은 고려하지 아니함)

① 신청할 권한이 없는 자가 신청한 경우
② 신청정보와 등기원인을 증명하는 정보가 일치하지 아니한 경우
③ 등기에 필요한 첨부정보를 제공하지 아니한 경우
④ 신청정보의 등기권리자의 표시가 등기기록과 일치하지 아니한 경우
⑤ 신청정보의 등기의 목적인 권리의 표시가 등기기록과 일치하지 아니한 경우

80. 부동산등기법상 신탁등기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① 수익자 또는 위탁자는 수탁자를 대위하여 신탁등기를 신청할 수 있다.
② 수탁자가 여러 명인 경우 등기관은 신탁재산이 공유인 뜻을 기록하여야 한다.
③ 신탁등기의 신청은 해당 신탁으로 인한 권리의 이전 또는 보존이나 설정등기의 신청과 동시에 하여야 한다.
④ 신탁을 원인으로 위탁자가 자기 명의의 재산을 수탁자에게 처분하는 경우 신탁등기의 신청은 위탁자를 등기의무자로 하고 수탁자를 등기권리자로 한다.
⑤ 신탁재산에 속한 권리가 소멸된 경우 신탁등기의 말소신청은 신탁된 권리의 말소등기의 신청과 동시에 하여야 한다.